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問題

第20回 國內學術大會 發表論文集

1996. 9. 13

民族統一研究院

序 文

1990년대 이후 세계는 냉전체제의 급속한 붕괴와 경제적 실리를 앞세운 국가간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특히 舊소련의 붕괴와 동구 공산권의 脫理念化 추세는 우리와 같은 분단국의 상태로 남아 있던 독일의 통일을 가능케 하는 역사적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세계사적 조류는 韓半島問題에 있어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의적 환경은 주변국들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국가가 한반도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인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平和的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랄 정도로 개선되었다.

하지만 분단 반세기가 경과한 현시점에서 남북한관계를 바라볼 때, 남북한간에는 여전히 대결과 불신, 긴장과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북한은 또한 停戰協定の 無實化와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면서 남북한 당사자간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脫冷戰時代에서도 한반도만이 예외적 지역으로 남아 있는 현 상황속에서 한반도의 軍事問題와 平和體制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민족통일연구원과 충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는 공동으로 1996년 9월 13일 「탈냉전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문제」라는 주제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보고서는 이번 學術會議에서 발표된 4편의 논문과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 내용을 그대로 수록한 것이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한반도의 군사문제와 평화문제에 대한 관심을 재고하고, 南北韓關係와 統一問題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되기 바란다.

1996年 9月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目 次

기조연설	이병용 · 1
I. 회 의	9
■ 제1분과 한반도의 군사문제와 북한	
1. 韓半島의 核問題와 軍備統制: 한반도 군비통제의 여건 변화를 중심으로	전성훈(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11
2. 북한의 전쟁과 평화: 이론과 실제	양병기(청주대 교수) · 47
■ 제2분과 4자회담과 한반도의 평화체제	
3.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에 관한 南北韓의 立場과 問題點	제성호(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85
4.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김광열(배재대 교수) · 123
II. 종합토론	171
<부록> 회의일정	194

기 조 연 설

-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 -

'90년대에 들어와 세계는 엄청난 軸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반세기에 걸쳐 세계를 지배하던 냉전체제는 급속하게 해체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념간의 대립이 경제적 실리를 앞세운 국가간의 경쟁으로 대체되고 있다. 특히 舊소련의 붕괴와 공산권 제국의 탈이념화 추세는 독일의 통일을 이룩하는 역사적 계기를 만들었다.

오늘날 우리의 외적환경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나아가서 통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변 4強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가 南北간에 직접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랄 만큼 개선되었다.

그러나 눈을 안으로 돌려 볼 때 실제 당사자인 南·北韓간에는 아직도 대결과 불신,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통일문제에 있어서도 쌍방의 기본입장에서 큰 차이를 노정시키고 있는 불행한 상황에 처해 있다.

먼저 통일의 主體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다. 南北은 모두 민족통일이라는 구호아래 통일의 주체를 「民族」이라고 표방하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이 민족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현재 남과 북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산계급 위주의 공산혁명을 추구하는 북한의 계급투쟁 논리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남과 북이 내세우고 있는 통일의 방법은 평화적 통일이라

는 데에는 최소한 서로가 일치하고 있지만, 核의 의혹을 은폐하려는 북한의 태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한반도는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세계의 화약고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최소한 남과 북은 통일의 주체 및 그 추진방법에 있어서 서로가 공통성·보편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南·北韓 각자의 통일방안도 쌍방이 추구하는 목표와 기본입장에 커다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와같은 南北간의 기본적인 입장차이 때문에 분단 이후 처음 열린 총리회담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南·北韓은 그동안 8차례에 걸친 고위급회담을 통해 「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등 7개의 합의문건을 채택·발효시켰으나 이러한 의형적 성과에 대해 우리는 단순히 기본합의서의 발효만으로 통일 이전의 東·西獨과 같이 공존공영시대가 즉각 개막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세계적인 탈냉전, 화해의 추세 속에서 왜 남북관계만이 개선되지 못하고 불신과 대결의 상태가 지속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남전략이 남한적화의 추구라는 원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며, 그 결과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 쌍방은 각기의 절대적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편이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舊소련체제가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되니 우리도 곧 통일이 될 것으로 믿고 있고, 동구라파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나니 북한도 곧 붕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북한의 붕괴 자체가 곧바로 우리와의 흡수통일

이라는 환상적 논리를 개진하면서 국론을 혼란시켜왔다.

더욱이 金日成의 사망으로 지금 내외의 관심은 黨·政·軍 3권을 장악하고 새로 등장하는 金正日체제가 냉전시대와 비교하여 안팎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북한체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또한 금후 남북관계의 전개와 우리의 통일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 등장하는 金正日시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다음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북한의 實體와 북한이 당면한 現實狀況이다.

북한은 지금 외부세계의 急變으로 개방과 개혁의 압력을 받으면서, 동시에 그들 체제유지를 위한 내부단속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적 갈등 속에서 이제껏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삼고 당과 수령 그리고 인민대중이 삼위일체가 된 국가체제와 남북한 분단의 특수상황을 이용한 냉전이데올로기의 강화를 통해 정치·군사적 대결체제를 고취시키면서 그들 체제를 관리해왔다.

과거 다른 사회주의 제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같은 점들은 그동안 북한의 체제관리에는 강점이 되어 왔으나 동시에 그들 체제의 개혁·개방에는 역기능을 해왔기 때문에 변화의 저해요인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촉진요인들도 현재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국제환경, 즉 이념보다는 국제적 합리주의가 지배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와 核투명성을 요구하는 국제공조체제에 대응하는 문제, 파탄직전에 놓여 있는 주민들의 생활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주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변화하는 주민들의 의

식을 통제하고 社會統合을 강화하는 문제 등은 우선 발등에 떨어진 어려운 문제들이다.

그러나 이같은 요인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변화를 金日成의 사명으로 당장 북한으로 부터 기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껏 북한은 외부의 충격이나 壓力을 극도로 제한하여 수용함으로써 그들 주체형 사회주의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응해 왔기 때문에 비록 밑으로부터 실용주의적 사고가 싹트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당의 획일적 통제하에서 주체사상을 부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부의 출현이 단시일 내에 조직적으로 분출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국제적 고립과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中國과 共助關係를 유지하면서 自救策을 마련하는 한편 核카드를 活用한 對美·對西方 접근에 전력을 경주할 것으로 보이나, 이때 強調되어야 할 것은 北韓이 비록 對美·日 관계개선을 한다고 해서 그들 國家에 대해 전면적인 사회·경제적 개방을 추구한다는 것은 아니며, 다만 과거의 적대관계의 완화를 통한 정치적·경제적 이득의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남북대화와 남북관계개선은 그들의 대외정책과 표리관계에 있는 만큼 형식적으로나마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나 기본정책이 변화하지 않는 한 생산적인 결과를 가까운 시일 내에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들 내부단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와의 直交流 확대나 多者間 경제협력방식을 통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응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진다.

문제는 현재와 같은 북한의 이중정책, 즉 선전차원의 평화공세

와 전복차원의 통일전선전술이라는 전략적 二重性이 향후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南北關係가 실제로 統一에 좀 더 접근해 가는 방향으로 조정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의 가능성 여부를 탐색하는 시험단계에 있는 북한은 처음부터 남조선혁명을 그들 체제유지의 기본명분으로 삼아왔고, 오늘의 세습후계를 정당화시키는 기본명분도 「미완성의 혁명」을 대를 이어 완수하자는 점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새로 등장하는 金正日체제가 당분간 金日成을 부정하는 근본적인 정책변화를 단시일내 주도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같은 중대한 시대적 전환점에서 우리 모든 국민은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다시 한번 냉철히 음미하지 않으면 안된다.

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우리가 이룩할 수 있는 통일의 유형은 다음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첫째는 독일과 같이 흡수통일을 하는 것이고, 둘째로 남북이 교류·협력을 통해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하여 협의통일을 이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흡수통일은 북한체제가 붕괴되어야 한다는 조건과 함께 일거에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의 환상일 뿐이다.

이와같이 흡수통일이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으로 남게 되는 민족공동체 형성을 통한 협의통일은 언제쯤 되는 것인가, 그저 기다리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통일을 하려 하는가 라는 근원적인 문제로 되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통일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통일은 民族史의 단절을 막고, 민족의 번영을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7천만 민족성원 모두가 자유와 인권과 행복을 고루 누리면서 사는 고도복지사회를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설정해 놓고 우리가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통일을 가능케 하는 사전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사전대비가 없이는 민족번영을 위한 통일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통일대비 역량축적의 정도와 속도에 따라서 그 시간도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화통일을 위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자명해 진다.

첫째, 경제발전을 지속함으로써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국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력신장은 북한의 무력도발은 물론, 二重的 대남전략의 포기를 유도할 수 있는 물리적 힘의 배양과 더불어 낙후된 북한의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국력의 배양을 의미한다.

둘째, 정치적 안정과 민주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정치적 안정과 민주발전이 사회안정의 조건이자 국력신장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한체제와 비교해서 우리체제의 비교우위가 월등하게 높아질 때 비로소 대화·교류·협력에 임하는 북한의 자세도 근본적으로 바뀌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주변국과의 협력강화를 들 수 있다. 통일은 우리민족 내부문제임과 동시에 국제문제이며, 주변국과의 이해가 교차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7천만 민족성원 전체의 자유의사에 의한 민주적인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통일방안의 지지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외교적인 노력을 한층 강화

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통일논의에 대한 국론통일을 기해야 한다. 우리의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한 북한은 대남전북 차원의 통일전선 정책을 계속할 것이며, 남북간에는 선전적 차원의 공허한 설전만이 계속될 따름이다.

이상과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의 통일은 미래의 시간 속에서 새로운 민족사를 창조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국제관계와利害속에서, 더구나 異質化된 민족을 하나의 체제로 묶어내는 통일은 안정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공통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달성될 수 없는 목표이다. 준비 없는 조기통일론과 근거 없는 통일낙관론을 경계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민족에 재앙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1996. 9. 13

民族統一研究院
院長 李秉龍

빈 면

I. 회 의

빈 면

韓半島의 核問題와 軍備統制

- 한반도 군비통제의 여건 변화를 중심으로 -

전 성 훈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目 次 >

- I. 서론
- II. 남북한 군비통제협상
 - 1. 재래식 군비통제협상과 남북한의 입장 비교
 - 2.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협상
- III. 한반도 군비통제의 여건 변화분석
 - 1. 기본합의문 타결과 북·미관계 진전
 - 2. 한·미의 4자회담 제의
 - 3. 남북한 CD 동시 가입
- IV. 한반도 군비통제정책의 기본방향
 - 1. 군비통제의 정책목표와 기본원칙
 - 2. 군비통제의 기본 추진방향
- V. 결론

I. 서론

남북한은 1991년 12월 10~1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한 기본합의서를 채택

하였다. 남북한은 기본합의서의 불가침부문에서 한반도 군비통제 추진을 위한 기본틀에 합의하였으며 이후 남북군사분과위원회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래식 군비통제문제를 논의하였다. 한편 핵군축조약인 비핵화 공동선언에 의거하여 1992년 3월 19일 창설된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상호사찰 협상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1992년 말부터 영변 소재 2곳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 요구로 북한 핵문제가 악화되면서 두 회담 모두 중단되었다.

남북대화가 중단된 이래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그동안 한반도 군비통제의 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첫째,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된 북한과 미국간의 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이 1994년 10월 21일 기본합의문을 타결하였고 이를 계기로 양국관계가 진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북·미 관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에 진전이 없자 한국과 미국이 1996년 4월 16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4자회담을 제의하였다. 셋째, 남북한이 1996년 6월 17일 「제네바 군축회의」(CD)에 동시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적인 군축협상 무대에서 마주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의 변화가 한반도의 군비통제협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남북한 군비통제협상에 대비한 한국의 대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심으로 그동안 추진된 남북한 군비통제협상의 추진경과를 살펴

보고 군비통제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을 먼저 비교·검토하겠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상황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들이 한반도 군비통제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군비통제정책의 기본방향을 한국이 군비통제에 임하면서 설정해야 할 정책목표와 기본원칙 그리고 군비통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수립해야 할 기본방향으로 나누어 제시하겠다.

II. 남북한 군비통제협상

1. 재래식 군비통제협상과 남북한의 입장 비교

가. 재래식 군비통제협상 추진경과

남북한이 군비통제를 주제로 본격적인 협상을 벌이게 된 것은 1990년 9월 4~7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부터이다. 북한은 제1차 고위급회담에서 이미 발표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과 같은 내용을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하였다.¹⁾ 반면에 한국은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한 후 모든 폭력행위의 포기를 포함하는 불가침을 약속한 기초 위에서 본격적인 군비감축을 추진한다는

1) 북한은 연형묵 총리가 발표한 기초연설문에서 6개항의 정치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5개항의 불가침선언 구성요소를 별도로 제시하였다.

단계적 방안을 제의하였다.

남북한은 일련의 협상을 거쳐²⁾ 1991년 12월 10~13일 개최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에 서명하였다. 군비통제와 관련, 남북한은 기본합의서의 남북불가침 부문에서 향후 한반도 군비통제추진을 위한 기본윤곽에 합의하였다. 불가침부문은 6개조로 구성되어 있는 데 무력불사용(제9조), 분쟁의 평화적 해결(제10조), 불가침 경계선 설정(제11조),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제12조),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제13조), 남북군사분과위원회 구성(제14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남북한은 기본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

2)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1990. 10. 16~19)에서 한국은 쌍방 모두의 성의 있는 신뢰구축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상호불신과 적대감이 팽배하고 군사적 충돌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군사력부터 감축해야 신뢰가 구축된다는 북한측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동 회담에서 북한은 7개조로 구성된 「북남 불가침에 관한 선언」을, 한국은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제의하였다.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1990. 12. 11~14)에서 한국은 남북한 불가침은 확고한 보장장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제1차 고위급회담시 제의한 군사적 신뢰구축방안을 기본으로 한 불가침보장장치가 포함된 「남북불가침에 관한 방안」을 제의하였고, 북한은 불가침 보장장치의 필요성을 거부하면서 「북남 불가침과 화해·협력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자고 제의하였다.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1991. 10. 22~25)에서 남북한은 단일문건의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다는 데 합의하였으나 불가침 및 군축과 관련한 양측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 한편 노태우 대통령은 1991년 9월 24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① 군사연습과 부대이동의 사전통보, ② 상주감시요원 교환, ③ 군인사 교류, ④ 군부대간 직접통신망 설치, ⑤ 주요 무기와 병력을 북한은 군사분계선 50km 이북으로, 한국은 10km 이남으로 철수할 것을 제의하였다. *FBIS-EAS, September 25, 1991.*

성하여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개항을 협의·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1.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2.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3. 군인사 교류와 정보교환문제
4.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5. 검증문제

이 밖에도 한국은 북한이 주장해 온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의 동시 실현은 수용하지 않았으나 북한이 반대한 군사훈련참관과 상주감시체제의 교환·운영 문제를 추후 논의하기로 양보하였으며, 북한도 구체적인 불가침 보장조치를 협의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1992. 2. 18~21)에서 남북한은 기본합의서와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발표시켰다. 이에 따라 남북군사분과위원회가 1992년 3월 13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정식 가동되었다. 또한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1992. 5. 5~8)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발표되어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1992년 5월 18일 발족하였다.

남북한은 1992년 9월 5일까지 8차례의 군사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불가침부속합의서 작성문제를 협의하였다. 북한은 군사분과위원회에서 구체적 사업의 실천보다는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

및 평화문제와 관련된 일반적 문제를 논의하고 불가침분야의 단일부속합의서를 작성하며 이행·실천문제는 군사공동위원회의 소관으로 넘길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은 「당사자 해결원칙」³⁾, 「부문간 균형추진원칙」⁴⁾, 「실천성 보장원칙」⁵⁾ 등에 입각하여 협상을 진행하면서 시범사업으로 우선 군사직통전화 설치문제를 협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남북한은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1992. 9. 15~18)에서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남북한은 불가침 부속합의서에서 무력불사용(제1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제2장),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의 설정(제3장), 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제4장) 등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해 온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무력증강 금지, 상대방에 대한 정찰 금지, 상대방의 영해·영공 봉쇄 금지 그리고 한국이 주장해 온 서울과 평양지역의 안전보장문제 등 쟁점사항에 합의하지 못하고 이를 추후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8차 고위급회담을 끝으로 군비통제에 대한 남북간의 논의는

-
- 3) 남북한간의 모든 문제는 남과 북이 당사자가 되어 해결해야 한다는 정신이다.
 - 4) 기본합의서의 어떤 특정분야만을 우선시 한다면 다른 분야의 원활한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기본합의서의 모든 분야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균형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문제의 「경중완급」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개별합의, 건별실천」의 정신으로서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어느 한 분야에서 전부를 합의하지 않으면 그 분야의 어느 하나도 실천할 수 없다는 「일괄합의, 동시실천」과 같은 경직된 입장이 아니다.
 - 5) 선언적·추상적 내용보다는 실천방법과 수단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합의사항의 실천성을 최대한 보장하자는 것이다.

중단된 상태이다. 북한 핵문제가 모든 남북대화의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제24차 연례안보협의회(1992. 10. 8~9)에서 전반적인 남북관계 특히 상호사찰에 의미있는 진전이 없을 경우 1993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고 핵통제공동위원회를 제외한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킴으로써⁶⁾ 1992년 11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던 남북군사공동위원회와 12월 21일 개최 예정이던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이 무산되었다. 북한은 또한 1992년 11월 6일 이전으로 예정된 남북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를 거부하였다. 1993년 1월 26일 한·미 양국이 1993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을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하자 북한은 1월 29일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마저 중단시켰다.

나. 재래식 군비통제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비교

그동안 남북한간에 진행된 군비통제협상 과정을 검토해 볼 때, 북한의 군비통제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북한은 무기의 제한이나 통제보다는 병력의 우선 감축을 선호하고 있다. 북한은 언제라도 감축된 병력을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사회체제라는 특성과 한국에 비해 감축된 병력을 신속히 경제활동에 흡수할 수 있다는 특징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

6) 북한 외교부대변인 성명, 「로동신문」, 1992. 10. 13.

로 보인다.

둘째, 북한의 대표적인 군비통제제안으로서 1990년 5월 31일 발표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은 크게 신뢰조성, 무력감축, 외국무력 철수,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 등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나 네번째 단계를 제외하고는 실현순서에 대한 개념이 결여되어 있다.⁷⁾ 또한 북한은 신뢰조성에 대해 언급하고는 있으나 군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셋째, 군축종료 후 최종병력의 상한선을 10만 명으로 설정하고 군축시작후 3~4년 내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매우 급속한 군축을 주장하고 있다.

넷째, 무기를 주요 감축대상으로 설정하지 않고 병력감축에 상응하게 감축할 것을 제의함으로써 군축의 종료단계까지 북한이 무기수에 있어서의 우위를 확보하자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외국군 병력과 장비의 철수주장을 통해 주한미군철수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약화를 기도하고 있다.

여섯째,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은 남북한 협상차원에서 한국이 가지는 취약점, 즉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 외국군의 한국내 주둔과 주한미군의 핵보유 가능성 문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7) 이서항, “南北韓 軍備統制 方案의 比較,” 『國際問題』, 제22권 제7호 (1991), p. 51; 이중 신뢰조성 항목은 1988년 11월 제의한 「포괄적 평화방안」의 군사적 대결상태 완화방안을 보완한 것이지만 이는 중요성의 인정일 뿐, 실시순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외교안보연구원, 「제1차 한반도 평화 및 안보에 관한 회의 참가보고서」, 1990. 7. 3~8, p. 14.

한편 한국의 군비통제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담고 있다.

첫째,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한 토대 위에서 실질적 군비감축을 추진한다는 단계적·점진적 접근방법을 군비통제에 대한 기본 입장으로 견지하고 있다.

둘째, 한국의 군사적 신뢰구축방안은 군인사의 교류, 군사정보의 공개, 군사훈련의 통보 및 참관 등 군사조직의 공개와 군사활동의 투명도 및 예측가능성 증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셋째, 한국의 군축안은 공격능력제거에 초점을 맞추고 군구조를 방어형 전력구조로 개편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방어적 충분성」 개념을 군비통제에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구체적인 군축대상무기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선 상호 동등수준달성, 후 동수균형감축」이라는 군축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군비축소의 전과정에서 남북한의 군사력이 엄격한 상호균형을 유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다섯째, 고도로 잘 훈련된 북한의 예비전력을 의식하여 상비전력감축에 상응하게 예비전력을 함께 감축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여섯째, 합의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검사의 실시와 더불어 공동검증단과 상주감시단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검증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일곱째, 군축 후에 남북한이 보유하게 될 군사력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대신, 남북한이 통일국가의 군사력 소요를 감안하여 쌍방 합의하에 결정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2.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협상

남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에 의거하여 1992년 3월 19일 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상호사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을 시작하였다. 남북한은 1993년 1월 25일까지 13차례의 전체회의와 8차례의 위원접촉 및 2차례의 위원장접촉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찰대상 선정과 사찰방법에 대한 양측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협상타결에 실패하였다.⁸⁾ 북한은 의심동시해소원칙에 의거하여 영변의 원자력 시설만 공개하되 남한의 주한미군기지를 중점적으로 사찰하려는 반면, 한국은 상호주의와 성역없는 사찰 원칙에 의거하여 북한의 군사기지도 사찰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남북한이 사찰대상 선정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였다. 또한 사찰방식에 있어서도 북한이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전면동시사찰을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24시간 사전통보하에 신속히 실시하여 기습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특별사찰방안을 제의하였다.

핵통제공동위원회는 1992년 10월 8일 남북관계 특히 상호사찰에 의미있는 진전이 없는 경우 1993년도 T/S 훈련을 실시한다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다. 그러나 1993년 1월 26일 한-미가 훈련의 실시를 최종 결정하자 북한은 1

8) 상호사찰협상에서의 남북한 입장차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전성훈, “核問題에 대한 北韓의 立場과 韓半島 非核化 展望,” 민족통일연구원, 「제5회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집」(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pp. 14~17 참조.

월 29일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명의의 성명을 통해 T/S 훈련 재개로 남북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동결상태에 빠진 북남 당국 사이의 대화를 굳이 재개할 의사가 없다”⁹⁾고 선언함으로써 핵통제공동위원회마저 중단되었다.

Ⅲ. 한반도 군비통제의 여건 변화 분석

1. 기본합의문 타결과 북-미관계 진전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이후 뉴욕에서 개최된 제1단계 북-미 고위급회담(1993. 6. 2~11)에서 양국은 다음과 같은 원칙들에 합의하였다:¹⁰⁾ ①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의 사용과 사용위협 금지, ② 핵안전협정의 공정한 적용, ③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와 안전 보장, ④ 상대방의 주권 존중, ⑤ 내정 불간섭, ⑥ 한반도의 평화 통일 지지. 제네바에서의 제2단계 고위급회담(1993. 7. 14~19)과 3단계 1차 고위급회담(1994. 8. 5~12)을 거쳐 1994년 9월 23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개최된 3단계 2차 회담에서 양측은 북한 핵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기본합의문(Agreed Framework)에 합의하였다.

기본합의문은 다음과 같이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¹¹⁾ 첫

9) 「로동신문」, 1993. 1. 30.

10) *Joint State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June 11, 1993.

제, 북한의 핵시설 해체와 미국의 대북 경수로 지원 문제를 다룬 제1장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2003년까지 대체에너지와 총 2,000MWe 규모의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이 문제를 다룬 국제 컨소시엄을 설립하여 합의문 서명후 6개월 내에 북한과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합의문 서명후 1개월 내에 5개 핵시설¹²⁾을 동결하고 동결상태에 대한 IAEA의 사찰을 허용하며 이들 시설의 해체를 경수로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완료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5MWe 원자로에서 추출한 폐연료봉은 북한 내에서 재처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둘째, 정치·경제적 관계정상화 문제를 다룬 제2장에서 양국은 합의 후 3개월 내에 무역과 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이후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며 상호 관심사항의 진전에 따라 대사급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셋째, 한반도의 비핵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 문제를 다룬 제3장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불사용을 공식 보장하는 반면에 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을 약속하였다. 넷째, 국제적 핵비확산 문제를 다룬 제4장에서 북한은 NPT에 완전히 복귀하고 IAEA의 안전조치를 수용하며 경수로의 주요 부품이 북한에 반입되기 전에 북한의 과거 핵 의혹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¹³⁾

11) *Agreed Framework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ctober 21, 1994.

12) ① 5MWe 연구용원자로, ② 50MWe 흑연감속로, ③ 200MWe 흑연감속로, ④ 방사화학실험실, ⑤ 핵연료제조공장 등이다.

13) 그러나 북한의 NPT 완전 복귀는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다. 기본합의문

기본합의문에 의거하여 북·미 양국은 정치·경제·군사적 분야에서 대화의 진행중에 있다. 양국은 평양과 워싱턴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실무절차를 논의중에 있다. 이미 미국은 국무부 한국과장을 역임한 리처드슨(Spencer Richardson)을 초대 연락사무소장에 임명하였다.¹⁴⁾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클린턴 행정부의 입장을 감안할 때,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연락사무소가 개설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무부는 1995년 1월 20일 북한에 대한 제1단계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취하고 통신, 금융거래, 북한산 마그네사이트 수입 등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4월 10일 북·미간에 일본을 경유하는 직통전화의 개설되었다.

군사분야의 대화는 유해발굴·송환과 미사일수출금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양국은 1995년 초부터 유해송환을 위한 구체적 협의를 시작한 결과 1996년 1월 12~14일 하와이 미 태평양사령부 산하에 있는 중앙식별연구소(Central Identification Laboratory)에서 제1차 유해송환협상을 개최하였다. 제2차 유해송환협상은 1996년 5월 4~9일 뉴욕에서 개최되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하였다: ① 이미 인도된 162구의 유해에 대해 미국은 북한에 2백만불을 지급함,¹⁵⁾ ② 6월 상반기중 유해공동발굴을 위

제4조 3항에 의거하여 경수로사업의 상당부분 완료시 그리고 경수로 주요 부품의 인도 이전에 가서야 IAEA가 원하는 모든 사찰을 수용하고 NPT에 완전히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14) 「朝鮮日報」, 1996년 8월 21일.

15) 1996년 5월 20일 주한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 움즈(Ashton Ormes) 대령이 판문점에서 북한군판문점대표부 박임수 대좌에게 직접

한 실무협상을 시작하고 연내 공동발굴을 추진함. 이상의 합의를 바탕으로 북·미는 지난 7월 10일부터 평안북도 운산군 일대에서 제1차 유해발굴작업을 실시하였다.

북·미 미사일협상은 1996년 4월 20~21일 베를린에서 개최되었다. 비공개리에 진행된 이번 협상의 내용은 일체 발표되지 않았지만 양측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수출 문제를 보는 기본적 시각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반면에 북한은 자위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평화협정 체결 등 양국간의 관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해결방안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행정부는 북한의 대이란 미사일 수출에 대한 대응으로 무기수출통제법과 MTCR 규정에 따라 5월 26일부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였다. 북한이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강력히 반발함으로써 금년 7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2차 미사일협상은 지연되고 있다.

한편 북한은 북·미 평화협정 체결의 중간단계로 현재의 정전협정을 대신할 잠정협정 체결을 주장하였다.¹⁶⁾ 북한은 잠정협정을 통해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관리하고 남북간의 무력충돌과 돌발사건의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의하였다. 아울러 북·미간의 군사공동기구를 조직·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미국은 제네바 기본합의문을 체결하면서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비롯한 무력을 사용하거나 사용위협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전달하였다. 『朝鮮日報』, 1996년 5월 21일.

16) 외교부대변인 담화, 『조선중앙방송』, 1996년 2월 22일.

이러한 상황에서 비록 외교실무자들이 대표로 참석하고는 있으나 군사분야의 회담이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 북·미 군사당국자간의 직접 접촉과 협상의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한·미의 4자회담 제의

북한은 1994년 4월 28일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북·미 직접협상을 요구한 이래 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해 왔다. 특히 금년들어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이 강화되었다. 북한은 2월 22일 북·미간 잠정협정 체결을 제의하였고 3월 29일에는 인민군 차수 김광진이 비무장지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였다. 4월 4일 북한은 인민군판문점대표부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비무장지대의 유지임무를 포기한다고 선언하였으며 이후 4월 4일부터 7일까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북한군의 무력시위 사태가 발생하였다.

한국은 최근까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정부와의 직접대화를 거부하면서 정전체제 무력화 기도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정부는 북한에 대해 4자회담을 제의하게 되었다. 한·미는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이룩하는 과정을 개시하기 위해 아

무런 조건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한·미·중의 대표들이 만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이 회담에서는 광범위한 긴장완화 조치도 논의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4자회담 제의에 대해 북한과 중국은 아직까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이 제의를 통해 북·미 직접협상을 통해 달성하려던 목표가 완수될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검토중이다” 혹은 “추가설명이 필요하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중국도 한반도 문제는 당사자인 남북한간의 입장차이가 먼저 해소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 일본은 4자회담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면에 러시아는 자국이 배제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으면서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4자회담이 아니라 관련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국제회의가 개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자회담 제의는 회담 목표와 의제가 불투명하고 주요 용어의 개념정의가 불확실하며 참가국들의 권한과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¹⁷⁾ 이러한 제의 내용상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4자회담에 대한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즉 4자회담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거나, 남북관계의 개선없이 북·미관계가 급속히 진전되거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중의 개입을 제도화시키는 결과를

17) Seongwhun Cheon, “The four-party peace meeting proposal: a challenge and an opportunity for Korean peace and & unification,” *Korea and World Affairs*, vol. 20, no. 2, (Summer 1996), pp. 165~183.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4자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과정에서 하나의 도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남한당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4자회담은 남북관계 개선의 좋은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4자회담이 시작되기에 앞서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3자설명회가 먼저 개최될 것이다. 3자설명회의 목적이 4자회담의 취지를 북한측에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3자설명회는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설명회에 중국을 제외한 3자가 모인다는 사실은 4자회담을 주도할 국가가 남북한과 미국이라는 것을 뜻한다. 중국은 4자회담 구도 내에서 협상에 적극 참여하기 보다는 합의된 사항을 추인함으로써 북한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보조적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4자회담의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회담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협의가 심도있게 진행될 것이다. 북한이 4자회담에 성의를 보일 경우, 회담의제와 더불어 협상구도와 절차까지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3자설명회에서 4자회담의 구체적 청사진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자설명회 이후 남북한과 중·미가 참여하는 4자회담이 다음과 같은 구도로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4자회담은 동북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원칙적 차원에서 논의하고 한반도 관련 문제를 남북한과 북·미의 두 협상채널로 이관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4자가 한 테이블에 모여서 해결할

수는 없고, 사안별로 관련 당사국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4자회담은 사안별 협상채널을 가동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합의사항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4자회담이 동북아 관련국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을 광범위하게 다룰 경우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의 토대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4자회담에서는 무력불사용, 국경불가침, 분쟁의 평화적 해결, 내정불간섭 등의 원칙에 합의하고 기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며 경제·과학·기술 분야에서 상호협력 문제를 다룰 수 있다. 4자회담이 이와 같이 참가국들의 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원칙을 천명할 경우, 북한의 체제보장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고 본다.

북·미 협상채널에서는 현재 북·미간에 진행중인 분야별 협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4자회담 구도 내에서 남북한 협상채널이 확보된 마당에 한국이 더 이상 북·미대화에 제동을 걸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정전협정을 대체할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더 이상 강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이미 한국의 반대로 평화협정 체결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평화협정보다 완화된 잠정협정과 군사공동기구 구성을 미국에 제의하였다. 이러한 제의를 하는 북한의 의도는 협정체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된다. 미국도 클린턴 대통령과 레이니 주한대사가 분명히 밝힌 대로 한반도의 정전협정과 관련하여 북·미간 직접대화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미는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피하여 곧바로 관계개선으로 나아가는 경로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과 중국까지 관련된 정전협정 대체문제를 우회하고 제네바 기본합의 문 틀에 의거하여 정치·경제·군사적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관계정상화에 도달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북·미는 연락사무소 개설을 바탕으로 외교관계를 개선하고, 경제제재완화와 대북 투자를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유해발굴·송환협상과 미사일협상을 토대로 군사대화 채널을 개설하여 군사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북·미 군사관계의 발전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 협상채널에서는 남북한이 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사항들에 대한 이행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남북한은 각 분야별 공동위원회 가동문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문제, 남북한 경제협력 활성화 문제, 경수로사업과 원자력 협력 문제, 이산가족 교환방문과 상봉 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다.¹⁸⁾ 또한 김일성 사망으로 중단된 남북정상회담을 재추진하는 문제도 심도있게 협의될 것이다.

3. 남북한 CD 동시 가입

「제네바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 CD)는 1978년

18) 최근 김영삼 대통령은 1996년 8·15 경축사에서 4자회담의 의제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문제,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 및 남북경협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유엔의 「제1차 특별군축회의」(First Special Session on Disarmament)에 참여한 회원국들의 합의에 의해 창설되었다.¹⁹⁾ CD는 현재 운영되는 3개의 국제군축협약기구중²⁰⁾ 하나이지만 유일하게 조약을 협상하고 문안을 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CD는 유엔과는 독립된 기관이나 다음과 같이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첫째, 유엔 사무총장이 CD의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CD의 예산도 유엔의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 둘째, CD는 유엔에서 채택된 결의안을 반영하며 합의된 조약문안을 유엔총회에 상정하여 회원국들이 체결·이행하도록 하는 절차를 밟는다. 셋째, CD는 매년 1회 이상 유엔총회에 활동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CD의 기존 회원국은 5개 핵보유국을 포함하여 모두 37개국이었다.²¹⁾ 1996년 6월 17일 남북한과 CIS 구성국 일부를 포함하여 모두 23개국²²⁾ 신규 가입함으로써 현재 총 회원국수는 60개국

19) CD의 모태는 국제적 차원에서 군축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59년 8월에 발족한 「10개국 군축회의」(Ten-Nation Committee on Disarmament: 1959~60)와 그 후속협약체인 「18개국 군축회의」(Eighteen-Nation Committee on Disarmament: 1962~1969) 및 「군축위원회회의」(Conference of the Committee on Disarmament: 1969~1978)이다. CD는 1983년까지 Committee on Disarmament로 불리었다.

20) 나머지 2개 기구는 「유엔군축위원회」(UN Disarmament Commission: UNDC)와 「유엔총회 제1위원회」(UNGA First Committee)이다.

21) 알제리, 쿠바, 일본, 루마니아, 아르헨티나, 이집트, 케냐, 러시아, 호주, 이디오피아, 멕시코, 스리랑카, 벨기에, 프랑스, 몽고, 스웨덴, 브라질, 독일, 모로코, 영국, 불가리아, 헝가리, 네덜란드, 미국, 미얀마, 인도,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캐나다, 이란, 페루, 자이레, 중국, 이태리, 폴란드 등이다. CD 회의에서 유고슬라비아가 회원국 지위를 상실했다는 합의가 있었으나 승계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간혹 기존 회원국수가 38개국이라는 혼선이 야기되었다.

22)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방글라데시, 북한, 스페인, 벨

에 달한다.²³⁾

CD는 다음과 같은 10개 분야에서 군비경쟁을 종식하고 군축을 실현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창설되었다: ① 핵무기의 모든 분야, ② 화학무기, ③ 기타 대량살상무기, ④ 재래식 무기, ⑤ 국방 예산감축, ⑥ 군사력감축, ⑦ 군축과 발전, ⑧ 군축과 국제안보, ⑨ 신뢰구축 및 검증, ⑩ 완전한 군축실현을 위한 포괄적 계획. 1996년도 회기에 CD는 ① 핵실험 전면금지, ② 핵군비경쟁 종식 및 핵군축, ③ 핵전쟁 방지, ④ 우주에서의 군비경쟁 중지, ⑤ 소극적 안전보장 강화, ⑥ 방사선무기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대량살상무기 금지, ⑦ 포괄적 군축계획, ⑧ 국방력의 투명성 제고 등 8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동안 CD와 그 모태였던 기구들에서 다음과 같은 국제조약이 합의되었다: ① 1963년 「핵실험부분금지조약」(PTBT),²⁴⁾ ② 1968년 「핵비확산조약」(NPT),²⁵⁾ ③ 1971년 「해저의 대량살상무기금지지대화 조약」(Seabed Treaty),²⁶⁾ ④ 1972년 「세균 및 독성무기금지조약」(BTWC),²⁷⁾ ⑤ 1977년 「환경변화기술의 군사적 사용 금지조약」(ENMOD),²⁸⁾ ⑥ 1993년 「화

루로스, 남한, 스위스, 카메룬, 뉴질랜드, 시리아, 칠레, 노르웨이, 터키, 콜롬비아, 세네갈, 우크라이나, 핀란드, 슬로바키아, 베트남, 이라크, 짐바브웨이 등이다.

23) 남한은 1991년 12월, 북한은 1993년 1월 각각 가입을 신청하였다.

24) 남한은 1964년 7월 24일 가입, 북한은 가입하지 않았다.

25) 남한은 1975년 4월 23일, 북한은 1985년 12월 12일 가입하였다.

26) 남한은 1986년 6월 25일 가입, 북한은 가입하지 않았다.

27) 남한은 1987년 6월 25일, 북한은 1987년 3월 13일 가입하였다.

28) 남한은 1986년 12월 2일, 북한은 1984년 11월 8일 가입하였다.

학무기금지협약」(CWC)²⁹⁾.

앞으로 남북한은 CD에서 특히 핵무기와 관련하여 커다란 의견 대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핵무기의 완전 철폐라는 목표하에 핵무기 사용의 불법화를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함으로써 핵무기 사용을 인정하는 미국의 핵정책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안에서 남북한의 입장이 대립될 것이다.

첫째, 핵무기 감축과 관련하여 남한은 핵군축을 원칙적으로 환영하지만 완전한 핵군축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생산 중지, 전면적이고 완전한 핵무기 철폐 및 이의 실현을 위한 시간표 제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기·합선의 영해·영공 통과·방문과 관련하여 남한은 핵무기 탑재 항공기와 합선의 타국 영해·영공에 대한 통과·방문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타국의 영역과 공해, 우주에 대한 핵무기 배치와 통과·방문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셋째, 한반도의 비핵지대화와 관련하여 남한의 기존입장은 한반도 인근에 대한 핵무기 운송수단의 통과·방문이 허용되는 비핵화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한반도 영해·영공에 대한

29) 남한은 1993년 1월 14일 서명했으나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CWC는 65개국이 비준하면 발효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996년 6월 현재 53개국이 비준한 상태이다.

핵무기 운송수단의 통과·방문이 허용되지 않는 철저한 비핵지대화를 주장하고 있다.

넷째, 비핵국에 대한 안전보장과 관련하여 남한은 비핵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조건부 핵불사용 정책과 핵우산 제공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비핵국에 대해 무조건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핵무기 불사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적어도 미국으로부터 북미 기본합의문을 통해 무조건적인 핵불사용·불위협 약속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것이다.

남북한이 유일한 범세계적 군축조약 협상기구인 CD에 동시에 가입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남북한간에 군축 외교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CD의 의제는 국제적인 군비통제 차원의 사안일 뿐 아니라 남북한 군비통제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CD에서의 국제 군축협상은 남북한 군비통제협상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입장은 비동맹중립국을 중심으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상당수 CD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의 입장만을 따를 경우 이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CD를 한국의 대미 종속성을 부각시키기는 선전장으로 활용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다.

IV. 한반도 군비통제정책의 기본방향

1. 군비통제의 정책목표와 기본원칙

가. 정책목표

군비통제의 정책목표는 한국이 북한과의 군비통제협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목표이다. 정책목표의 설정은 군비통제협상의 최종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협상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협상에 대한 국제적·대내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협상이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확실히 규정함으로써 군비통제협상 자체가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여한다.

한국은 남북한 군비통제협상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에 합의함으로써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전쟁발발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을 군비통제의 기본 정책목표로 삼아야 한다. 일부에서 군비통제를 국방력 강화에 위배되는 조치로 보는 시각이 있으나 이는 군비통제개념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다. 군비통제는 북한의 위협을 주어진 변수로 보고 대응군사력을 키우는 군사력 증강정책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군비통제정책은 북한의 위협을 상호 약속을 통해 능동적으로 제거하는 적극적인 정책으로서 국가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국가전략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한국의 군비통제정책은 군비증강정책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외교·안보·통일정

책의 일부분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남북한 군비통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북한의 군사적 능력과 군사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증대하고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한다. 둘째, 남북 상호간의 오해나 오판에 의한 무력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쌍무적 혹은 자체적으로 정치·군사적 위기가 발생할 경우의 군사적 안정성을 제고한다. 셋째,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증강을 상호 자제함으로써 전쟁발발시의 피해를 줄이고 잉여자원을 경제발전과 민족의 복지증진에 이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넷째,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무력대치 수준을 낮추고 상호 불신을 제거함으로써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위한 환경조성에 적극 이바지한다.

나. 기본원칙

군비통제의 기본원칙은 최근에 발생한 한반도 군비통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한 한국의 기본입장이다. 기본원칙은 군비통제정책을 여건 변화에 흔들림이 없이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 한국은 세 가지 상황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북·미 관계진전과 관련하여 북한과 미국의 군사당국자간 직접 접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정립한다. 특히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군사적 문제가 한국의 참여없이 양측간에 논의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유해송환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미군장교가 판문점에서 북한장교를 직접 만난 것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북·미 군사당국자간의 빈번한 접촉은 그 목적이 무엇이든간에 양국의 군사접촉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공식적인 군사회담을 정당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4자회담과 관련하여 남북한 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은 4자회담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이러한 원칙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 기본합의서(제12조)에서 합의한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방안과 북한이 잠정협정을 제의하면서 제기한 사항들은 4자회담이 개최되어도 남북간 협상채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 문제 역시 북·미간의 협상대상이라기 보다는 남북한 군비통제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셋째, CD 동시 가입을 계기로 한국은 CD에서 논의되는 국제적인 군축 현안들에 대하여 기본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사용금지, 국제적인 군축조약의 적극적인 체결·이행, 효과적인 검증제도 확립과 조속하고 실질적인 핵군축이 국제평화에 긴요하다는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한국은 CD를 남북한 관계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 CD에서 북한과 사안별로 협력할 용의를 표명하고 가급적 공동입장을 개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핵군축에 관한 입장대립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CD를 민족의 이익을 위해 국제무대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군비통제의 기본 추진방향

가. 유럽 군비통제경험의 적절한 응용

한반도의 군비통제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많은 군비통제조약을 체결하고 이를 실천해 온 유럽의 경험을 응용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해 왔으며 심지어는 「유럽의 군비통제 모델」(the European arms control model)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그러나 유럽의 군비통제모델을 다른 지역에 적용한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롯펠드(Adam Rotfeld)는 유럽의 군비통제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것을 다른 지역에 적용할 수도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³⁰⁾ 롯펠드는 군비통제 추진과정을 하나의 모델로 볼 수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30) Adam Rotfeld's remarks appeared in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What Lessons Can We Learn from European Experiences?* (Seoul: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1990), p. 69.

모델이란 순수한 「이론적 설명」(theoretical description) 혹은 관련 당사국간 「행위의 유형」(pattern of behaviour)이나 「행동양식의 모방」(copy of a code of conduct)으로 이해될 수 있다.³¹⁾ 그러나 유럽에서 군비통제가 추진되어 온 과정은 지적 사고의 결과물이 아니라 유럽이라는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에 벌어진 구체적 상황에 대응하여 나타난 「반응」(reaction)일 뿐이다.³²⁾ 따라서 유럽의 군비통제를 이론으로 볼 수 없으며 유럽과 시대상황이 다른 지역에 그대로 옮길 수도 없는 것이다. 유럽에서의 군비통제는 유럽 이외의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유형이라기 보다는 군비통제의 추진과정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모델을 이론적 설명이나 행위의 유형중 어느 것으로 해석하건 간에 유럽의 군비통제경험을 모델로 간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룩펠드는 유럽의 군비통제경험을 다른 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그 지역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군비통제과정을 창출해 내기 위한 지적 영감의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유럽에서 실현된 신뢰구축조치와 군비통제방안을 도식적으로 다른 지역의 안보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31) Adam Rotfeld, "Applicability of European arms control model to the Korean Peninsula,"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What Lessons Can We Learn from European Experiences?*, p. 40.

32) Adam Rotfeld's remarks appeared in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What Lessons Can We Learn from European Experiences?*, p. 71.

이와 반대로, 유럽의 경험을 다른 지역에 적용하는 데 있어 보다 긍정적인 견해가 존재한다. 이에 따르면 특정 신뢰구축방안이 특정 지역에 적용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신뢰구축과정 자체가 상당히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상황에서도 적절히 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³³⁾ 즉 국경선의 안전이나 기습공격의 위협과 같은 문제는 그 성격상 매우 일반적인 것이며 역사적·지리적·정치적 배경에 관계없이 여러 나라의 공통적인 안보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유럽의 경험이 상당부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견해는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그 타당성이 입증되고 있다.³⁴⁾ 첫째, 남아시아의 경쟁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공동군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국경지역을 정기적으로 공동순찰하고 있고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도 설치하였다. 둘째, 중동에서는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쌍방의 국경지대에서 미국이 참여하는 공중정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무장 및 배치제한지역을 설정하여 이를 잘 준수하고 있다. 셋째, 중남미 5개국은 정보교환과 상호접촉에서부터 군사활동의 통보와 참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신뢰구축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안보조약을 협의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도 이미 기본합의서와 불가침부속합의서에서 구체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을 협의·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33) Cathleen S. Fisher and Jefferson B. Seabright, *Divided States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the German and Korean Experiences* (Washington, D. C.: The Henry L. Stimson Center, 1992), p. 11; 유럽의 군비통제경험을 한반도에 응용하려고 시도한 많은 학자들이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4) Ibid.

이상의 두 가지 관점을 종합해 볼 때, 유럽의 군비통제경험을 한반도의 상황에 연관짓는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유럽의 군비통제모델을 다른 지역에 적용한다기 보다는 유럽의 군비통제과정에서 얻어진 경험과 교훈을 해당 지역의 현실에 맞게 적절히 응용한다는 것이 보다 적절한 표현이며 이는 타당성과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

나. 한반도의 군비통제 추진방향

유럽의 군비통제모델이 다른 지역의 현실에 도식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사실은 한반도가 유럽의 군비통제과정을 그대로 답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군비통제의 추진순서와 관련하여 「Pre-CBM」 → 「헬싱키협약」 → 「스톡홀름협약」 → 「비엔나협약」 및 「CFE I」이라는 도식을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³⁵⁾ 사실상 한반도에서 유럽의 군비통제 추진순서를

35) 「Pre-CBM」에는 1963년의 「핫-라인조약」(Hot-line Agreement), 1971년의 「핵전쟁위험방지조약」(Accidents Measures Agreement), 1972년의 「해상사고방지조약」(Incidents at Sea Agreement) 등이 포함된다. Cathleen S. Fisher and Jefferson B. Seabright, *Divided States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the German and Korean Experiences*, p. 7; 「Pre-CBM」의 특성은 자발적이며 군사적 중요성이 전무하고 검증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헬싱키협약」은 자발적이며 검증은 가능하지 않으나 군사적 중요성이 존재한다. 반면에 「스톡홀름협약」과 「비엔나협약」은 군사적으로 중요하며 정치적으로 구속력이 있고 적절한 검증방법도 포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나 군비통제를 추진해 나가는 기본방향과 관련하여 「선신뢰구축, 후군축」이라는 입장은 견지되어야 할 것이다.³⁶⁾ 당사자간 신뢰가 전무한 상태에서 기초적인 신뢰구축방안을 실시함으로써 실질적 군축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진적 접근원칙은 관련 당사국들의 역사적·정치적·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물론 「선신뢰구축, 후군축」이라는 군비통제 추진기조가 모든 군사적 신뢰구축방안을 완벽하게 달성한 후에 군축방안을 합의·실천할 수 있다는 경직된 원칙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특정 현안에 대한 합의가 촉진될 수 있고, 관련 국가들간의 별도 합의없이 독자적으로 취해질 군축조치도 있을 것이며, 기존의 다자간 군비통제조약에 함께 가입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북한은 1991년 12월 31일 핵군축조약인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하였으며, 「세균 및 독성무기금지협정」(BTWC)에도 이미 가입한 상태이다. 한국은 또한 1993년 1월 「화학무기금지협정」(CWC)에 서

36) 이와 달리 남북한 군사협상 전문가인 이영호 대령(퇴역)은 한국이 군사적 자신감을 갖게 될 때, 대부분의 CBM을 실천하지 않고서도 군축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불안정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군사적 안정화 방안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1995년 9월 15일 필자와의 의견교환. 국방대학원의 한용섭 교수도 유럽 군비통제경험을 한반도에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남북간에는 군축과 신뢰구축이 동시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용섭, “南北韓 軍事的 信賴構築 및 軍備統制 方案,” 「東北亞 情勢變化와 韓半島 安保」(서울: 국제문제조사연구소, 1995), p. 221 참조.

명하였으며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한반도에서는 군비통제 추진과정에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군사적 신뢰구축방안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되 이 과정에서 실현가능한 군축방안도 함께 합의·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군사적 신뢰구축방안중 배치제한지역을 설정하는 방안보다는 경제·사회적 필요성에 의거하여 일방적으로 현역병력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거나 예비군 병력규모를 축소하는 방안 등이 먼저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한의 경우 대간첩작전용 해안선 철조망을 철거하는 것과 같은 일방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³⁷⁾ 유엔의 결의안에 따라 재래식무기의 수출입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일방적인 신뢰구축조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³⁸⁾

군사적 긴장완화의 초기단계에서는 군사교리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대화를 통해 서로의 국방정책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방정책은 한 국가가 전력을 운용하는 기본지침이 된다. 남북한의 국방정책이 상대방에 의해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된다면 이는 정치·군사적 불안정과 군비경쟁을 유발

37) 한국 국방부는 1991년 9월 11일 해안에 설치된 총연장 1,240km의 대간첩 작전용 해안철조망을 단계적으로 철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국일보」, 1991년 9월 12일.

38) 유엔은 1991년 12월 9일 각국이 7개 재래식무기의 수출입 현황에 대해 자발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결의안」(Resolution 46/36L)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에 따라 1994년 말 현재 남한을 포함한 84개국(북한 제외)이 전차·장갑차·야포·전투기·공격헬기·전함·미사일 및 발사대의 수출입 및 보유 현황을 보고하였다. *BASIC REPORTS*, November 20, 1995, p. 3.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군사적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방정책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함으로써 국방정책에 투영된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1990년대 초 유럽에서 NATO와 WTO간에 개최된 군사교리에 관한 세미나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미나에서는 군사력의 형태와 구조(군조직, 명령체계, 인사제도, 군사시설, 전시대비능력 등), 군사훈련, 국방예산 문제 등에 관해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의견들이 교환되었다.³⁹⁾ 군조직에 대한 토론에서 군사당국자들은 상대방의 군구성과 배치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군사훈련에 관한 토의에서는 대규모 훈련이 갖는 문제점들이 솔직히 논의되었다. 또한 각국의 국방예산이 어떻게 책정·할당되는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세미나 과정에서의 상호정보교환은 군사력의 투명성을 증대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고 군사적 안정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결론적으로 군사교리 세미나는 단순히 각국의 군사정책을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세밀한 수준까지 군사안보문제를 논의하고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중요한 대화의 장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9) Peter Almqvist, "The Vienna military doctrine seminar: flexible response vs. defensive sufficiency," *Arms Control Today*, Vol. 20, No. 3, April 1990, pp. 21~25; Wendy Silverman, "Talking 'Sufficiency' in the Hofburg Palace: the second seminar on military doctrine," *Arms Control Today*, Vol. 21, No. 3, December 1991, pp. 14~17.

군사교리에 대한 의견교환 자체가 갖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한국은 앞으로 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될 경우 성급하게 구체적인 군비통제방안에 대한 합의도출을 시도하기보다 남북한의 전반적인 군사교리에 대한 논의를 통해 쌍방 군사당국자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과정을 먼저 밟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사교리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남북한 군당국자간의 신뢰 구축과 상호 이해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신뢰구축방안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는 「스톡홀름협약」 수준의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남북한의 제안을 살펴보면 이미 군축문제까지도 언급하고 있으나 군비통제의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할 때 「스톡홀름협약」에 제시된 정도의 신뢰구축방안에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와 함께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와 같이 유럽에서 「스톡홀름협약」 이전에 실시된 방안들을 병행해서 합의·실천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남북한은 1990년대 초반 분단 50년사에 있어서 가장 활발했던 대화의 황금기를 맞이하여 군비통제협상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불가침부속합의서가 채택되고 군사분과위원회와 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에도 합의하였다. 핵군축 분야에서는 핵무장을 완전히 포기하는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하였고 상호사찰 협상도 진행하였

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가 악화되면서 남북간의 모든 대화창구가 폐쇄되었다.

남북관계의 진전 조짐이 보이지 않는 현 시점에서 한반도의 군비통제를 논하는 것이 시의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릴지라도 남북대화는 재개될 것이라는 점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멀지 않아 닥쳐 올 일들을 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남북대화가 중단된 이후 발생한 군비통제의 여건 변화를 분석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군비통제정책을 점검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기본합의문 타결로 양국관계가 진전되고 있고 군사당국자간의 공식 채널도 개설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의 4자회담 제의는 조기 성사여부가 불투명하지만 개최될 경우 남북한과 북·미 양자간의 협상채널이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의 CD 동시 가입은 국제적인 군축무대에서 양측이 군축외교전을 펼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군비통제협상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고 전쟁발발 가능성을 감소시키며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을 군비통제의 정책목표로 삼을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한반도 군비통제의 여건변화에 대응한 기본입장도 제시하였다. 정책목표와 기본원칙의 설정은 여건 변화에 흔들림이 없이 군비통제정책을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

군비통제 추진의 기본방향과 관련하여, 유럽의 군비통제경험을

한반도에 도식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지라도 유럽의 경험과 교훈을 역내의 실정에 맞게 적절히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며 또 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밝혔다. 특히 「선진퇴구축, 후군축」이라는 군비통제 추진순서는 현실적인 정책기조로 견지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한 군비통제협상 재개시 처음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서두르기 보다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일정기간 군사교리와 정책에 대한 의견교환을 갖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북한의 전쟁과 평화관

- 이론과 실제 -

梁炳基

(청주대학교)

< 目 次 >

- I. 서론
- II. 전쟁관
- III. 평화 논리
- IV. 실제 전개양상
- V. 결론

I. 서론

한반도는 해방 반세기가 지난 오늘의 시점에도 냉전체제의 유산을 간직한채 지구상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의 하나로 남아 있다. 남북한의 정치구성원들에게 제기된 전쟁과 평화의 문제는, 통일을 실현하여야 할 역사적 과제와 함께 오늘의 한반도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한 현실적 문제이기도 하다.

이 글은 이러한 시각에서 1945년 이후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북한의 전쟁과 평화에 관한 입장의 변화과정을 북한당국의 공식 언명(official statements)내용과 군사제안(military proposals)을 중

심으로 하여 고찰하여 보고자 함이 그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입각하여, 북한의 전쟁·평화 관점과 관련된 북한측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논리를 문헌중심적 내용분석과 역사적 접근법을 통하여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주된 연구범위로는, 전쟁과 평화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이론과 실제 적용의 양상이다. 실제 적용의 양상은, 북한 자체의 국방 노선과 함께 한국과 미국에 대하여 대응하여온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한편 이 글에서는 북한 전쟁·평화관의 변화양상을 대체로 1980년대 중반 이후 공산권의 해체·변혁 시점¹⁾을 기준으로 하여 1985년 이전과 그 이후의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II. 전쟁관

북한의 전쟁관과 평화에 관한 논리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북한측이 표방하고 있는 전쟁 일반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성격 규정과 전쟁불가피론(戰爭不可避論)등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전쟁의 개념정의 및 성격규정

김일성은 1973년에 발간된 북한의 공식문헌에서 “전쟁은 그 본질에 있어서 특별한 폭력수단에 의한 어떤 계급의 정책의 연장”

1) 이러한 시기구분은 1985년 고르바초프(M. Gorbachev)체제가 출범하면서 공산권의 변화와 개혁이 가속화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다.

이며, “일정한 정치적 및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서로 다른 사회 계급 또는 나라들 사이에 벌어지는 조직적인 무장투쟁”²⁾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공식적인 전쟁개념 규정이며, 1981년에 발간된 「현대 조선말 사전」³⁾에서도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 이러한 김일성의 전쟁 개념은,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의 「전쟁론」에서 영향을 받아 전쟁 개념을 규정한 레닌(V. I. Lenin)과 기타 공산주의자들의 견해를 원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

북한의 공식문헌에 의하면,

“전쟁은 계급사회의 산물이며, 계급사회의 소멸과 함께 없어진다. 일정한 계급들의 정치적 및 경제적 이익과 떨어진 전쟁이란 있을 수 없다. 전쟁은 지배계급들이 실시하는 대내외 정책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계급들과 국가들의 정책은 전쟁의 성격과 그 계급적 내용을 규정한다.”⁵⁾

-
- 2) 사회과학출판사편,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744.
 3)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편), 「현대조선말사전: 하」(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 p. 1751.
 4) 레닌은 클라우제비츠가 그의 <전쟁론> 속에서 전쟁을 “다른 수단에 의한 정책의 단순한 영향을 받아 이것을 즐겨 인용하였다. Carl von Clausewitz, *On War*, trans. by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p. 87; 양호민,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戰爭觀,” 「共産圈研究」第1卷 第4號(1979.6), p. 29; 한편 毛擇東도 「레닌」의 규정을 이어받아 “전쟁은 정치의 특수한 수단으로서의 계속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毛擇東, “論持久戰,” 「毛擇東選集」一卷本(北京: 人民出版社, 1969), p. 447.
 5) 사회과학출판사(편), 「정치사전」, p. 744.

라고 하여 전쟁의 성격을 계급사회의 산물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에 의거하여 전쟁의 성격을 계급투쟁의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2. 전쟁의 유형 분류

북한측이 공식규정하고 있는 전쟁의 종류는 크게 나누어, '정의(正義)의 전쟁'과 '부정의(不正義)의 전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북한이 규정하고 있는 전쟁의 종류는, 그 전쟁을 지지하느냐 비난하느냐의, 즉 선한 전쟁이나 악한 전쟁이냐의 기준에 따른 구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양단론리적 구분방법이라고 하겠다.

북한측의 공식문헌에 의하면, 정의의 전쟁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해방전쟁"이며, "반동계급들과 그들의 통치기관을 약화시키거나 소탕하고 피압박인민들을 제국주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사회발전을 촉진"⁶⁾ 시키는 전쟁이라고 본다. 즉 정의의 전쟁을 해방전쟁이나 사회발전을 위한 '계급전쟁'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옛 소련에서 분류하고 있던 정의의 전쟁 개념과 동일한 내용을 갖는 것이다.⁷⁾

북한측은 전쟁의 분류와 관련하여 자신들이 수행하거나 수행할 전쟁은 그 모두를 정의의 전쟁으로 단정 지우려고 한다. 북한의 한 공식문헌은 이같은 북한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6) 사회과학출판사(편), 「정치사전」, p. 744.

7) 정의의 전쟁이란 용어와 정의는 스탈린(J. V. Stalin)시대에 나온 것이라고 한다. 정의의 전쟁에 관한 옛 소련의 공식규정 내용은 P. H. Vigor, *The Soviet View of War, Peace and Neutrality*, p.26 참조.

“우리가 수행하는 전쟁은 그 어떤 경우이거나 모두 정의의 전쟁이다. 그것은 미제의 침략을 물리치고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기반에서 남조선을 해방하며 민족의 자주권을 옹호하기 위한 민족해방전쟁이기 때문이다.”⁸⁾

따라서 북한의 공식전해에 의하면, 그들이 수행하거나 수행할 전쟁은 소위 민족해방전쟁으로서의 정의의 전쟁이므로 모두가 합리화 될 수 있다는 자기중심적 주관주의의 독단논리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북한측은 지난 한국전쟁을 그들이 말하는 “정의의 전쟁의 가장 훌륭한 전형”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금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북한측이 수행하는 전쟁은 “자기조국을 지키며 원수들에게 빼앗긴 땅을 도로 찾는 정의의 전쟁으로 될 것”¹⁰⁾이라고 함으로써 북한이 주도하거나 관련되는 모든 전쟁을 천편일률적인 정의의 전쟁으로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의 전쟁 개념은 1981년에 발간된 「현대 조선말사전」¹¹⁾에서도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

한편 북한은 부정의의 전쟁에 대하여 이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보고 있다. 즉 “세계의 재분할을 위하여 판매시장과 원료공급지와 투자권을 위하여 제국주의자들 사이에 진행되는 전쟁”이

8)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 271.

9) 사회과학출판사(편), 「정치사전」, p. 744.

10)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2), p. 16.

11)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편), 「현대조선말사전: 하」, p. 1751.

그 하나이며, “계급적 해방을 위한 근로대중의 혁명운동을 반대하며 자기의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식민지 및 예속국가 인민들을 반대하는 전쟁”이 그 다른 하나이다.¹²⁾ 이러한 분류방식도 소련과 동일한 것이다. 북한은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정의의 전쟁을 침략전쟁과 동일시하는 가운데 특히 미국이 관련된 전쟁은 모두 이를 「부정의의 전쟁=침략전쟁」으로 단정지우려 한다. 예컨대,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놈들이 하는 전쟁은 남을 먹자고 하는 침략전쟁으로서 부정의의 전쟁”¹³⁾이 된다고 하는 논리가 바로 그것이다.

3. 전쟁불가피론

북한은 옛 공산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잔존하고 있고 또 그를 위한 반제(反帝)투쟁이 필요한 이상 전쟁이란 불가피한 것¹⁴⁾이라고 하는 논리를 전개하여 왔다. 예컨대 김일성은 “제국주의가 남아 있는 한 세계는 결코 평온할 수 없으며 침략과 전쟁은 없어질 수 없습니다”¹⁵⁾라고 하여 제국주의의 존재와 전쟁과의 상관성을 논하고 있다.

12) 사회과학출판사(편), 「정치사전」, p. 744.

13)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5)」, p. 16.

14) 북한의 전쟁관에 영향을 미친 맑스·레닌·스탈린의 전쟁불가피론에 관하여는 P. H. Vigor, *The Soviet View of War, Peace and Neutrality*, pp. 23 ~24 참조.

15)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5)」, p. 185.

북한측의 공식문헌에서는 반제투쟁을 위한 전쟁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합리화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산주의자들은 온갖 戰爭을 무조건 다 반대하지 않는다.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이 자기들의 멸망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반혁명적 폭력에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린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 이런 조건하에서, 피압박 인민들의 해방투쟁은 외래 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국내 착취계급의 반동적 폭력에 대항하는 혁명적 폭력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 계급투쟁이 격화되면 그것이 무장투쟁으로 넘어가는 것은 혁명발전의 법칙이다. 피압박인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제국주의 침략자들에 항거하여 투쟁하는 것은 그들의 빼앗을 수 없는 권리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은 전쟁일반을 반대할 수 없으며 정의의 전쟁은 반드시 지지하고 적극수행해야 한다.”¹⁶⁾

이같은 북한측의 적극적인 전쟁긍정론-전쟁불가피론은 레닌과 스탈린의 전쟁불가피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쟁불가피론은 김정일에게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김정일은 그의 논문¹⁷⁾에서 “제국주의는 전쟁의 항시적 근원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에 해방전쟁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6) 사회과학출판사(편), 「정치사전」, p. 744.

17)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통일원 정보분석실, 「김정일 주요 논문집」 (서울: 통일원, 1993), p. 55.

한편 1956년 제20차 소련 공산당대회에서 흐루시초프는 자본주의 세계와 사회주의 세계와의 평화공존(peaceful coexistence)을 바탕으로 한 전쟁가피론(戰爭可避論)을 주장하였다.¹⁸⁾ 그러나, 북한측은 이와같은 흐루시초프의 전쟁가피론이나 평화공존론을 단호히 정면으로 거부하고, 이를 ‘부르조아 평화주의’ 혹은 ‘수정주의적 사조’라고 하여 비난하여 왔던 것이다.¹⁹⁾

4. 전쟁의 대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전쟁관은 계급투쟁 차원에서의 전쟁불가피론으로 압축되어진다. 즉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 이에따라 전쟁의 발발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북한측의 그 다음 논리가 전개된다.

북한이 그들의 공식문헌을 통해 제기하고 있는 전쟁발발의 경우는 1950년대와 1970년대의 문헌 속에서 각기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 우선 1950년대 기간중 북한측의 문헌자료에 의해 공식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전쟁발발 가능성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²⁰⁾

북한측이 첫째로 들고있는 전쟁발발의 가능성은 미국을 포함한

18) 이기택, “평화공존론에 관한 연구 - 소련외교의 논리와 구조,” 『사회과학 논집 7』, (연세대학교, 1975), pp. 48~49.

19) 북한측이 주장하는 ‘부르조아 평화주의’의 개념에 대하여는 사회과학출판사(편), 『정치사전』, p. 482 참조.

20) 1950년대에 규정된 북한측의 전쟁발발조건에 관해서는,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9)』,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0), pp. 178~179의 『조선인민군 군정간부회의에서 한 김일성의 연설』 (1954. 12. 23) 참조.

소위 제국주의 진영내부의 모순이 심화되어 제국주의와 제국주의 간의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로서, 이로 인해 미국이 한국문제에 간섭할 여유를 갖지 못할 때라고 한다.

둘째로 들 수 있는 가능성은, 소위 미국 자체 내부의 모순이 심화되어 미국의 일반대중들이 지배층을 반대하여 투쟁함에 따라 미국이 한국문제에 관심을 들릴 수 없을 때라고 한다.

셋째로는, 소위 제국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간의 전쟁이 발발하여 미국이 한국문제에 간섭할 여유가 없을 때이다.

넷째로는, 한국 내부에서 반미·반정부 봉기가 일어나 통일할 조건이 성숙될 때라고 한다.

이와는 달리 1970년대의 북한측 공식문헌에 의하면, 전쟁발발의 조건은 조금 달라지고 있다.²¹⁾

첫째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전쟁을 개시하였을 때로서, 이 경우 북한측은 이에대한 반격을 통해 오히려 북한의 주도에 의한 한반도 공산화통일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미국의 세력이 약화되었을 때라고 한다. 여기에는 다시 그 구체적인 조건을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① 첫째는, 미국이 세계적 규모의 큰 전쟁에 관여하게 됨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역량투입이 분산될 경우라고 한다.

② 둘째는, 소위 제국주의 상호간의 모순에 의하여 미국이 전쟁에 휩쓸리게 되는, 즉 서방진영 내부의 분쟁에 미국이 개입케 되

21) 1970년대에 나타난 북한측의 전쟁발발조건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 pp. 267~280 참조.

어 한반도문제에 간여치 못하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

③ 셋째로는, 민족해방투쟁 형식으로서의 반제·반미투쟁에 의하여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위축·약화되는 경우라고 한다.

이같은 미국세력의 약화시와 함께, 끝으로는 한국내의 혁명정세가 성숙되어 결정적 투쟁의 전개와 함께 북한에 대한 지원요구가 있을 경우라고 한다. 북한측은 이러한 때에는 불가피하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며, 전쟁의 방법에 의하여 조국통일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195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북한측이 주장하는 전쟁발발 조건을 보면, 무엇보다도 한반도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세력향배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들고 있는 것이 한국내에서의 친공적 혹은 친북한 정변 발생에 의한 경우이다.

다음으로는 전쟁의 대비와 관련하여 북한측이 주장하고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전쟁대비와 관련한 북한측의 구체적 입장과 요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첫째로 전쟁에 대한 입장으로서, 전쟁을 원하지는 않으나 두려워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② 둘째로는, 전쟁에 대비키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사상적 통일을 강화하고 사상적 우월성으로 적의 기술적 우세를 극복하는 한편 전쟁 공포증을 떨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③ 그리고 셋째로는, 군수공업의 발전과 전시경제체제를 수립하여 전시력량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임의의 전쟁발발상황에 대처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로,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논리는, 1950년대의 한국전쟁 이후 일관해서 나타나고 있는 북한측 전쟁대비의 기본입장이다. 예컨대, “우리는 이미 큰 싸움(한국전쟁을 지칭함)을 겪어 보았기 때문에 어떤 전쟁이든 무섭지 않습니다”²²⁾라든가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 하지는 않습니다”²³⁾라는 김일성의 언명이 곧 그 전형적인 예인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미국과의 전쟁에 의해 예상되어질 수 있는 핵전쟁도 불사하며 두려워 하지 않는다는 논리로까지 진전된다. 이제 이러한 주장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원자탄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지만 조금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미국놈들이 전쟁을 일으키면 한번 해봅시다... 절대로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놈들이 접어들면 전쟁을 하여야 합니다.”²⁴⁾

그렇다면, 미국과의 교전에 의한 핵전쟁 발발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전쟁대응의 입장은 어떠한 구체적 방도에 의한다는 것인가? 그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정치사상의 통일강화에 의한 「사상 무기론」적 입장에서 사상적 우월성으로 상대의 기술적 우위를 극복

22)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9)」, p. 179.

23)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5)」, p. 6.

24)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5)」, pp. 14~15.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주장은 전쟁에 대비하는 북한의 일관된 기본논리로 규정되고 있어서 그들의 공식적 언명속에서 찾아볼수 있다. 정치사상교양이라 하면 북한주민들을 노동계급의 계급의식·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갖는 우월성을 인식시켜 적을 증오하며 높은 계급의 각성을 가지고 적과 싸울수 있게끔 사상적 교양을 시키는 것이라 할수 있다.

김일성은 정치사상적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전쟁준비를 갖추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여 우리사회의 정치사상적 통일을 강화 하는 것”²⁵⁾ 이라고 규정짓고 있다. 한편, 모택동은 그의 중국공산화 과정에서 무기 중심의 「유무기론」을 배척하고 인간의 정신, 즉 혁명의식을 무기보다 더 중시하는 「정신무기론」을 주장한 바 있다. 그것은 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기술·물량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응방안이었다고 할수 있다.²⁶⁾

김일성도 모택동의 주장과 같이, 전쟁수행에 있어서 사상적 우월성에 의하여 기술적 열세의 만회를 극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쟁의 운명은 결코 그 어떤 현대적 무기나 군사기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국주의자들이

25)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6)」,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4), p. 41.

26) 金洪喆, “中共의 軍事-人民戰爭의 基本性格에 關한 研究,” 「中國問題」 第1卷 第1號 (서울: 漢陽大學校 中國問題研究所, 1975), p. 158; 金洪喆, “共產黨의 軍事思想,” 金昌順編, 「北韓軍事論」, (서울: 北韓研究所, 1978), p. 56.

비록 군사기술적 우세를 가지고 있지마는 그 대신 우리 인민군대는 그들에 비하여 정치사상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국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숭고한 사명과 혁명정신, 장병들 사이의 동지적 우애와 자각적 군사규율, 인민들과의 혈연적 관계와 같은 고상한 기풍은 어떠한 제국주의 침략군대도 가질수 없는 우리 인민군대의 특성입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바로 자기의 이와 같은 정치사상적 우월성으로 하여 기술적으로 우세한 적들과 능히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27)

앞서 살펴 본 북한의 전쟁불가피론이 레닌·스탈린의 교리를 수용한 것이라면 전쟁승패 관건으로서 북한측이 사상적 우월성이란 사상무기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모택동의 정신무기론에 영향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전쟁불공론(戰爭不恐論)·정치사상무기론과 함께 북한측은 전쟁대비 방안으로 전시동원체제를 구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이같은 전시동원체제 구축 주장은 김일성의 다음과 같은 언명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전체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있을수 있는 전쟁도발에 대처하여 혁명적 경각성을 더욱 높이고 언제나 동원된 태세에서 자기초소를 굳건히 지켜야 하겠습니까.... 침략자들이 합부로 덤벼든다면 그들을

27)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5)」, p. 47.

일격에 때려부실 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²⁸⁾

이와 같은 전쟁동원태세와 함께 북한측은 현실적인 전쟁대응방안으로서 군수공업의 강화와 전시경제 운용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김일성의 주장 내용 속에서 역시 이같은 논거를 발견할 수 있다.

“전쟁의 승패는 전선과 후방의 인적 및 물적 수요를 장기적으로 원만히 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데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분에서 ...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고 정세의 요구에 맞게 경제를 개편하여 전시에 도 생산을 계속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²⁹⁾

이상에서 살펴본 김일성 생존 시기의 전쟁대비와 관련한 북한측의 구체적인 입장과 요건은, 1980년대의 김정일에 의해서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음을 그의 논문³⁰⁾에서 발견할 수 있다.

28) 위의 책, p. 7.

29) 위의 책, p. 474.

30)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pp. 57~58.

Ⅲ. 평화 논리

전쟁의 대칭개념은 평화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러한 평화라는 개념을 어떻게 규정짓고 있으며 또 그들의 평화논리는 무엇인가? 아래에서는 앞선 말한 바의 전쟁론 일반 및 전쟁불가피론과 병행하여 북한측의 평화이론을 살펴보기론 한다.

1. 평화의 일반적 의미

북한의 경우, 정치적 의미의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평화라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는 자료는 없는 듯하다. 즉 평화라는 용어와 개념은 단지 국어사전류에서만 정의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1962년판 북한의 「조선말사전」에 의하면, 평화란 용어는 “전쟁, 무장충돌 등이 없는 평온한 상태”라고 규정되고 있다.³¹⁾ 그리고 1968년판의 「현대 조선말사전」, 1973년판의 「조선 문화어 사전」과 1981년판의 「현대 조선말 사전」에서도 역시 동일한 정의의 내용으로서 “전쟁, 무장충돌 등이 없는 상태”라고 규정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³²⁾

이는 옛 소련의 평화개념을 수용한 것이다. 「러시아 현대문학사

31) 과학원어문학연구소 사전연구실(편), 「조선말사전」(평양: 과학원출판사, 1962), p. 3711.

32)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편), 「현대 조선말사전」(평양: 사회과학원출판사 어문편집부, 1968), p. 962;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편), 「조선 문화어 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784;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편), 「현대 조선말사전: 하」(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 p. 2225.

전」은 평화를 “인민과 국가간에 있어서 전쟁과 무력충돌의 결여”(absence of war or armed conflict between peoples or states)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³³⁾

서방측에서 사용하는 평화라는 용어와 개념 속에는 번영·친선·협력 등과 같은 적극적 의미가 뒤따르며, 따라서 여기에는 선의가 전제되어 있다.³⁴⁾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평화란 그들 고유의 전쟁관을 전제로 한 ‘전쟁이 없는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즉 세계가 사회주의화 혹은 공산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폭력에 의존하지 않는 기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에 의하면, 자본주의국가에 대해서 평화와 선의를 베푸는 것은 오히려 자본주의국가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되며 결과적으로 공산주의의 최후의 승리를 저해한다고 보는 것이다.³⁵⁾

이와 같이 평화에 대한 북한측의 일반적 의미 규정은 옛 공산주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어사전적 의미를 넘어서지 못하며 또한 그 의미에 있어서도 별다른 중요성의 비중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다.

2. 서방권 평화개념의 비판과 ‘진정한 평화’론

북한에서는 옛 공산주의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방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평화의 개념을 ‘부르조아 평화주의’라는 용어로 규정

33) P. H. Vigor, *The Soviet View of War, Peace and Neutrality*, p. 160.

34) Ibid.

35) 李漢鍾, “Marx-Lenin 主義 戰爭思想과 現代蘇聯의 軍事戰略,” 『蘇聯研究』 第1卷 第1號 (서울: 漢陽大學校 蘇聯問題研究員, 1971), pp. 141~142.

하고 이를 반동적인 사조로 비판하고 있다. 오늘날 서방권에서 통용되는 평화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전쟁의 억제에 중점을 두는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의 개념과 함께 전쟁의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제도화된 평화질서(institutionalized peace)를 추구하는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의 개념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³⁶⁾

그러나, 북한측은 이같은 서방권의 일반적인 평화개념을 “전쟁 일반을 반대하고 무원칙한 평화를 설교하는 부르쥬아사상조류”로서 단정짓고 있다.³⁷⁾ 그 이유는 이같은 서방측의 평화개념, 즉 부르쥬아 평화주의는 “제국주의의 존재 자체가 전쟁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은폐하면서 제국주의를 때려부시지 않아도 지구상에서 영원한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설교”³⁸⁾함으로써 그 자체내에 반동적 본질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서방측의 평화개념이나 이론을 반동적 부르쥬아 평화주의로 단정·비판하고 있는 북한측은 그러면 과연 어떠한 것을 「진정한 평화」라고 보는 것일까? 그들의 공식문헌에 의하면 “오직 평화의 파괴자들을 반대하여 억압자들의 통치를 뒤집어엎어야만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³⁹⁾고 한다. 즉 “지구상에서

36) 李承憲, “南北韓 平和戰略 比較: 그 構想內容과 發展狀況을 中心한 考察,” 「國際政治論叢」 第十八輯(1978), pp. 163~164. 서방권 평화개념이 정착되기까지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그 과정상의 제 이론의 내용에 관하여는 박홍열, “平和의 理論과 平和學의 發展,” 「平和研究」 第II卷 第1號 (서울: 慶熙大學校 國際平和研究所, 1982. 12), pp. 5~9 참조.

37) 사회과학출판사(편), 「정치사전」, p. 482.

38) 위의 책.

39) 위의 책, p. 483.

제국주의를 쓸어버리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화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⁴⁰⁾는 것이다. 이 지구상에서 제국주의의 완전절멸만이 진정한 평화의 달성방안이라고 주장하는 이같은 북한측의 공식입장은 물론 그들의 독자적인 이론은 아니다. 이것 역시 소련의 정치지도자들에게서 이미 주장되어 오던 이론을 북한이 수용하여 그것을 그대로 표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⁴¹⁾ 결국 북한의 평화논리는 그들의 전쟁관의 연속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평화적 공존’에 대한 개념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 하다. 1981년판 「현대조선말사전」⁴²⁾에서는 평화적 공존을 “제국주의 침략을 방지하며…국가간의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는…대외관계의 한 형태”라고 긍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IV. 실제 전개양상

이상에서의 북한측의 전쟁·평화관과 관련하여 아래에서는 공산권 변혁 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에 북한의 전쟁·평화관이 어떠한 내용과 양상을 보이며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한 고찰의 기준으로는, 북한측이 그들의 전쟁·평화관과 관련하

40) 위의 책.

41) 이러한 점에서 그 이론적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구 소련의 평화관과 그 내용에 대하여는 P. H. Vigor, *The Soviet View of war, Peace and Neutrality*, pp. 165~177 참조.

42)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편), 「현대 조선말사전: 하」, p. 2225.

여 채용하고 있는 원칙적인 입장과 그에 따라 현실적 대응의 차원에서 제시하여 온 해방 이후의 각종 군사제안들을 중심으로 구분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1. 공산권 변혁 이전의 전쟁·평화관

가. 원칙적 입장

북한이 해방이후 견지하여온 전쟁·평화관은 전쟁불가피론을 그 기본입장으로 하여 왔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하여는 「무력통일론」을, 그리고 미국에 대하여는 「대미 전쟁필연론(對美 戰爭必然論)」을 그 전쟁·평화관의 구체적인 원칙들로 삼아 왔다고 할 수 있다.

(1) 대미 전쟁필연론

북한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제투쟁을 위한 전쟁불가피론을 전쟁관의 핵심논리로 삼아 왔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전쟁의 현실적인 근원은 어디에서 기인하며 그것을 어떻게 소멸시킬 것인가에 대한 북한측의 주장을 살펴 보기로 한다.

북한의 공식규정에 의하면, 현시점에서 전쟁의 현실적 근원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의 침략적·약탈적 본성에 있다”⁴³⁾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의 근원에 대한 해결 방도는

43) 사회과학출판사(편), 「정치학사전」, pp. 744~745.

오직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를 지구상에서 영원히 쓸어버리기 위한 반제·반미 투쟁을 떠나서는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킬 수 없다”⁴⁴⁾라고 함으로써 미국의 소멸과 자본주의 국가를 반대하는 반제투쟁을 주장하고 있다.

이로 볼 때, 북한의 전쟁관이 전쟁불가피론을 그 논리적 핵심으로 한다면, 그 논리에서 도출되는 전쟁의 대상은 미국을 그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⁵⁾ 즉 미국의 소멸만이 전쟁원인의 궁극적 해소이며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방도라는 논리가 전쟁불가피론과 함께 북한 전쟁·평화관의 주요한 원칙적 입장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2) 대남 무력통일론

북한측에 의하면, 한국내의 미국(미군)을 축출하고 현 한국정부를 타도하려는 남조선혁명은 오직 전인민적 무장투쟁 등과 같은 폭력혁명의 방도에 의해서만이 성취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는 이미 레닌에게서부터 연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레닌이 규정한 폭력혁명의 개념⁴⁶⁾은 내전과 국제전쟁을 막론하고 지배계

44) 위의 책.

45) 이는 북한측이 그들의 남조선혁명론에서 통일의 최대 장애물을 미국으로 보고 「전략」차원에서 투쟁대상을 미국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론」, pp. 102~122.

46) 양호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전쟁관,” p. 29.

급의 타도를 위한 일체의 혁명전쟁을 내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폭력혁명⁴⁷⁾·무장투쟁의 필요성이란 논리의 연장으로서 북한측은 또한 「무력통일론」도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김일성은 한 연설에서

“우리는 군사력을 계속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당은 나라의 통일을 될 수 있는대로 평화적 방법으로 이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화적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하려고 하지만 만약 적들이 무력으로 우리 혁명운동의 전진을 방해할 때에는 물론 우리는 무력으로 조국통일을 해야 합니다”⁴⁸⁾

라고 함으로써 무력통일론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력통일론은 북한 정권 창설 시기에 표명된 민주기지론과 결합되어 1950년대 초반 한국전쟁의 수행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나. 현실적 대응

북한측은 앞서 살펴 본 전쟁·평화관의 기본목표로서의 원칙적

47) 북한측의 공식문헌에 의하면, 남조선혁명의 수행방식은 ‘오직 혁명적 폭력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하여 폭력혁명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론」, pp. 122~126.

48) 중앙정보부(편), 「김일성 군사노선」(서울: 중앙정보부, 1979), p. 257.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에 입각하여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한반도 내에서의 군사문제에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한 양상은 1945년에서 1985년까지의 40년에 걸쳐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하여 제시한 각종 군사제안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대미 군사제안⁴⁹⁾

공산권 변혁 이전 시기에 있어서 북한 당국이 미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주요 군사제안은, 주한미군의 철수와 핵무기의 철거 및 평화협정의 체결을 주장하는 것으로 표명되었다.

북한은 이미 1948년 4월 23일에 남북조선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의 결정서를 통해 ‘조선에서의 외국군대의 즉시 철거’를 주장하였다. 이후 1985년 4월 24일 인민군 창건 53주년 기념 대회에서의 오극렬이 행한 보고속에서 ‘남조선으로부터 미국 군대의 철수’를 주장하기까지 지난 40년간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제안해왔다.

핵무기의 철거와 관련하여서는, 1955년 3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9차 회의 선언문에서 ‘원자·수소무기의 금지’를 주장한 이래 1983년 11월 5일의 북한 외교부 성명에서 표명한 ‘남조선에

49) 이 부분에 관하여는 국토통일원, 「북한의 군사문제 제의 관련자료」(서울: 국토통일원, 1989) 및 박상섭, 「북한의 군축제안」, 정종욱(의), 「한반도의 군축과 평화」, (서울: 국토통일원, 1989), pp. 101~140 참조.

서의 미제의 핵무기 철거'까지 지속된다.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거와 관련하여, 1980년 10월 10일에 있는 당 제6차 대회에서의 김일성의 보고를 통해 '조선반도의 비핵 평화지대(非核 平和地帶) 창설'이라는 제안으로 발전된다. 그 내용은 한반도내에서의 핵무기의 생산·반입·사용을 금지하자는 것이었다.

북한은 1974년 3월 25일 미국 국회에 보내는 최고인민회의의 편지를 통해 북한과 미국간의 '조·미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하였다. 이는 1984년 1월 10일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의 합동으로, 한국전쟁 종결의 법적 공식 선포와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북한과 미국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짐을 볼 수 있다.

(2) 대남 군사제안⁵⁰⁾

다음으로 이 시기에 있어서의 한국을 대상으로 한 군사제안으로는, 감군·군축과 상호불가침 선언의 체결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다.

감군에 관하여는, 1954년 6월 15일 제네바 회담에서 남일 의상이 남북한 군병력을 각각 10만 이하로 축소할 것을 제안한 이후 1980년 당 제6차대회에서 김일성이 남북한 군대를 각각 10~15만 명으로 감축할 것을 계속하여 주장하고 있다.

군축문제에 대해서는, 1955년 3월 11일 최고인민회의의 선언문을

50) 이 부분에 관하여는 각주 49)의 자료 참조.

통해 ‘전반적 군비축소’가 제시된 이후 1984년 9월 10일 3자회담 제의 내용의 편지 속에서 ‘남북한 군비축소’를 주장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1955년 8월 14일 김일성은, 해방 10주년 기념대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남북조선 당국이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을 행사하지 말고 통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내용을 선포하자”고 제의하는데, 이것이 남북한의 불가침 선언 제안으로 발전된다. 1984년 1월 10일에는 중앙인민위·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에서 남북 불가침 선언 채택을 제의하기에 이른다. 연합회의의 제안은 불가침 선언 속에 남북한간의 상호 무력 불행사와 군비축소 문제를 그 내용으로 담자는 것이었다.

2. 공산권 변혁 이후의 전쟁·평화관

공산권 변혁 이후의 정세변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변화는 수용하여 나아가되 사회주의 원칙에 입각한 북한 나름대로의 기존 체제를 고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⁵¹⁾ 아래에서는 공산권의 변혁 이후 북한의 전쟁·평화관에서 나타난 원칙적 입장과 현실적 대응 측면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51) 북한이 공산권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할 것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표명되어 왔다. 예컨대 1989. 12. 22 「로동신문」에 게재된 “제국주의자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사회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와 1991. 5. 27 「로동신문」에 소개한 김정일의 담화문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1991. 5.5) 및 1994. 11. 1 「로동신문」에 게재한 김정일의 논문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등이 그것이다.

가. 원칙적 입장

공산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 특유의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겠다는 북한당국의 공식 입장은 전쟁·평화관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래의 전쟁불가피론을 기본으로 한 원칙적 입장으로서의 대미 전쟁필연론·대남 무력통일론은 명분상의 원칙으로서 그대로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제동요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북한은 김정일 체제 하에서도 상당 기간 종전의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의 전쟁·평화관에서 나타난 현실적 대응양상을 살펴보면, 협상 차원에서의 각종 군사제안과 함께 핵(核)정책을 제시하고 나옴으로써 또다른 변화양상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나. 핵정책 제시 이전 단계의 현실적 대응

공산권 변혁 이후 북한의 전쟁·평화관과 관련한 현실적 대응양상은 이를 다시 핵정책 제시 이전의 단계와 그 이후의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공산권의 변혁이 활성화되던 198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 북한측의 군사적인 대응은 일정한 변화의 조짐·양상을 보였다. 그것은 북한측이 전쟁·평화관과 관련하여 현실적 대응방안이라 할 각종 군사제안을 통해서 타협적인 협상의 자세를 표명하였다는 점이다.

그러한 양상은, 북한측이 핵정책을 가시화하기 이전 단계에서 표명·제시한 몇가지의 정치·군사적 제안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①1988년 11월 7일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정무원 연합회의에서 제시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평화 보장 대책에 대하여’(이하 「포괄적 평화방안」으로 약칭), ②1990년 5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 회의에서 한 김일성의 시정연설 속에서 제시된 ‘조국통일 5개방침’ 중 첫번째의 방침에 따라 1990년 5월 31일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정무원 연합회의에서 제시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이하 「군축제안」으로 약칭), ③1991년 12월 13일의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한 ‘남북 사이의 화해·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합의서」로 약칭)와 1992년 1월 20일에 합의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하 「비핵 공동선언」으로 약칭), ④1993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에서 제기된 ‘남조선에 대한 4가지 요구’(이하 「대남 4개 요구사항」으로 약칭)에서 제시된 북한측의 군사제안 등이 그것이었다.

공산권의 변혁 이후 핵정책을 제시하기 이전 단계의 시기에 북한측의 전쟁·평화관과 관련하여 나타내 보인 현실 대응의 양상은, 공산권 변혁 이전 시기의 북한의 군사제안에서와 같이, 미국에 대하여는 「주한미군·핵무기의 철수」를 주장하고 한국측에 대하여는 「감군·군축 및 불가침선언」의 채택을 제의함으로써 표면상으로는 기본 입장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구

체적인 내용의 측면에서는, 현실성을 띠는 타협적인 협상 태도의 변화양상도 내포하고 있었다.

우선 미국과의 관련 부문에서는, 포괄적 평화방안에서 단계적인 주한미군·핵무기의 철수를 주장하다가 군축제안에서는 주한미군·핵철수의 구체적인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변화된 양상이다. 이는 1990년 4월 4일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1990년~2000년 까지의 주한미군 3단계 감축방안⁵²⁾과 관련하여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의 철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북한측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정부를 협상 당사자로 우선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점도 변화의 요소로서 들 수 있다. 이는 1988년의 포괄적 평화방안에서나 1990년의 군축제안에서 모두 공통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2년의 남북합의서에는 평화체제로의 당사자를 미국만이 아닌 한국측과도 연계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990년의 군축제안에서는, 군축방안을 보다 더 구체화·단계화 하는 가운데 남북한간의 신뢰조성을 군축의 첫 단계로 설정함으로써 한국측의 「선(先)신뢰조성 후(後)군축」주장을 수용·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1991년의 남북합의서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당국이 핵정책을 표방하기 이전인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까지의 기간중 북한측이 보여준 군사제안의 변화는 종전 공산권 변혁 이전에 제시된 원칙적 입장의 고수

52) 남주홍, “미군철수와 남북한 군축, 현안과 과제,” 「신동아」 (1990. 6), p. 468 참조.

로부터 협상적 태도로서의 현실주의적 대응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그들의 전쟁·평화관과 관련한 현실적 대안으로 채택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정세는 또다른 양상과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다. 핵정책 제시 이후 단계의 현실적 대응

북한당국은 1993년의 핵확산 금지조약기구(NPT)에서의 탈퇴를 전후하여 앞서 살펴본 타협적인 군사협상의 입장으로 부터 전면 이탈하고 있다. 대신에 핵무기의 개발 시도에 의거하여 북한체제가 당면한 위기상황을 타개하려는 핵무장 추진정책으로 전환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따라서 다음으로는 북한당국의 핵무기 개발 추진동향과 관련한 미국과 한국에 대한 군사제안의 내용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1) 북한의 핵정책

북한은 1974년 9월 6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하였고 1985년 12월 12일에는 핵확산 금지조약(NPT)을 체결하였다. IAEA의 사찰을 수용하는 핵안전협정의 이행문제에 대하여 북한은 남한에서의 핵무기의 철수·핵무기의 불사용 및 불위협에 대한 법적 보장과 연계시켜 거부해 오다가⁵³⁾ 1992년 1월 30일에 서명하였다.

53) 「한겨레신문」, 1994. 8. 5.

이 핵안전협정에 근거하여 작성·제출된 최초의 보고서에 따라 북한은 14개 핵사찰 대상 시설에 대하여 1992년 5월 부터 1993년 2월 까지 6차에 걸친 사찰을 수검하였다. 그러나,북한은 영변 부근의 2개 핵시설(핵폐기물 또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소로 의심받은 시설)에 대한 IAEA측의 특별사찰 요구에 대하여 이를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북한이 IAEA측의 특별사찰에 대한 최후통첩에 직면하여 NPT 탈퇴선언(1993. 3.12)으로 대응함으로써 북한의 핵문제는 국제문제로 전환되었다.⁵⁴⁾

그 이후 1993년 5월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제825호)이 채택되어 북한에 대한 NPT탈퇴 결정 재고와 IAEA사찰 수용 및 미국과의 접촉 권유가 있게 되면서, 북한·미국 간에 북한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고위급회담이 개최되게 되었다. 북미 고위급회담은 1단계 회담(1993. 6. 2~6. 11 뉴욕)·2단계 회담(1993. 7. 14~7. 19 제네바)·3단계 회담 1차회의(1994. 8. 5~8. 12 제네바)를 거쳐⁵⁵⁾ 3단계 회담 2차회의(1994. 9. 23~10. 21)의 결과로 북한 핵문제에 관한 북한·미국과의 기본합의문에 서명(1994. 10. 21)하기에 이르렀다. 1단계 회담 기간중인 1993년 6월 11일 북한은 NPT탈퇴 유보를 선언하였다.

54) 정영태, 「북한 군사정책의 전개양상과 핵정책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 117, 119~120.

55) 「경향신문」, 1994. 8. 14.

(가) 반핵 평화주의⁵⁶⁾

북한의 핵정책은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를 목적으로한 반핵(反核) 평화주의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을 은폐하기 위한 핵 모호성(模糊性)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북한 핵정책의 2가지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은 한국전쟁의 휴전 이후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도입·배치하였다. 주한미군 2개 보병사단을 핵무장한 5개 전투단으로 개편하였으며, 1958년 1월에는 전술핵탄두 투발용 280mm 원자포와 어네스트 존(지대지 미사일)을 배치하였다. 이후 북한은 지속적으로 남한 내의 「핵무기 기지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게 된다.

이러한 북한의 반핵운동은 비핵지대화론으로 표방되었다. 비핵지대화론의 주장은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에 목적을 둔 것이었다. 비핵지대화론이 최초로 제기된 것은 1976년 8월 12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한국문제 긴급국제회의」에서 였다. 1978년에는 일본 사회당과 동북아 비핵평화지대의 창설에 합의하였고, 1986년 9월에는 제3세계권 국가 80여개국 125개 단체를 초청하여 「한반도 비핵평화지대를 위한 평양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북한의 비핵지대화론은 1991년 9월의 부시(Bush)선언으로 주한미군의 핵철수를 가져왔고, 1991년 12월 31일 발표된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남한의 핵무장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성과를 가져

56) 이 부분은 주로 정영태, 「북한 군사정권의 전개양상과 핵정책 전망」, pp. 84~85, 106~109, 111~112 참조.

왔다. 한편 북한은 1974년 IAEA에 가입하여 핵평화주의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면서, IAEA를 통한 서방 선진국의 핵기술을 획득·축적하고 있었다. 북한은 IAEA가입 후 1992년 1월 IAEA의 핵안전협정에 체결하기 이전까지 IAEA를 통해 원자력의 재처리·고속중성자로 개념 도입 및 제2원자로(핵무기 개발 의혹 대상)의 계획·가동 등 핵 기술의 축적을 지속하였던 것이다.

북한과 미국과의 제네바 합의문(1994. 10. 21)에서 북한은 NPT 완전복귀·특별사찰의 수용·현재와 미래의 핵활동 전면동결 등을 약속하고 있다.⁵⁷⁾ 위에서 살펴본 종전 북한측의 반핵 평화주의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은 그들의 핵활동 동결 약속을 통하여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의 보장 확보와 함께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비핵 평화 이미지의 제고와 연계시키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핵 모호성(NCND)정책⁵⁸⁾

북한 핵정책의 두번째 특성은 북한판 NCND(Neither Confirm Nor Deny)정책으로서의 핵 모호성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반핵 평화주의 주장에 의하여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를 성사시킨데 이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추진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 모호성 정책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은 여러가지

57) 북한과 미국과의 제네바 합의문 내용은 통일원 정보분석실, 「주간 북한 동향 제199호」, pp. 21~25 참조.

58) 이 부분은 주로 정영태, 「북한 군사정권의 전개양상과 핵정책 전망」, pp. 113~123 참조.

정황 요인으로 보아 핵 보유 문턱에 있으면서도 이를 은폐·부인하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 김일성은 생존시인 1992년의 신년사⁵⁹⁾나 1992년 4월 15일 워싱턴 타임스와의 기자회견 등에서 ‘핵무기 개발의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이는 핵무기 개발의 의도나 실상을 은폐하려는 것이었다.

1993년 2월 영변의 2개 핵시설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 요구의 거부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단계 및 보유 여부가 모호성의 대상이 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취하고 있는 핵모호성은 오히려 북한의 대내외적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대외 협상력 제고의 주요한 수단이 되어 왔다.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보듯이, 북한은 핵 모호성 정책에 의하여 미국과의 협상에서 강대국에 준하는 지위를 확보하고 수교 문제·북한 체제의 인정·북한에 대한 핵 불사용 보장 등을 획득해 내고 있다.

북한은 미국·북한과의 제네바 합의문에서 핵 활동의 전면동결을 약속하는 한편, 경수로 지원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흑연 감속로의 해체 보류와 5MW실험용 원자로에서 추출된 핵연료봉의 보관에도 합의하였다. 그러나, 최종 협상의 타결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정책 의도가 변동될 수 있는 모호성이 잠재하여 있다고 하겠다. 북한은 이와같은 핵 모호성 정책이 갖는 효율성의 견지를 통해 공산권 해체 이후 북한체제가 당면한 대내외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김정일 후계체제의 안정적인 정착 수단으로 활용하려 할 것으로 판단된다.

59) 「로동신문」, 1992. 1. 1.

(2) 대미 군사제안

북한은 핵무장 추진의 정책 카드를 통하여 미국과 관련된 모든 현안을 일괄타결하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북한측의 이러한 일괄 타결 입장 속에 표명된 군사제안은 3단계에 걸쳐 진행 되어온 북미 고위급회담의 합의사항⁶⁰⁾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은 미국측에 대하여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금지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철거 문제는 공산권 변혁 이전과 이후 시기에 있어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국에 대하여 제기하여 온 것인데, 핵정책 카드를 통하여 미국으로 부터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의 보장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1 단계 북미 고위급회담의 합의사항과 3단계의 제네바 합의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주한미군의 철수문제에 대하여 북한은 북미 평화협정의 체결을 촉구하는 형식으로 표명하고 있다. 북한은 1994년 4월 28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현 정전기구를 대신하는 평화보장체계의 수립'을 촉구하는 대미 협상을 제시하고, 4월28일 판문점의 북한측 군정위 사무실을 폐쇄하였으며 5월24일에는 일방적으로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⁶¹⁾하였다. 그리고 9월9일에는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평화협정의 체결문제를 토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⁶²⁾ 이와 관련하여 1994년 8월31

60) 3단계에 걸친 북미 고위급회담에서의 합의사항에 관한 내용은 「경향신문」 1994. 8. 14 참조.

61) 통일원 정보분석실, 「주간 북한동향 제192호」, p. 64.

62) 통일원 정보분석실, 「주간 북한동향 제193호」, pp. 9~11.

일에는 중공이 북한측의 주장에 동조하여 관문점에서 군정위 대표단을 철수시킴으로써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같이 북한은 북미 평화협정의 체결 주장을 통하여 휴전상태를 평화보장체계의 질서로 전환시키자는 입장의 표명속에 주한미군의 철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북미 고위급회담에서는 군사제안과는 별도로 정치·경제부문에 관한 제안도 포함시키고 있다. 1단계 회담에서 북미간에 상대방 주권의 상호존중·내정 불간섭의 보장을 합의함으로써 북한측은 미국으로부터 북한체제의 인정을 확인받고 있는 것이다. 3단계 회담의 제네바 합의문에서도 대사급까지 격상 가능한 연락대표부 설치에 합의함으로써 북미 수교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제네바 합의문에서는 무역·투자 제한의 완화 및 2천MW 경수로 발전소와 연간 50만톤까지의 중유 대체 에너지의 제공과 같은 경제교류·협력의 부문에도 합의하고 있다. 북한은 이상에서와 같이 핵무장 추진정책의 가시화를 통하여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위협 중단 및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등과 같은 군사협상 외에도 정치·경제부문에 걸친 현안 과제를 일괄타결하려는 입장을 견지하여 오고 있다.

(3) 대남 군사제안

핵무장 추진정책의 가시화 이후 북한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대응양상 역시 북미 고위급회담 과정에서 표명된 북한측의 입장을

통하여 파악이 가능하다.

첫째로, 제1단계와 제3단계 2차회의의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은 미국과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하여 합의함으로써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 본 북한의 핵정책의 특성중 반핵 평화주의에 내재한 북한의 저의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둘째로, 핵무장 추진정책의 가시화 이후 북한의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은 한국이 핵주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관점에서 협상대상으로 부터 배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북한은 1994년 8월2일·8월4일의 로동신문 논평과 1994년 8월 5일 외교부 대변인의 중앙통신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의 핵문제가 북·미간의 쌍무적인 문제’라고 성격을 규정하고⁶³⁾ 한국을 협상대상에서 배제시키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는 공산권 변혁 이후 북한의 포괄적 평화방안·군축제안 등에서 한국을 협상대상으로 설정하였던 태도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한국이 핵문제와 관련하여 주도권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북한은 당분간 우선적으로 제네바 합의문에 따라 그 이행의 문제에 주력할 것이며, 그 진행경과에 따라 남북한간의 협상을 후속시켜 감군·군축등의 군사문제를 협의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63) 통일원 정보분석실, 「주간 북한동향 제188호」, pp. 17~18.

V. 결론

1945년 이후 반세기에 걸쳐 지속되어온 한반도의 분단체제는 남북한 국내체제의 군사화 및 상호간의 군사적 대립양상을 초래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는 전쟁과 평화의 선택문제는, 현시기 한민족에게 부과된 중대 과제가 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전쟁·평화관이 보여온 변화 양상을 공산권 변혁 이전과 이후의 시기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각 시기의 북한의 전쟁·평화관을 북한 자체의 원칙적 입장과 현실적 대응양상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공산권 변혁 이전 시기에 있어서의 북한의 전쟁·평화관은, 전쟁 불가피론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가운데 대남 무력통일론과 대미 전쟁필연론의 요소들을 원칙적 입장으로 설정한 것이었다. 공산권 변혁이전 북한은 이같은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여 왔다. 이러한 전쟁·평화관에 의거한 현실적인 대응방도로써 194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미국에 대하여는 주한미군·핵무기의 철수 및 평화협정의 체결을 주장하였다. 한국측에 대하여는 감군·군축·불가침 선언의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군사제안 등을 제시하여 왔다.

공산권 변혁 이후에도 북한측의 전쟁·평화관에 있어서 종전의 원칙적 입장에 변화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제시하기 이전 단계의 기간중에는 북한측 전쟁·평화관의 현실적 대응방안에서 일정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다. 즉 1988년 11월의 포괄적 평화방안이나 1990년 5월의 군축제

안, 그리고 1991년 12월의 5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채택한 남북 합의서와 그 이후의 남북한 비핵 공동선언 속에서 협상 차원에서의 타협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개발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북한의 전쟁·평화관과 관련한 현실 대응양상은 또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핵 모호성(북한판 NCND)정책으로써 김일성 이후의 북한 체제가 당면하고 있는 체제 안팎의 위기상황을 타개하여 나아가려 하고 있다. 그리하여 미국에 대하여는 북한에 대한 체제 인정·국교 수립과 핵무기 불사용의 보장을 받아내고 평화협정의 체결과 주한미군의 철수를 실현시키고자 한 것이다. 한국에 대하여는 미국과의 한반도 비핵화론의 합의에 기초하여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봉쇄하고자 하고 있다.

공산권 변혁 이전과 이후 시기에 있어서의 북한 전쟁·평화관의 총체적인 원칙과 현실적인 대응양상은, 김일성 체제에서 김정일 후계체제로 이어지면서도 반세기에 걸친 불변의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 그 특성이다. 이로 볼 때, 한반도에서의 분단배경과 과정에서 비롯된 역사적 요인들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측면에 변화가 오지 않는 한 상당 기간 북한측 전쟁·평화관의 일관된 공식입장은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당국은 항일 무장투쟁을 북한정권 창설의 혁명역사·혁명전통으로 삼아 반제 자주성을 중시하고 있다. 한편, 노동자·농민 중심의 인민정권을 민주성의 상징으로 자부하려 한다. 북한당국은 이를 북한식 사회주의의 역사적 자산으로 여기면서 상대적으로 남

한의 체제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는 정치적 자존심을 견지하려 하고 있다. 공산권의 해체와 경제력의 침체 등 대내외적인 난관 속에서도 북한체제가 견지하고 있는 남한에 대한 비우호적인 입장의 배경은 위에서 지적한 요인 속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측으로서는 지속적인 개혁에 기반을 둔 사회의 민주화를 가속화하고 미국과의 대외관계·주한미군과 핵주권의 문제 등에서 정치적·군사적 자주성을 확보해 나감으로써 상응한 북한측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측도 북한당국만이 자주·민주정권이라는 독단논리와 남북한 간의 군사적 대립체제를 합리화하는 냉전 시대의 스탈린주의 체제적인 입장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핵무장 추진에 의해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는 소극적 자세로는 변화하는 세계사의 조류에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현 상황에서 북한측의 근본적인 활로는 개혁·개방정책⁶⁴⁾을 추진하여 현실주의적이며 실용주의의 입장으로 전환해 나가는 길이라고 판단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과 대립을 해소하고 남북한 분단 체제의 현상타파를 위하여서는, 최우선적인 현실방안으로서 1991년의 남북합의서에서 규정한대로 쌍방간의 체제 인정에 기초하여 정치·군사적인 신뢰구축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본다.

64) 북한측은 개혁·개방이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자본주의체제로의 후퇴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논거는 김병식, 「제국주의자들의 이른바 <평화적 이행>전략의 반동성」(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에서 잘 나타나 있다; 심지어 사회민주주의 방식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혁·개방과 관련한 북한체제 지도부의 스탈린주의적인 완고성을 파악할 수 있다.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에 관한 南北韓의 立場과 問題點

제 성 호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目 次 >

- I. 序 論
- II. 北韓立場의 內容과 問題點
 - 1. 北韓立場의 內容: 對美平和協定 締結主張
 - 2. 北韓立張의 問題點
- III. 南韓立場의 內容과 問題點
 - 1. 南韓立場의 內容
 - 2. 南韓立場의 問題點
- IV.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의 方向
 - 1. 考慮事項
 - 2. 바람직한 平和體制 構築方案: 4者會談 方案
- V. 結 論

I. 序 論

북한은 지난 1994년 4월 28일자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현재의 정전협정은 이미 빈종이장이 되었다고 강변하면서 미국에 대해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

한 포괄적인 협상을 제의하였다. 그 후 북한은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정지작업으로써 군사정전협정을 사문화시키고 정전기구들을 무력화시키는 행동을 단계적으로 행하여 왔다.

금년에 들어 와서 북한은 지난 2월 22일 조선인민군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명의로 당장 북·미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에 이르는 중간조치로서 소위 「暫定協定」이라는 것을 체결하자고 미국에 제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그간 북한이 주장해 온 북·미 평화협정 주장의 변형으로 간주하고 이를 단호히 거부하자, 북한은 3월 29일 김광진 인민무력부 부부장은 「조선반도의 전쟁전야 분위기 돌입」이라는 자극적 발언과 함께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최종적이고 주동적인 자위 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하였다.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4월 4일 북한은 조선인민군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명의로 ① 군사분계선 및 非武裝地帶(Demilitarized Zone: DMZ) 유지·관리 임무포기와 ②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oint Security Area: JSA)에 진입하는 북측 차량 및 인원의 식별표지 부착중지를 선언하였다. 곧이어 북한은 4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 동안 계속해서 200명의 내외의 무장인원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투입, 진지를 구축하는 등 무력시위를 행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이 1960년대초 (남북)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한 이후 지금까지 30년 이상 동안 대남전략 차원에서 평화협정을 거론해 왔음을 감안할 때, 이상과 같은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주장은 전혀 새로운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평화협정 체결제의를 배경을 주목

하면, 과거와 지금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주장이 冷戰時代에 宣傳次元의 一過性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면, 최근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제의는 주변 국제환경의 근본적인 변화, 특히 미·북한간의 관계개선 등 韓半島에서의 脫冷戰的 和解의 氣流와 남북한 교차승인이 무르익어가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주목을 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미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이 문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제의 그 자체에 있다기 보다는 북한은 정전협정체제의 근간인 군사분계선을 무단 침범하고 비무장지대의 존립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데 있다. 즉 정전협정체제가 지난 40여년간 비록 매우 불안한 것이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탱하여 온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여 왔는데, 그나마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비될 경우 한반도에서 위기관리 및 평화유지가 그만큼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전협정체제가 근본적인 위협을 받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에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정전협정 유지라는 消極的·守勢的인 입장과 事後反應的인 자세로 대응할 수는 없게 되었다. 실제로도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 등에 비추어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가 최근 국내외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정부도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를 당면한 대북 및 통일정책 추진에 있

어서 가장 주요한 이슈의 하나로 파악하고 4자회담 제의 등 다각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는 기본적으로 법적(특히 국제법상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정책선택의 문제(또는 남북한의 정책대결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여러가지 각도에서 고찰되어야 할 매우 복잡하고도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고,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의 입장(특히 전략적 측면)과 남북한관계 현실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정책대안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안이라 하겠다.

본고에서는 지면관계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고찰하지는 않기로 한다. 주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전제로서 평화체제 전환에 관한 남북한의 입장과 문제점에 관해 주로 살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최근 정부가 제의한 4자회담의 적실성 및 향후 추진방향에 관해 검토하기로 한다.

II. 北韓立場의 內容과 問題點

1. 北韓立場의 內容: 對美平和協定 締結主張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북한의 입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¹⁾함으로써 불안한 현 정전체제를 새로운 평화보

1)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라 함은 1990년 12월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기

장체제로 대체하자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의 주장은 “아직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식되지 않고 있고 비정상적인 정전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공고한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현재의 정전협정이 북한과 미국과의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주장은 첫째, 한국전쟁²⁾ 당사자에 대한 북한의 인식, 둘째, 정전협정 당사자에 대한 북한의 입장, 셋째, 평화협정 체결의 당위성 및 필요성에 대한 북한의 시각 등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간중 연형묵 총리는 북한의 기본적인 평화구상으로서 「평화강령」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북한측은 「평화강령」의 4개 실천적 과제로서 ① 북남불가침선언 채택, ② 북·미 평화협정체결, ③ 북남 군비감축, ④ 주한미군 철수 및 미국의 대한 핵우산 제공 중단을 제시하였는데, 평화보장체제는 상기 4개 사항 중에서 북남불가침선언 채택을 제외한 3개 사항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체제 및 법제도(각종의 협정을 포함)를 총칭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諸成鎭, “北韓의 對美平和協定 締結戰略: 內容·意圖 및 問題點,”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5), pp. 16~21 참조; 이와 관련 북한은 「평화보장장치」와 「평화보장체제」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부속합의서를 평화보장장치라고 규정하면서, 남북한간에는 이러한 합의서에 따라 북남군축 등 불가침관련 합의사항을 이행·실천하면 평화가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평화보장체제」 수립문제는 북·미간에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1995년 9월 19일자 「조선중앙방송」 보도(「內外通信」, 제9692호, 1995. 9. 20자) 및 1995년 10월 3일자 「평양방송」 보도 참조.

- 2) 1950년 6월부터 1953년 7월까지 한반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의 사태를 한국전쟁으로 칭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法理的인 問題가 있다. 특히 유엔헌장체제하에서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데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다만 우리 화계와 저널리즘에서 한국전쟁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도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 한국전쟁이라는 용어는 국제법상의 전문용어로서의 의미로 사용하지 않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가. 韓國戰爭 當事者에 대한 認識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주장은 한국전쟁에 대한 그들의 기본인식에서 출발한다. 이와 관련, 1995년 8월 18일자 「로동신문」에는 “미국은 용단을 내려야 한다”는 제하의 논평이 실린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조선전쟁을 감행한 것도,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도, 교전관계에 있는 법적 당사자도, 정전체계를 파괴한 것도 미국이기 때문에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자면 조·미 사이의 낡은 정전체계를 대신하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미제의 식민지, 즉 아직도 미제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미해방의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남한은 일제치하에서 벗어났지만 곧 미군의 진주와 주둔(및 철수), 다시 한국전쟁시 미군의 개입(그들은 이를 강점이며 침략으로 규정한다)으로 미국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반도에서 정통성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제를 몰아내기 위한 6.25 전쟁은 「조국(민족)해방전쟁」이며 정의의 전쟁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은 북한의 무력남침에서 시작된 한국전쟁을 정통성부인 북한과 제국주의 침략자인 미국간의 전쟁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한편 북한은 미국이 한국전쟁 창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유엔안보리의 결의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북한은 유엔군의 실체는 곧 미군이며, 따라서 한국전쟁의 일방다시자는 미국이라고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나. 停戰協定 當事者에 대한 立場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은 한국전쟁을 정지시키기 위해 체결된 정전협정의 일방 당사자는 북한과 중국이고, 타방 당사자를 미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전협정에 서명한 자는 클라크라는 유엔군사령관이었는데, 그는 본래 미군 4성장군으로서 미국을 대표하여 정전협정에 서명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은 중국군이 오래전에 이미 한반도에서 완전 철수하였고,³⁾ 유엔군측에서 남아 있는 군대도 미군 뿐인 조건에서 이제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여,⁴⁾ 양국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92년 2월 19일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함에 따라 이미 남북간에 불가침에 관한 합의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북·미간에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적대적 대결정책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⁵⁾

3)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인민지원군은 1954년 9월부터 철수하기 시작하여 1955년 4월 6개 사단이 철수를 완료하였고, 1958년 10월 26일에 완전히 북한으로부터 철수하였다.

4) 國土統一院, 「北韓最高人民會議 資料集 (第三輯: 4期 1次會議~5期 7次會議)」 (서울: 國土統一院, 1988), p. 858 참조.

5) 예컨대 1995년 2월 28일 및 4월 19일자 외교부 대변인 담화 외에도 1995년 3월 3일자 「로동신문」 논평, 3월 5일자 「민주조선」 논평, 3월 7일자 「조선중앙통신」과의 회견, 1995년 4월 13일자 「로동신문」 논평, 1995년 5월 29일자 「조선중앙방송」 보도 등을 참조.

다. 平和協定 締結 必要性에 대한 主張

북한은 한반도에서 시급히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하는 당위성 내지 필요성을 현 정전협정의 사문화 및 정전기구의 기능상실에 서 찾고 있다. 예컨대 북한은 “오늘 정전협정은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할 수 없는 빈종이장으로 되고 군사 정전위원회는 사실상 주인이 없는 기구로써 유명무실하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⁶⁾ 그 때문에 북한은 정전협정은 평화협정, 정전기구는 평화보장체제로 각각 대체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정전협정의 사문화 및 정전기구의 기능상실에 대해 그것이 전적으로 미국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면서, 핵문제 등 한반도관련 사안도 북한과 미국을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 오늘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복잡하고 첨예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들인 우리(북한)와 미국을 적대 쌍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전체계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는 것이다.⁷⁾ 말하자면 북한은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과 미국간에 조속히 적대관계가 해소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6) 1994년 4월 28일자 북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참조.

7) 상기 동일한 일자의 외교부 대변인 성명 참조.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 통권 제154호 (서울: 통일원, 1994. 4), pp. 244~246 참조.

2.北韓立張의 問題點

가. 북한주장의 허구성

(1) 韓國戰爭의 性格 歪曲

북한이 주장하듯이 한국전쟁은 북·미간의 전쟁인가, 즉 미국이 한국전쟁을 감행한주체인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이것은 한국전쟁의 교전당사자가 누구인가에 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첫째, 한국전쟁에 있어서 북·미간의 무력충돌을 국제법적인 의미에서의 전쟁이라 볼 수 있는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전쟁은 북한의 무력남침으로 개시된 것이다. 즉 북한이 한국전쟁을 감행하였다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公知의 역사적 사실로서 이는 당시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해서도 명백히 확인된 바 있다. 그런데도 북한이 한국전쟁을 북·미간의 전쟁으로 설명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통상 우리는 6.25를 한국전쟁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는 군사적(특히 전사적) 내지 사회학적 의미에서는 통용될 수 있는 표현일지는 모르나, 국제법상으로는 반드시 적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이미 1928년 8월 흔히 不戰條約으로 불리우는 「국가정책수단으로서의 전쟁포기에 관한 조약」(General Treaty for the Renunciation of War as an Instrument of National Policy;

Kellogg-Briand Pact라고도 함)이 체결된 이래 오늘날 전쟁은 불법화 내지 금지되어 왔고, 유엔헌장은 법적 개념으로서의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 대신 유엔헌장에서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행위라는 (기술적·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유엔체제하에서는 평화의 위협자, 평화의 파괴자 및 침략행위자만이 있을 뿐이며, 그러한 범법자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 의한 조직적 강제력에 의한 제재(응징)가 가해진다. 이를 유엔헌장에서는 강제조치(enforcement action)라고 한다. 그에 대한 법적 근거, 제재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 바로 유엔헌장 제7장이다. 이 장은 국제사회의 개별국가(유엔회원국 포함)에 의한 무력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한 토대 위에서 소위 유엔에 의한 집단안전보장(collective security)을 통한 국제평화의 달성이라는 유엔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틀로 고안된 것임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감행한 무력적대행위는 3·8선 이북을 불법 점거한 반국가단체(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명을 참칭하는)인 북한이 정통중앙정부인 대한민국정부에 대해 불법적으로 일으킨 내란이었다. 어느 국가영역 내에서 발생한 내란과 그에 대한 처리는 기본적으로 국내문제의 하나로서 제3국이나 어떤 국제기구도 여기에 개입할 수 없으며, 만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개입할 경우 국내문제(특히 내정) 불간섭의무 위반을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내란의 경우에도 제3국 또는 국제기구가 개

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정통정부가 제3국에 대해 원조 및 개입을 요청한 경우나 또는 유엔이 헌장 제2조 7항 단서에 따라 당해 내란에 개입할 수 있는 경우가 그것이다.⁸⁾ 후자는 곧 유엔이 강제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유엔이 내란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한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당해 내란이 순수한 국내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장 제39조에 명시된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⁹⁾

한편 1950년 6월 25일 긴급소집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라 함)는 북한의 무력남침을 평화의 파괴로 규정하였고, 즉각 군사행동을 중지하는 한편 북한병력을 38선 이북으로 철수시키도록 요구하였다.¹⁰⁾ 북한이 유엔의 요구를 묵살하고 전투행위를 지속하자 유엔안보리는 6월 27일 대한민국에 대해 원조를 제공할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하였다.¹¹⁾ 이 결의

8) 유엔헌장 제2조 7항은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관할권 내에 있는 문제에 간섭할 권한을 유엔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부탁하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원칙은 제7장에 의한 강제조치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9) 유엔헌장 제39조는 “안보리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또는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1950년 6월 25일자 유엔안보리 결의(S/1501).

11) 1950년 6월 27일자 유엔안보리 결의(S/1511).

는 유엔헌장 제39조 및(또는) 제42조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간주된다. 동 결의에 따라 참전 16개국이 한국에 파병되었음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이상에서 보건대 6.25는 전통적으로 국가간의 무력충돌인 전쟁이라고 볼 수 없다. 그것은 평화의 파괴자인 북한에 대하여 유엔이 헌장 제2조 7항 단서, 제39조 및(또는) 제42조 등에 입각하여 일련의 안보리결의를 채택하고, 이러한 결의를 통해 취한 집단적 강제조치로서 제재적·응징적 성격을 가진 국제경찰적 조치(행동)라 하겠다.¹²⁾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유엔의 강제조치를 북·미간의 전쟁으로 호도한다면, 그것은 집단안전보장을 통한 국제평화의 유지·회복을 위해 창설된 유엔의 설립목적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국제법상 인정될 수 없는 부당한 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전쟁은 본래 국가 상호간 또는 국가와 교전단체간에 행해지는 것이지(그래서 전쟁에 참가하는 당사자를 교전당사국 또는 교전단체라고 한다), 국가와 국제기구간에, 즉 평화의 파괴자인 북한과 유엔이 전쟁을 수행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12) 한편 유엔총회는 1951년 2월 1일 미국의 제안에 따라 「평화를 위한 단결」(Uniting for Peace Resolution) 결의(1950년 11월 3일 총회결의로 채택)에 의거하여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결의, GA/498(V)를 채택한 바 있다. 이 결의 제6항에서 총회는 「집단적 조치위원회」(Collective Measures Committee)에 대해 한국에서의 중국의 행동에 관해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한 보고를 감안하여 총회는 다시 1951년 5월 18일 GA/500(V)라는 결의를 채택하여 중공과 북한에 대한 전쟁물자의 공급 중지를 회원국에 권고하였다. D. W. Bowett, *United Nations Forces* (London: Stevens and Sons, 1964), p. 47.

둘째,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군은 유엔군의 모자를 쓴 실질적인 전쟁당사자인가?

유엔안보리는 1950년 7월 7일 주한 유엔군사령부 설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결의(S/1588)를 채택하였다. 유엔안보리가 강제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엔군사령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헌장 제29조¹³⁾로서 이 결의는 말하자면 유엔의 한국전 개입 근거(전술한 헌장 제2조 7항 단서, 제39조, 제42조)에 따라 구체적인 개입을 위한 절차(기구 구성)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동 결의가 채택된 배경에는 참전국이 개별적·독자적으로 작전 지휘를 할 경우 효과적인 전투수행이 곤란하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동 결의에 의거하여 참전국의 전투력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참전 16개국의 군대는 유엔군사령부의 통솔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유엔군사령부는 참전국 군대를 통합적으로 지휘·운용하게 되었다. 16개 참전국 군대중 하나가 미군임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북한은 유독 한국전쟁 기간중 참전한 미군만을 지적하여 조선전쟁의 당사자라고 주장한다. 특히 북한은 미군을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한국전쟁에 개입한 군대이지만 실상은 유엔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역시 유엔의 집단안전보장기능을 부인하는 反유엔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13) 이와 관련, 유엔헌장 제29조는 “안보리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에 의한 강제조치(특히 군사적 제재)를 수행하기 위해 유엔헌장 제29조와 함께 1950년 7월 7일자 유엔안보리 결의(이 결의가 직접적인 설치근거임)에 의거하여 설치된 유엔안보리의 보조기관(subsidiary organ)이라 할 수 있다.

없다.

유엔은 국제연맹이 국제평화와 안전이라는 목적으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이유를 강대국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역할을 부여받지 않았고 또 그러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데 있다고 보고, 헌장에 상임이사국 제도를 두는 한편 5대 강대국에 대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제1차적 책임(primary responsibility)과 역할을 인정하였다.¹⁴⁾ 한국동란 당시 이와 같은 책임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현실적으로 미국 뿐이었다. 그러한 점에서 미국이 유엔군사령부의 조직과 구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따라서 미국의 참전을 위법·부당하다고 하면서 한국전쟁을 미국과 북한간의 전쟁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북한과 미국간에는 전쟁의사 내지 戰意(animus belligerandi)가 있었는가?

전쟁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전주체간에 전쟁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전쟁의 성립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하였다는 주장이 근거없는 부당한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왜냐하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은 38선을 넘어 남침하려는 의사가 있었지 미국에 대해 전쟁을 하려는 의사는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선전포고를 한 바도 없다. 반대로 미국도 역시 6월 25일이나 그후 한국전쟁 기간 중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 전쟁을 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며 또한 북한에 선전포고 등 기타의

14) 유엔헌장 제23조 1항 및 제24조 1항.

방법으로 전쟁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다.

미군은 피침국인 한국정부의 요청으로 한국전에 개입하였고,¹⁵⁾ 곧바로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북한의 남침을 격퇴하고 한국을 북한의 무력남침행위가 있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켜 주기 위해 한국군을 지원하게 되었다. 즉 미군은 유엔에 의한 강제조치의 일환으로 참전한 군대의 하나로서 말하자면 한국군에 대한 지원군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군은 북한에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참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기타 참전 15개국 군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상의 事實과 法理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미국과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은 어디까지나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유엔에 의한 집단적 강제조치 수행에 참여한 것일 뿐이다. 미국은 그러한 유엔의 합법적 조치에 자국군대를 유엔에 제공한 것일 뿐이다. 즉 한국전 참전 미군은 미국의 군대(국가기관) 자격으로 북한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참전한 것이 아니다. 결국 미국은 북한과 전쟁을 한 바가 없으며, 더우기 교전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할 것이다. 어디까지나 한국전쟁에서 교전관계에 있던 주된 법적 당사자는 남북한이었다고 하겠다.¹⁶⁾

15) 1950년 7월 1일 미 제24사단 예하의 스미드 특수임무부대가 부산에 도착하여 7월 5일 외국군대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전쟁(오산전투)에 참전하였다.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 要約』(서울: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86), p. 26.

16) 1954년 4월부터 6월까지 개최된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북한을 위시한 공산측은 한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회복하기 위해 취해진 유엔의 조

(2) 韓國停戰協定の 署名者와 當事者의 混同

북한은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며, 이 협정이 북한과 미국을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변한다. 그 논거로 북한은 정전협정의 일방 서명자인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미국군인(4성장군)이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른바 실질적 당사자론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북한은 이 실질적 당사자론에 입각하여 미국이 정전협정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논리를 따르면 만일 유엔군사령관이 영국인으로 보임되면 영국이, 또는 캐나다인으로 보임되면 캐나다가 각각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논리구성은 법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법리적으로 볼 때 유엔군사령관이 미군장성으로 보임된 것은 1950년 7월 7일 유엔안보리 결의(S/1588)에 의거한 것이다. 그러나 유엔군사령관은 유엔군을 지휘하는 기간 그가 미국(또는 미군)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술한 바와 같이 유엔의 한 기관(특히 유엔안보리의 보조기관)으로서 유엔을 위해 활동하였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정전협정 체결도 마찬가지이다. 유엔군사령관은 유엔의 보조기관인 유엔군사령부의 장으로서 일차적으로 그에게 부여된 권한에

치를 무효로 하고, 국제평화유지와 침략으로부터 방위를 임무로 하는 유엔의 권능과 역할을 무시하려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유엔에 가입한 북한은 더이상 유엔의 집단안전보장기능을 무시하는 입장을 지속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입각하여 정전협정을 교섭·서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서명자에 지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유엔군사령부나 유엔군사령관이 정전협정의 (법적)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요컨대 유엔군사령관이 미국인라는 근거로 미국이 당사자라는 북한의 주장은 정전협정 서명자(signatory)의 국적과 그가 행한 법률행위가 귀속되는 당사자(party)를 혼동한 것이라 하겠다.¹⁷⁾

(3) 平和協定 체결주장과 平和破壞行爲의 矛盾

본래 정전협정은 전쟁상태에서 평화상태로 가는 과정에서 교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설정되는 잠정적·과도적인 체제이다. 따라서 정전협정만으로는 항구적인 평화가 보장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이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입으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하면서, 행동으로는 정전협정체제를 무실화하는 방법으로 평화를 파괴·교란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것은 自家撞着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정전협정의 성실한 이행·준수와 남북한 쌍방간의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을 기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정전협정을 파괴하고 유린하는 상황하

17) 諸成鎬, “北韓의 對美平和協定 締結戰略: 內容·意圖 및 問題點,” pp. 47 ~50.

에서는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무릇 실질적인 평화가 협정문의 잉크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남북한간에 있어서도 역시 평화협정을 하나 새로이 체결한다고 해서 그러한 평화협정 체결이 곧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해 주지는 못하는 것이며, 또한 정전협정 위반을 묵인하는 가운데 체결되는 평화협정이 제2의 정전협정이 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 따라서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려면 그에 앞서 평화협정의 전제인 정전협정의 성실한 이행, 특히 군사정전기구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이것이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순리라고 하겠다.

나. 對美 平和協定締結 主張의 違法性

북한의 대미평화협정 체결주장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한국전쟁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려 한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주장은 정전협정과 1992년 2월 발효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南北基本合意書라 함)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법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북한주장의 違法·不當性의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이와 관련, 앞에서도 논리적인 문제점을 직·간접으로 기술하였음을 감안,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첫째, 북한과 미국은 전쟁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정전협정은

북·미간의 협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북·미간에 평화협정은 체결될 필요도 없고, 더욱이 북한과 미국만의 평화협정 체결은 있을 수 없다. 북한의 주장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으로서, 설령 그러한 평화협정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현 정전상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실질적인 평화구축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둘째,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주장은 한국의 실체를 부정하는 전제에 입각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주장에서 출발하는 조국해방전쟁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북·미 평화협정 체결주장은 명백히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 상호 실체 인정·존중조항에 대한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북한이 남북평화협정 체결의사를 표명할 때만이 비로소 남북한간에 진정한 실체인정 및 평화공존의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사자해결원칙에 입각한 평화체제 전환주장을 포기할 수 없다

셋째, 북·미 평화협정 체결주장은 당사자해결원칙에 입각한 남북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명시한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 및 화해분야 부속합의서 제19조 위반이다. 남북한은 마땅히 한반도 평화의 직접당사자로서 정부당국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평화체제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넷째, 불가피하게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과 미국만이 협

의·해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국가주권과 내부분제에 간섭하는 것이 된다.

그 이유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자연히 주한미군문제가 거론될 것이고, 또한 이 문제를 다룰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문제는 한국의 군사안보이익과 직결된 문제로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군사동맹관계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한·미간에 협의할 사항이지 북한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 한국의 이와 같은 대외적 사항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강요하려 할 경우 우리의 국가주권을 침해하게 되고 또한 우리 내부분제(특히 대외관계사항)에 간섭하는 결과가 된다. 이것은 남북기본합의서 제2조 및 화해분야 부속합의서 제6조의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¹⁸⁾

III. 南韓立場의 內容과 問題點

1. 南韓立場의 內容

그동안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남한의 기본입장은 ① 당사자해결원칙, ② 남북한간의 기합의 존중(평화체제 전환시까지 현 정전협정 유지·준수), ③ 주

18) 북한의 대미평화협정 체결주장 및 정전기구 무력화조치의 위법성에 관한 보다 자세한 검토에 관해서는 諸成鎬, “北韓의 對美平和協定 締結戰略: 內容·意圖 및 問題點,” pp. 42~68 참조.

변국의 협조와 뒷받침 활용 등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1995년 8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이 광복절 제50주년 기념사에서 천명한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3대 추진원칙에서 잘 나타나 있다.

첫째, 남북당사자 해결원칙이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모든 사안은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체가 되어 협의·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사안으로서 마땅히 제3자의 개입이 없는 가운데 남북간에 優先적으로 협의·해결되어야 한다. 평화체제 전환문제가 한국전쟁의 직접 당사자이며 지금도 휴전선 155마일을 가운데 두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남북한이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 남북한간의 기합의 존중원칙이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존중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곧 남북한이 분단 반세기 만에 정부당국 차원에서 체결하고 엄숙히 민족앞에 그 이행·실천을 약속한 최초의 합의인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천명된 원칙(특히 정전협정을 유지·준수한다는 원칙)을 존중한다는 것을 말한다.¹⁹⁾

이러한 입장은 현재와 같은 대결관계를 그대로 둔 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19)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서는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정전체제를 무력화시키고 각종 무력시위와 도발을 일삼는데, 이를 묵인한 채 새로운 합의서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한반도에 평화가 깃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평화체제 전환에 앞서 먼저 남북한이 한반도에 평화를 뿌리 내리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명시된 가장 기본적인 의무사항들, 예컨대 상호 체제 인정·존중, 비방·중상 중지, 내부문제 불간섭, 파괴·전복행위 중지, 경제·사회·문화분야에서의 가시적인 교류·협력의 이행·실천, 그리고 핵통제공동위원회의 정상적 가동 등이 선행되지 않고는 평화체제 전환노력이 결실을 맺기 어렵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의 핵심적 내용들이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이행되어야 하고, 또한 북한의 정전기구 무력화조치가 중지되어야 비로소 평화체제 전환이 추진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즉 현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함에 있어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실천은 필요조건이며 전제가 되는 것이다. 이는 남북한의 총리가 민족앞에서 엄숙히 그 실천을 약속한 기본합의서 제5조의 정신이자 요구이기도 하다.

셋째, 주변국의 협조와 뒷받침 활용이라는 원칙은 현재의 정전체제에 불가피하게 관여되어 있는 국가들의 협조와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주변국의 협조는 주로 남북평화협상에 북한을 유도하고 남북평화협정 체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변국을 활용하는 측면(물론 협조는 평화체제 구축 전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사실임)을

주로 지적한 것이고, 주변국의 뒷받침은 남북평화협정 체결에 의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보장하는 측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외에도 상기 3대 원칙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는 실질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또 하나의 원칙으로서 정부내에서 암묵적으로 인정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선 평화체제 기반조성, 후 평화체제 전환」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평화체제 전환과정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한 양측의 평화의지의 확인에 있으며, 협정의 체결과 같은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이나 여타 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평화체제 구축과정의 한 단계일 뿐이며, 이것은 실질적인 평화가 어느 정도 구축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2. 南韓立場의 問題點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남한의 기본입장(3원칙)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가장 올바른 접근방법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대응이 북한의 대남전략 차원의 평화공세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면이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첫째, 당사자 해결원칙은 한반도 문제를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풀어간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난 20년간 대미평화협정을 일관되게 주장해 온 상황에서 최근

정전기구 무력화조치에서 극명하게 잘 나타나듯이 정전협정체제의 일방적 와해조치와 더불어 대미 평화공세의 수위를 점차 강화해 온 현실에 비추어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았다는 한계를 피할 수 없었다.

둘째, 정전협정의 유지·준수 입장도 역시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진전이 없는 한 다른 대안이 없는 선택이기는 하지만, 미·북한관계의 진전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관한 국내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다소 수세적인 인상을 주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북한이 군사정전기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심지어 비무장지대조차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전협정 고수라는 입장은 국내외적으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었다.

셋째, 평화체제 전환을 위해서는 남북한간에 실질적인 평화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 그리고 이 문제에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도 그 자체로는 분명히 올바른 접근 방법이나, 1994년 11월 제네바 기본합의문 채택 이후 북한과 미국 등 주변국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평화체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이면에는 「戰術的 게임」 내지 宣傳戰의 성격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최근 남한은 이러한 게임에서 다소 수세적인 위치에 처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IV.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의 方向

1. 考慮事項

가. 南北韓 立場의 折衷必要性

지금까지 남북한은 평화체제 전환문제에 있어서 팽팽하게 대립해 왔다.

우선 당사자와 관련하여 북한은 남한을 배제한 채 미국하고만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고 주장해 왔고, 남한은 남북한이 먼저 평화협정을 포함한 평화체제전환문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응수하였다.

접근방법론에 있어서도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실천문제를 우회하여, 특히 남북한간에 아무런 군사적 신뢰구축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채, 미·북한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이와 함께 남북한간에는 군축 등 불가침선언의 이행문제를 협의해결하면) 「조선반도에 평화가 보장된다」는 논리로 일관하였다. 이에 반해 남한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실천, 특히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이 평화체제 전환의 전제요 선결조건이라고 보았다. 즉 북한은 즉각적인 협정체결, 즉 문건주의와 형식적 접근에 치중한 반면, 실질주의와 점진적·단계적 접근을 중시한 것이다.

또한 주변국의 협조·지원 활용과 관련하여서도 남한은 한반도 평화문제에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미·중의 협조·지원이 불가피

하다고 보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중국의 역할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은 대립되는 두가지 입장을 상호 절충하지 않으면 평화체제 전환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단지 남북한간에는 설전만이 있을 뿐이다. 남북한이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韓國戰爭에의 參戰 여부와 實質的 利害關係의 존재

한국전쟁은 한국군과 유엔의 깃발아래 참전한 16개국의 군대를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을 타방으로 하여 이루어진 무력충돌이라고 하겠다(법리적으로 말하면 남북한간의 내란이 외국군의 개입으로 국제화된 경우, 즉 국제적 내란 또는 국제화된 내란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정전협정의 당사자에 관해 여러가지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평화체제 전환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일차적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는가에 있다.

그러나 냉전시대가 마감된 지금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과 관련하여 1954년 4월부터 6월까지 개최된 제네바회담 해결방식(즉 남북한, 참전 16개국과 중립 등 20자회담 개최방안)을 적용하려는 발상은 현실적이지 못하며 어느 의미에서는 시대착오적이라고 할 것이다. 남북한 양자간의 평화협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면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한반도문제에 관여될

수 밖에 없는 국가를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참여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있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전쟁에의 참전여부(이는 법리적 타당성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와 한반도문제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가 여부가 한반도 평화회담 참가의 조건으로 고려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다. 韓半島 平和保障의 問題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함에 있어서는 평화체제 전환시에는 항구적이고도 실질적인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한반도 평화의 실효성 보장). 따라서 남북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합의할 경우에는 한반도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주변국의 협조·지원을 얻어 국제적 보장체제 형성을 통한 한반도 평화보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⁰⁾ 그러나 한반도 평화는 직접당사자의 평화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며, 보장국의 역할은 평화협정의 이행·실천을 지지·추진·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조당사자로서의 「補助的이고 從된 역할」이라고 하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20) Seong Ho Jhe, "Replacing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 and World Affairs*, Vol. XIX, No. 1 (Spring 1995), pp. 79~80; 諸成鎬, "평화체제 전환시 韓國이 견지해야 할 基本原則과 조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북관계 속의 平和協定 제기, 그 對處方案」(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995.5.15), pp. 131~133.

2. 바람직한 平和體制 構築方案: 4者會談 方案

가. 4.16 「濟州宣言」의 主要內容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1996년 4월 16일 제주도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정세와 한반도에서의 대화와 평화 증진을 위한 방안에 관해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한 후, 북한에 대해 4자회담 개최를 공동으로 제의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은 이른바 「제주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제주선언」의 주요내용은 다음 7~8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클린턴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안보공약을 다짐하고 한·미 안보동맹관계가 굳건함을 재확인한다.

둘째, 양국 대통령은 항구적인 평화협정에 의해 대체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셋째, 양국 대통령은 긴장이 고도된 한반도에서 안정되고 항구적인 평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공동의 희망을 피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적극적이며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넷째, 양국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안정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립하는 일은 한국민이 이룩해야 할 과제라는 기본원칙을 확인한다. 양국 대통령은 새로운 항구적 평화체제를 추구하는 것은 남북한이 주도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미국과 북한간

의 별도협상은 고려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

다섯째, 김영삼 대통령은 한국이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북한대표와 정부차원에서 만날 용의가 있음을 확인한다.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이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는데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힌다. 양국 대통령은 중국의 협력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한다.

여섯째, 이에 따라 양국 대통령은 한국, 북한, 중국 및 미국 대표간의 4자회담을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조속히 개최할 것을 제의한다. 이 회담은 항구적 평화협정을 이룩하는 과정을 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일곱째, 양국 대통령은 4자회담에서는 광범위한 긴장완화조치도 토의될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선언」의 말미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한국의 이와 같은 주도적 제의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중요하고 적극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며, 김영삼 대통령은 4자회담 추진과정에서 미국의 계속적인 지지가 중요함을 인식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 나온 4자회담 제의는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조치가 극에 달했을 때 한·미간의 공조체제가 동으로 이끌어낸 「평화이니셔티브」로서 우리가 제의할 수 있는 가장 전향적인 것으로서 신선하고 획기적인 제안으로 평가된다.

나. 4者會談 提議의 統一政策的 意味

4자회담이란 남·북한과 미·중이 회동하여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정부가 이러한 방식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한다는 것은 통일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몇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하에서는 4자회담 제의가 갖는 통일정책적 의미를 간단히 짚어 보기로 한다.

첫째, 정부가 평화체제 전환을 이룩함에 있어서 4자회담이라는 방식을 선택하였다는 것은 「한반도문제(특히 평화체제 전환문제)의 국제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추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있어서 외세개입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외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이것은 남북한이 먼저 당국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체제 전환을 이룩하겠다는 「당사자해결원칙을 부분적으로 수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북한이 남북한간의 직접대화에 의한 평화체제 전환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북·미 평화협정 체결주장을 고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4자회담 제의는 이와 같은 현실인식에 입각하여 나온 차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정부가 한반도문제를 국제화시키면서도 회담참가국을 남·북한과 미·중의 4자로 한정된 배경에는 ① 당사자해결원칙과의 조화, ② 한국전쟁에의 참가여부 및 법리적 타당성, ③ 실효적인 평화보장력 등의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

부가 당사자해결원칙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면서도 4자회담 속에서 이 원칙의 구현을 시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 점은 「제주선언」에서 “한반도에서의 안정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립하는 일은 한국민이 이룩해야 할 과제라는 기본원칙을 확인한다,” “새로운 항구적 평화체제를 추구하는 것은 남북한이 주도해야 한다”는 언급에서 시사되고 있다. 요컨대 정부가 미·중 외에도 일·러를 포함하는 6자 회담 대신 4자회담을 제의한 것은 한반도문제의 국제화를 모색하면서도 최대한 당사자해결원칙과의 조화 또는 외세개입의 최소화를 기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셋째, 그동안 정부는 1992년 2월 19일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를 근간으로 한 평화체제 전환입장을 고수하여 왔다. 즉 남북기본합의서의 틀내에서 「先 화해·협력 이행·실천, 後 평화체제 전환」의 기본구도를 견지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실천은 실질적인 평화체제의 수립의 조건이며 출발점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정부는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선결적 과제인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실천과 관련하여 「선 교류·협력(신뢰구축), 후 정치·군사적 문제 해결」의 구도를 기조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남북기본합의서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미평화협정 체결전략에 입각,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통한 점진적·단계적 평화체제 전환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4자회담 제의는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감안하여 남북화해·협력과 평화체제 전환문제를 분리하여, 전자는 계속해서 남북회담

의 대화창구에서 추진해 나가고 후자는 4자회담의 틀속에서 해결한다는 발상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정부의 대북 4자회담 제의는 향후 ① 남북대화를 통한 화해·협력(기본합의서 이행·실천) 모색과 ② 4자회담을 통한 평화체제 전환을 병행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요컨대 4자회담 제의는 당사자해결원칙의 기본구도를 견지하되, 남북한간의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갈 협의창구를 南北會談과 4者會談으로 二元化한다는 정치적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二元化 推進戰略(two-track approach)에 입각하여 정부는 「남북 화해·협력」 및 「4자회담을 통한 평화체제 전환」 병행 추진(1단계)→「남북연합」(평화정착 및 공존공영) 형성(2단계)→「통일국가 실현」(3단계)의 구도를 설정하여, 점진적·단계적으로 남북한관계 개선과 통일기반의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통일전략의 구도는 대북 및 통일정책의 부분적인 전환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우리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3단계 통일구도와 상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과거 정부는 화해협력단계(1단계)의 추진과제를 남북기본합의서의 접근방법, 즉 「선 화해·협력, 후 평화체제 전환」의 구도를 견지했었는데, 남북기본합의서가 현실적으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4자회담 제의를 통해 화해·협력단계의 추진과제를 발전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다. 4자會談 推進方向

앞으로 우리 정부가 4자회담을 추진할 때 그 기본방향을 다음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정부는 최대한 당사자해결원칙과의 조화를 기하면서 4자회담을 추진해야 한다. 이것은 4자회담 틀속에서 우리가 평화체제 전환문제를 주도해 나간다는 것(중심적 역할), 또는 「2+2」 방안의 실현을 적극 모색한다는 것을 말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우리는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조치를 결코 묵인해서는 안된다. 한·미 양국 정상이 합의한 바 대로 평화체제 전환시까지 현 정전협정이 유지·준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 추진 과정에서 남북한은 정전협정의 부분적 이행·실천 내지 시범적 신뢰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은 순수하게 군사적 논리로만 풀어나갈 수는 없다. 정치·경제·군사 등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다른 분야에서 평화체제 전환을 가능케 하는 기반조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4자회담을 추진함에 있어서 협상의 관건이 되는 것은 회담의제와 회담 운영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 두가지 문제에 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4자회담의 의제는 일응 한·미정상회담 결과 발표된 제주

선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광범위한 긴장완화조치」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광범위한 긴장완화조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이것을 넓게 해석한다면 남북대화 재개, 대북 쌀추가 제공, 남북경협, 경수로 지원, 통신·통행·통상 등 인적·물적 교류·협력,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한국전쟁의 청산,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 북한의 미사일 수출통제 등도 포함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적어도 4자회담 초기에는 「광범위한 긴장완화조치」라는 문구를 엄격히 해석하여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 즉 남북평화협정 체결 및 동 협정의 보장문제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바람직하다. 다만 북·미간 및 한·중간 교차불가침협정(또는 선언) 체결문제를 추가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가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의제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한반도문제의 국제화를 초래하게 되어 우리의 자주적 입지를 축소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통일과정에서 외세개입의 제도화를 자초함으로써 자주적인 통일노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남북한간에 체결될 평화협정은 남북한 특수관계에 비추어 통상 국가간에 체결되는 평화협정과 성격과 내용 및 격식 등의 면에서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를 「韓國型 平和協定」이라고 부르고자 하는데, 이러한 평화협정에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향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기될 것이다.

다음 회담운영방식은 회담의제와 함께 4자회담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하겠다. 먼저 지적할 것은 이번에 정부가 제의한 4자회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4자가 회동하여 하나의 4자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 현실적으로도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의제를 모두 4자 전체회담에서 다루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도 하거니와, 한반도 평화에 관한 사안은 그 대부분이 남북한이 모두 일차적으로 직접 당사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사전에 의견조율을 위해 먼저 남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말하자면 4자가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미국과 중국이 빠지는 「4-2」의 회담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4자회담 대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회동하여 협상을 진행할 경우 4자회담을 통해 「2+2」를 추진함으로써 당사자 원칙에 입각한 우리의 구상은 평화체제구상은 실현되기 어렵게 된다. 또한 4자의 대표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나는 방식의 4자회담 개최는 우리의 의사에 반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방식의 4자회담이 지속적으로 개최될 경우, 남한이 배제된 체(이른바 4-1), 북한과 미·중간에 이루어지는 합의사항에 한국이 끌려 들어가 이를 추인하는 입장으로 전락될 위험마저 없지 않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우리는 먼저 4자회담을 개최한 후 4자회담을 남북회담과 4자 전체 회담으로 2원화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회의 벽두에 일정기간 4자회담을 계속 개최하는 것은 북한을 회담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술적 차원의 조치

(이 과정에서 회담의제와 회담개최방식이 협의·결정될 것이다)일 뿐이며, 일단 4자회담이 본궤도에 진입하면 실질적인 문제의 논의단계에 들어가서는 사실상 「2+2」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회담을 개최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4자회담 틀내에서도 남북회담의 선 개최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로 회담이 공전될 경우에는 남·북한간, 북·미간, 한·중간, 미·중간 등 국가별로 분과위원회회를 설치하여 회담을 개최해 나가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각각의 분과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는 4자 본회담(전체회담)에서 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회담을 운영할 때에는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같이 남북한과 미국이 모두 관여되어 있는 경우 3자 회담 또는 분과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회담구도를 전제로 할 경우에는 현재 북한과 미국간에 진행되는 유해송환협상이나 미사일수출 규제를 위한 회담,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문제 협의를 위한 회담도 4자회담의 틀 속으로 편입시키고 이 안에서 풀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물론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4자회담과 북·미 접촉을 지나치게 연계시킬 경우, 4자회담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남북대화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개선, 또는 4자회담 추진과 북·미관계 개선은 「조화와 병행」의 원칙하에 균형있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북·미관계 개선의 속도와 폭을 조절하는 문제는 앞

으로 우리 외교가 담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몫의 일부라 하겠다.

이상과 같은 추진방향에 입각하여 우리는 적극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4자회담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존의 발상에서 탈피하여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협상전략 및 협상수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V. 結 論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 나온 4자회담 제의는 북한의 정전협정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대응하여 한·미간의 공조체제 가동으로 이끌어낸 「평화이니셔티브」로서 우리가 제의할 수 있는 방안중에서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제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반응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나리오별로 세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4자회담의 실현을 위한 이행계획표(road map)를 만들어 회담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무엇보다 회담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회담의 의제와 회담운영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심하게 회담의제를 선정하는 한편, 4자회담 개최시 이 회담의 틀속에서 당사자해결원칙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회담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한가지 경계해야 할 것은 북한이 4자회담에 호응해 오더라도 4자회담 틀속에서 남북회담에는 형식적으로 임하고 북·미회담에만

주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북한은 4자회담 틀속에서 남한을 배제한 채 북·미회담을 정례화하고 이를 수교회담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러한 북한의 기도에 대해서는 한·미공조를 통해 단호히 차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만에 하나 4자회담의 틀속에서 북한과 미·중간에 裏面合意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가 끌려 들어가 그러한 합의를 추진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4자회담이 처음부터 끝까지 4자가 회동하여 하나의 4자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 먼저 4자회담을 개최한 후 4자회담을 남북회담과 4자 전체 회담으로 2원화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설령 4자회담 틀속에서 북·미간 회담이나 한·중간 회담이 열리는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남북회담이 정상궤도에 들어간 후 이를 보조·지원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 4자회담의 성사를 위해 본격적으로 周邊國管理外交의 戰爭에 돌입했다고 할 수 있는 바, 정부는 북한이 이 회담에 호응해 나오도록 미·중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 국가들을 통해 북한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4자회담을 개최하고 이 회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확보하는 가운데, 「韓國型 平和協定」을 체결하여 한반도에서 확고한 평화의 뿌리를 내리고 이를 통해 민족의 진정한 화해와 공존공영의 길을 열어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당면한 최대의 통일정책과제라고 하겠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김 광 열(배재대)

< 目 次 >

- I. 서론
- II. 동아시아정세와 주변국의 안보관
 - 1. 미국
 - 2. 중국
 - 3. 일본
 - 4. 러시아
- III.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주변국의 입장
 - 1. 4자회담제의 배경과 의미
 - 2.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 IV. 결론

I. 서론

오늘날의 국제정세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거의 반세기 동안 지속되었던 냉전의 틀 속에서 벗어나 갈등과 대립으로부터 화해와 협력으로 특징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탈냉전의 기류 속에 동북아시아 지역 또한 역

내 국가간의 빈번한 외교적 접촉과 경제협력 증대로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외교관계를 회복하여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은 새로운 안보환경과 국제질서의 태동에도 불구하고 복잡성으로 하여 사태의 발전을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 이는 글로벌 세력구조(global structure of power)가 지역세력구조(regional structure of power)를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 즉 탈냉전의 국제질서가 그대로 지역질서로의 자동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하겠다.

냉전체제를 대신할 신동북아 국제질서 구축의 과도기적 상황아래서 이 지역의 불확실성을 낳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많은 여러 요소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작용하는 요인은 탈냉전의 시대에서 미국의 역할이 동북아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축소될 것이라는 사실과 극동군사력을 바탕으로한 러시아가 동북아 지역에 대한 기존의 위치를 되찾기 위해 구소련 맹방과 관계증진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중국은 탈냉체제에서 러시아의 패권적 지위의 약화현상을 이용하여 동북아시아의 맹주가 되려는 야심에 지역문제에 간단없는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일본은 냉전체제 붕괴 이후 동북아시아에서 정치·군사적 강국으로 발돋움하여 지역문제에 관여하고자 하는 점등이 지역의 신질서구축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가들의 움직임에 우선하여 가장 동북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은 북한의 움직임이다. 구소련

의 붕괴 이후 가장 급격한 정치적 변환기를 맞고 있는 북한은 구 소련의 해체를 지켜보면서 북한체제의 붕괴에 대한 우려를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이 같은 상황아래 체제보존을 위해 북한은 핵 무기 개발하고 한국을 배제한채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일련의 계산된 군사적·외교적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점이 무엇 보다도 동북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반도 문제가 역내국가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문제라는 점과 남북한의 분단과 대치 현상은 곧바로 냉전체 제라는 국제정치 문제로 파생되었다는 태생적 성격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특히, 핵문제 타결을 위한 제네바회의 이후 빈번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미·북한간의 접촉은 한국정부가 끈질기게 고수해왔던 「당사국문제 해결방식」을 벗어나 미국의 대북한 정책은 한·미간의 대북 정책 공조 근간을 흔들여 놓는 문제로 진행 되었다. 북한의 이같은 정치적, 군사적 공세는 남북간의 새로운 긴장과 갈등을 촉발하고 지역 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초미의 문제로 대두되고 또 한국정부의 이에 대한 새로운 대처 방안을 촉발케 되었다.

이같은 맥락에서, 동북아 정세는 탈냉전의 성격과 냉전의 유산이 혼재되어 있으며, 본 논문의 주요 논의 사항인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한국정부가 제안한 4자회담의 성격은 동북아의 주변 강대국의 세력 재조정과 정세를 재구축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4자회담과 남북한간의 평화체제에 임하는 주변국의 입장은 주변국의 동북아 질서라는 틀안에서 나타나는

하위개념에 불과하기에 그들의 입장을 분석하기 위한 선행요건은 반드시 상위개념에 해당되는 동북아 국제질서관을 살펴 보아야 한다. 달리 말하면, 탈냉전 시대의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하부요소가 동북아시아에서의 강대국간의 세력 재조정과 동북아 국제질서 구축이란 상부요소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4자회담을 통한 평화체제의 구축, 즉 한반도의 질서변화의 속도와 정도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탈냉전시대에 대한 새로운 동북아 국제질서관을 간략히 살펴보고 한국정부가 제의한 4자회담과 평화체제에 대한 주변국들의 입장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탈냉전시대와 동북아시아의 신질서

1. 미국

구소련이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하나의 축을 형성했던 냉전체제에선 세력균형(balance of power)만으로도 불안정하나마 세계평화를 이루어 낼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 함께 균형을 축이었던 소련의 붕괴는 미국에게 새로운 동북아 신질서 구축이라는 책임과 과제를 안겨 주었다. 따라서 미국은 초대강국으로서 동북아에서 지속적인 국제정치의 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현실주의(Realism) 입장과 미국주도에 의한 세계평화의 유지의 비합리성을 강조한 자유주의(Liberalism) 입장으로 미국과 EC,

일본 등이 국제적 협조를 바탕으로 세계질서 형성이 탈냉전시대를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부류로 논쟁이 가열되었다.¹⁾ 그러나, 그들의 초점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바람직한 신국제질서안에서 미국의 역할과 정책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로 귀착된다.

현실주의자의 관점에서 본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세 판단은 냉전체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역동적 변화의 가능성, 역내 국가간의 불신과 갈등, 나아가 군비경쟁 및 斷續的인 전쟁이 예상되는 비관적 진단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를테면,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과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변동, 러시아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의 어려움과 국내 정정의 불안, 역사적으로 뿌리깊은 동북아시아 국가들간의 반목과 일본의 정치적 역할증대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 지역 패권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등이 지역의 정세는 매우 가변적이라는 판단이다.²⁾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분석함에 있어, 현실주의자들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요인은 급속히 신장되고 있는 경제발전과 이 지역의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상황이다.³⁾ 지역분쟁을 해결하고 질서를 강

1) Charles Krauthammer, "The Unipolar Moment," *Foreign Affairs*, Vol. 69, No. 5(Winter 1990/91); James A. Baker III., "America in Asia: Emerging Architecture for a Pacific Community," *Foreign Affairs*, Vol. 70, No. 5(Winter 1991/92); Jonathan D. Pollack, "Pacific Insecurity: Emerging Threats to Stability in East Asia,"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Vol. XVIII, No. 3(Spring 1966).

2) Pollack, "Pacific Insecurity: Emerging Threats to Stability in East Asia," pp. 8~10.

3) Richard K. Betts, "Wealth, Power, and Instability: East Asia and the

요하며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권위가 부재한 지역의 특수 여건 아래서 고도의 경제성장은 이 지역 국가들을 부유케 하지만 결국엔 군사력을 증강시킬 것이며, 또 정치적인 면에서 1980년 후반의 정치적 변화는 역내 주요국가들의 역학관계와 동북아 질서형성을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 즉, 소련의 붕괴와 이를 대신한 허약한 러시아의 자리메꿈은 중국과 일본의 지역 패권다툼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며, 소련의 붕괴는 필연적으로 미국의 군사력의 부분적인 철수를 예상케 되고 또 미·일 간의 느슨한 안보연대와 미·중국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리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 같은 급속한 정치적·경제적 변화는 정치현실주의자들에 있어서는 그 자체가 우려의 대상이 된다. 그 결과 역내 개별 국가들의 최대의 관심 사항은 그들의 국가이익과 안보에 쏠리게 되며 급속한 세력의 변화는 필연코 국가간의 오해와 불협화음, 그리고 분쟁을 이끌어 오게 된다.

냉전의 종식은 동북아시아의 정치체제를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단극체제(unipolar system)나 강대국 사이의 다극체제(multipolar system)가 혼재한 형태로 나타나리라 예상할 수 있다.⁴⁾

United States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3 (Winter 1993/94), pp. 34~77.

- 4) 세력균형의 형태는 단극체제(unipolar system), 양극체제(bipolar system), 그리고 다극체제(multipolar system)로 분류된다. 국제질서에서 다극체제를 선호하는 전통적 세력 균형론자는 Edward Vose Gulick, *Europe's Classical Balance of Power: A Case History of the Theory and Practice of One of the Great Concepts of European Statecraft* (New York: Norton, 1967); F. H. Hinsley, *Power and the Pursuit of Peace: Theory and Practice in the History of Relations between States* (New York: Cambridge

동북아시아의 체제가 단극체제일 경우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하나는 미국이 1950년대나 60년대처럼 이 지역에서 패권국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이다. 또 하나는 미국이 완전히 이지역으로 부터 벗어나 일본이나 중국중 어느 하나가 동북아의 패권 국가로 등장하는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 동북아시아에서 하나의 국가가 패권국이 될 때 지배국가나 피지배 국가 모두에게 평화와 지역안보를 보장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또한, 지역 패권국으로 부상한 중국이나 경제강국에서 정치강대국으로 변신한 일본의 새로운 정치적 위상을 용납하려 들지 않을 경우 동북아의 안정은 담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단극체제가 형성되면 전쟁의 위험이 그만큼 상쇄될 것으로 블레니(Geoffrey Blainey)나 길핀(Robert Gilpin)은 주장하고 있다.⁵⁾

동북아시아의 체제가 미국, 일본, 중국 및 러시아가 주축이 된 다극체제의 형태를 띄게 되는 경우,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현실주의자들은 주장하고 있다.⁶⁾ 단극체제

University Press, 1963); Albert Sorel, *Europe under the Old Regime* (New York: Harper Torchbooks, 1964); Ludwig Dehio, *The Precarious Balance* (London: Chatto and Windus, 1962), 양극체제가 국제정치의 안정을 가져 온다고 주장하는 대표적 학자로는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Addison-Wesley, 1979), 단극체제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Geoffrey Blainey, *The Cause of War* (New York: Free Press, 1988); Samuel P. Huntington, "Why International Primacy Matters," *International Security*, Vol. 17, No. 4(Spring 1986).

5) Blainey, *Cause of War*, p. 122; Robert Gilpin, *War and Change in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6) Kenneth N. Waltz, "The Origin of War in Neorealist Theory,"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Vol. XVIII, No. 4(Spring 1988), pp. 615~618.

는 전략균형과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자유로운 반면 다극체제는 비록 간헐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곤 하지만 국가간의 균형이나 연합을 가져오지 못하며 오히려 국가들이 상이한 비율로 성장하고 힘의 분포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불안정을 야기시킨다고 본다.

현실주의자들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다자적 안보기구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⁷⁾

이는 지역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그 필요성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이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 즉 역내국가간의 과거 역사적 쟁점의 미해결, 배타적 고유문화, 적대감의 상존 등이 다자적 안보기구의 설립을 가로 막고 있다고 본다. 더욱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기구의 존재를 제한하는 또다른 요인은 최근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정치 변화, 그리고 중국, 대만, 일본,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등 역내 국가들이 일정한 수준의 정치, 군사 및 경제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의 안정을 위해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역내 국가들 대부분이 지역안보를 위해 미국의 핵심적 역할을 바라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현실주의자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단극체제가 지역안정에 절대 필요할 뿐 아니라, 당분간 이를 대체할 유효한 다른 대안도 없다고 본다.

자유주의자들은 국제정치에 있어 국가간의 세력분포에 특별한

7) Pollack, "Pacific Insecurity: Emerging Threats to Stability in East Asia," pp. 8~10.

관심을 두지 않는 반면, 국제정치를 구성하는 국가의 속성이나 국가간의 상호관계에 관심을 기울인다. 자유주의 입장에서 본 동북아시아는 고도의 경제적 상호의존과 국제기구를 통한 협조관계의 증진, 상호 신뢰와 안정 속에 더욱 평화를 발전 시켜 나갈 것으로 보는 낙관적인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⁸⁾ 세계질서가 냉전시대와 비교하여 크게 변화하였고 동북아 정세가 비록 유럽과는 달리 매우 유동적이기는 하나 미국도 전통적 동맹국 관계를 새로운 국제정세에 맞추어 조정하면 지역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미국의 일방적 주도보다는 지역 강대국과의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여 이를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와 지역 조직과 연계시켜 활용하는 방안이다. 즉 미국은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지역 공동관리에 이들을 적극적으로 끌여 들여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구체화된 미국의 정책은 부시(Herbert W. Bush)정권 말기 제임스 베이커(James A. Baker) 국무장관에 의해 제기되기 시작하여 클린턴(William Clinton) 행정부에 이르러 확고한 정책으로 구체화 된다.⁹⁾ 이러한 미국의 정책 변화를 가능케 했던 요인은 무엇일까?

8) Ibid., pp. 9~10

9) James A. Baker III., "American in Asia: Emerging Architecture for a Pacific Community," *Foreign Affairs*, Vol. 70, No. 5 (Winter 1991/92); DoD, *A Strategic for the Asian-Pacific Rim: Looking Toward the 21st Century*, (April 1990); The White House, *A National Securit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July 1994); Les Aspin, *Report on the Bottom-Up Review*, (October 1993)을 참조.

첫째, 자유주의자들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 현상을 들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이 무역과 투자를 통한 상호간의 이익의 증진을 위한 역내 경제망 구축은 경제발전을 이루고 그들 상호간의 적의와 갈등을 약화시켜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고양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¹⁰⁾

둘째,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 점차적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혀 가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체제는 과거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다른 정치체제보다 비호전적이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감에 따라서 이 지역에서의 전쟁의 위험성이 감소되리라 예상한다.¹¹⁾

셋째, 최근의 국제적인 동향이 다자적 국제기구나 조직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또한 동북아에서도 다자간안보체제 구축의 환경이 성숙되었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역할은 국가간의 협조의 규범과 규율을 배양시켜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게 된다고 신자유주의 제도주의자(neoliberal institutionalists)들은 주장한다.¹²⁾ 제2차

10) 이런 논의의 시발점은 리처드 캄덴(Richard Cobden) 등 19세기의 맨체스터 학파(Manchester School)로 부터 시작되었다. 최근의 이론적 제공은 Richard Rosecrance, *The Rising the Trading State: Commerce and Conquest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Basic Books, 1986) 참조.

11) Michael Doyle, "Liberalism and World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0, No. 4(December 1986); Doyle, "Kant, Liberal Legacies, and Foreign Affairs," *Philosophy and Foreign Affairs*, Vol. 12, No. 3(Summer 1984) 참조.

12) Robert Keohane,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tate Power: Essay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Boulder, Colo.: Westview Press, 1989); Stephen D.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의 많은 국제기구나 조직이 증가되고 활성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은 지정학적인 위치, 또 미국의 전략적 선호도, 그리고 한국, 일본, 대만 등 전통적 미국의 동맹국 사이의 뿌리 깊은 반목 현상으로 유럽과 같은 현상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탈냉전의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형태의 국제기구나 조직이 점차적으로 이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APEC나 ASEAN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ARF (ASEAN Regional Forum)은 역내 국가들이 안보 문제에 대해 다자간 협조를 전제로 한 협의체이다. 이런 점에서 자유주의자들은 다자간 국제기구가 평화를 구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동북아시아에서의 다자간 안보기구의 형성의 필요성과 안보기구 환경의 성숙성을 제기하고 있다.

2. 중국

탈냉전은 중국에게 동북아시아 정치에 주요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 중국은 티아내멘(Tiananmen) 사건 이후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중국의 대외정책의 기조는 국가안보, 강대국과의 관계, 그리고 국내정치에 따라 결정되었으며¹³⁾ 동북아 정책은 국제정치의 하위요소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3) Weixing Hu, "China's Strategy in a Changing World," *Pacific Focus*, Vol. VIII, No. 1(Spring 1993), pp. 113~134.

중국은 90년대 이후 형성되고 있는 국제정치와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가안보의 전략 또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탈냉전시대의 국제정치, 특히 동북아 정세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인식은 중국이 미·소간의 대립에서 누렸던 전략적 삼각 (strategic triangle) 위치가 상실되는 바람에 국제정치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극히 미미함을 인식함으로써 비롯되었다. 그 결과,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역내 강대국으로서 영향력을 확대·유지하기위해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 우호와 협력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정치에 많은 관심을 두어야 했다. 그같은 정책을 추진하게된 배경은 중국의 인식하고 있는 탈냉전시대 국제정세와 동북아 질서에 대한 성격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¹⁴⁾

첫째, 탈냉전의 국제정치는 미·소를 축으로 한 양극체제였지만 새로운 국제질서는 미국에 의한 단극체제가 당분간 유지되겠지만 장기간 유지되기는 어려우며 궁극적으로 중국이 하나의 축이된 다극체제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 질서는 중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 및 러시아에 의한 4강체제가 형성되리라 판단한다.

둘째, 탈냉전의 국제질서에서는 강대국간 세력의 변화로 국가간의 분화·연합이 이루어 질 것이나 과거와 같은 정치·군사적 대립

14) 강원식, “패권이후의 동북아 신국제질서,” 『中蘇研究』, 통권 67호(1995 가을), pp. 15~45.

이 완화된 반면 국가간 영토, 민족 및 경제적 투쟁이 심화되리라고 본다.

셋째, 신국제질서가 과도기적 상황에서 불안정한 요인을 내재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인들이 세계평화와 발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국가들이 평화와 발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부적인 불안 요인이 국제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 같은 새로운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중국은 동북아시아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다. 국제정치 관점에서 볼 때, 탈냉전시대의 동북아 안보환경도 미·소간의 대립이라는 양극체제가 무너짐과 동시에 중국의 전략적 삼각구도 위치가 자동 소멸을 의미한다. 그 결과 중국이 강대국으로서의 위치도 지역적, 경제적 패라다임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동북아 정세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탈냉전 시대의 국제질서는 세력분화에 따른 다극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중국의 중국이 상정한 동북아 정세의 전략적 구도는 미국, 러시아, 일본의 4각구도이다.¹⁵⁾ 즉 러시아의 경우 국내의 정치적·경제적 어려움으로 하여 더 이상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의 안보에 직접적 위협을 가져다주지 못하며, 미국 또한 동북아 지역으로부터 군사력

15) Weixing Hu, "China's Strategy in a Changing World," p. 114; Chen Qimao, "An Inquire Into New Political Order in the Asia Pacific,"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No. 1, (1992).

의 감소는 불가피하며 국내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치적 역할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의 영향력의 증대는 필연적이다. 따라서 동북아 질서는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동북아의 환경변화는 중국의 안보에 매우 고무적인 발전으로 북경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관계 또한 1992년 러시아 대통령의 북경방문으로 한 차원 격상시키는 결과를 이루었다. 미·중국간의 경제적 갈등과 대만 문제로 인한 양국간의 문제가 여전히 갈등관계속에 있지만 중국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져다 줄 정도의 대립 상태로 발전하리라고는 예상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국제질서는 복잡다단하고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 비록 탈냉전의 국제질서아래 강대국간의 전쟁의 위협성이 크게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의 갈등과 분쟁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중국의 우려는 강대국으로부터의 직접적인 군사위협보다는 잠재적인 안보위협과 국지전적인 작은 유형의 갈등으로 야기된 중국의 이해에 대한 손상이다.

특히, 동북아 에서 구소련의 군사적 위협이 사라진 이후 중국이 상정한 최대의 잠재적 위협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다. 설사 당장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없지만 일본의 군사력의 증강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전략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 준다. 세계에서 세번째로 많은 국방비를 투자하고 있는 일본의 군사력과 미·일간의 안보적 연합은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방위력에 분명

히 부담이 된다.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중국은 전략적 연합(strategic alliance)에 크게 기초하였다. 냉전 직후 중국은 국제 및 지역전략 형태로 구 소련과의 연합 하였고, 70년대 이후 친미적 연합으로 균형과 견제자로서의 역할과 초강대국 사이에서 지렛대 역할을 함으로써 자국의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와 새로운 탈냉전의 국제정치는 더 이상 이같은 전략의 효용성을 상실함과 동시에 지역갈등에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다. 이같은 여건 하에서 중국의 안보적 개념 또한 수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중국은 단순한 군사적 의미의 소극적 안보에서 벗어나 적극적 안보라는 개념, 즉 안보의 개념이 군사적인 맥락에서 보다 광범위한 경제, 기술, 그리고 이념적인 면으로 확대하게 이르렀다.

중국의 안보관의 변화는 중국의 대외정책에도 변화를 촉발시켰다. 중국이 80년대의 근대화정책을 채택한 이후 국제정치에서 대립보다는 타협의 자세를 취하고 국제정치에서 초강대국이 되려는 야심에서 점차적으로 지역대국으로서 역할을 하려는 대외정책을 펴게 된다.¹⁶⁾ 이같은 대외정책의 변화는 동북아시아와 태평양지역에 대한 중국의 관심의 증가로 이어지며 또한 이 지역간의 많은 국가와의 관계증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특히 탈냉전의 시대에 있어 중국의 대아시아 우선정책은 여러 면에서 괄목할 만 하다.¹⁷⁾

16) Ibid., p. 120.

17) Ibid., pp. 120~122.

첫째, 중국은 지역경제에 매우 협조적이며 적극적 개입이다. 과거 중국의 자세와는 달리 지역국가간 경제기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가입은 중국의 대외정책의 기초가 경제적 교류에 의한 국가간의 이익증진이 국가안보에 긍정적임을 인식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둘째, 중국은 지역안보회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아시아지역 안보포럼에 관여하고 있다. ASEAN지역 안보회의인 ARF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문제 타결을 위한 IAEA의 특별감사에 매우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

셋째, 동북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관심은 한국이 제안한 4자회담에 임하는 그들의 자세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과거 반세기 동안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관계를 맺은 것이나 4자회담의 주요 참여국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자국의 안정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직결되고 있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3. 일본

냉전시대의 동북아 질서를 유지해온 미·소 양극체제가 붕괴된 탈냉전의 시대는 모든 국가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가져다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냉전의 종식은 곧바로 국제정치에 있어 경제적 지위에 상응하는 정치적 지위보장이라는 일본의 오랜 숙원을 이루는 호기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패권국으로 성장하여 미국의 세계전략속에서 독립변수로서 역할하는 것을 미국이 원하지 않으며, 동시에 일본의 정치적 대국화는 필연적으로 군사대국화를 의미하기에 주변의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의 재무장을 극력 반대하며 우려하고 있는 점 또한 일본이 극복해야할 과제이다.

일본이 인식하고 있는 탈냉전의 국제질서는 군사력에 의한 국제질서라기 보다는 경제·기술 등 비군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진다고 보아, 미국의 군사력에 의한 단극체제 보다는 경제력에 기반을 둔 미국·유럽·일본이 세계질서를 공동관리하는 3극체제(다극체제)를 형성하리라 본다. 이같은 다극체제는 동북아시아에서 비교적 분명하게 설정될 것이며, 동북아 지역에서의 일본의 중추적 역할은 피할 수 없으며 또한 예상보다 빨리 구축되리라 본다. 따라서 신국제질서하에서 경제대국에서 정치대국으로의 성장하기 위해 일본은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펼쳐야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냉전시대엔 정치·군사적으로 일본의 패권국가로 성장하는 것을 견제하여 왔던 미국도 일본이 군사대국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탈냉전 시대를 맞은 오늘날 미국이 국내적인 경제문제와 국내여론 때문에 더 이상 국제정치에 있어 패권국가로서의 지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국제정치에서 일본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역할담당을 독려하고 있다. 과거 미국과 소련이 주도적인 역할에 밀려 동북아시아지역의 열강으로서 부차적이고 피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수행을 할 수 있는 새

로운 국제질서가 도래했다고 판단한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지금까지 역사왜곡 문제라든가 과거청산의 문제에서 일본의 태도로 보아 국제지도자로서의 역할담당을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냉전의 신국제질서는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의 세계전략 또한 일본이 주요한 하나의 축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동북아정치 목표는 아시아 안보에 대한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정치, 군사적 역할 분담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지역에서 정치, 군사적인 영향력을 증대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동북아 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일본이 인식하고 있는 동북아 정세는 무엇인가?¹⁸⁾

첫째, 동북아 신국제질서는 미국이 이 지역의 초강대국으로서 동북아 지역의 균형자(balancer)로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며,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러시아와 함께 역내 세력균형을 이루는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본다.

둘째, 동북아의 국제질서는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상호대립·교차하며, 더욱이, 한반도의 문제는 이 지역의 정치적, 군사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러의 대립구조의 와해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서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미국과 구소련이 향유했던 정치적·군사적 영향력을 계승하려는 러시아의 의도는 지속되리라 본

18) 강원식, “패권이후체제의 동북아 신국제질서,” 『中蘇研究』, 통권 67호 (1995 가을), pp. 15~45.

다. 특히 동북아 지역 문제에 관련하여 일본의 입장은 중·일간의 단기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장기적인 양국간의 정치·군사적 대립과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¹⁹⁾.

셋째, 러시아는 현재 국내 정치·경제적 문제로 대외 문제에 소극적이거나, 아직도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중국 및 대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에 직접 관여하고자 하며, 중국은 지역의 패권국가로서 동북아 문제에 중국 고유의 지위와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동북아 정책은 미·일 안보동맹을 견고히 유지하면서 동북아에서 일본의 경제력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을 증대시키는 일이다. 또한 일본은 국제정치 무대, 이를테면 유엔의 안보리상임이사국의 진출, 국제평화유지군의 파견등 안보·정치분야에서 역할증대와 중심적 역할수행에 적극적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

4. 러시아

소련이 붕괴되고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으로 분리·해체되면서 러시아의 국력은 영토만큼이나 축소되었다. 더욱이 전후 국제정치의 초강대국으로서 세계정치의 핵심국이던 위치가 추락하고 이후 국내정치의 불안과 경제적 혼란으로 인한 러시아의 탈냉전 시대의 세계정치에서의 역할은 국내

19) Michael J. Green and Benjamin L. Self, "Japan's Changing China Policy: From Commercial Liberalism to Reluctant Realism," *Survival*, Vol. 38, No. 2(Summer 1996), pp. 35~58.

의 상황만큼이나 불확실하고 혼돈의 상태이다.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이 주도한 신국제정치의 무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의 입지는 구소련의 국제적 지위를 계승하여 미국주도의 신국제질서에서 보조적, 수동적 역할분담으로 자족해야할 입장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러시아의 진로, 즉 친서구화정책과 脫西歐 독자외교노선으로 분류되는 논쟁이 활발히 러시아 내부에서 개진됨은 오늘날 그들이 처한 입장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²⁰⁾

러시아의 외교정책은 독립공화국과의 관계 강화와 국제정치의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近外政策」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²¹⁾ 이는 첫째, 구소련의 국제적 지위를 구소련권 안에서 일차적으로 부활·계승함으로써 상실된 주도권의 회복과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며, 둘째, 구소련권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회복하여 西歐諸國과의 독립자주의교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원려에서 비롯되었다. 셋째, 러시아주변 국가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확립함으로써 국가안보의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독립국가에 산재한 러시아계 주

20) 러시아의 대외정책에 대한 논란은 이른바 大西洋主義와 유라시아主義라는 두 가지 견해로 분류된다. 전자는 러시아의 외교정책의 기초를 미국이 중심으로 하는 西歐民主主義社會와의 협력 속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러시아 건설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고, 후자는 서방과의 협력은 필요하지만 러시아의 국익을 무시한 서방 일변도의 대외정책은 지양되어야 하며, 러시아가 영토적으로 동서로 걸쳐 있는 점을 고려하여 東쪽의 이해관계도 대외정책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외교적 독립성을 강조한 논의이다. 자세한 것은 강원식, “패권이후체제의 동북아국제질서,” 「中蘇研究」, 통권 67호(1995 가을), pp. 33~35를 참조.

21) 위의 책, p. 37.

민의 안전과 권의 보호라는 이중 안전판을 도모하겠다는 포석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능동적으로 참여는 하되 구소련의 嫡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러시아 정책은 역내국가와의 선린관계를 유지하여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하며, 경제협력 증대를 통한 자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다.²²⁾ 그러나,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주도적 역할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정책, 일본의 영향력 증대, 러시아의 자리를 대체하려는 중국, 한반도정세의 불안으로 하여 지역에서의 긴장과 대립은 상존 하리라 판단한다.

동북아 정책과 관련하여 러시아는 안보 면에서 이 지역의 다자간 안보협약체의 형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²³⁾ 러시아의 다자간 안보협약체 구성의 제안배경은 동북아 지역 대미의존도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러시아의 역할증대를 위한 의도와 함께 한반도에서의 분쟁방지, 역내 안보위협을 제거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은, 특히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과의 동반자관계를 확립한 가운데 구소련의 힘의 공백을 메움과 동시에 역

22) 길정우·신상진·이유진·여인곤,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과 동북아 질서 변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 182~187.

23) Yoke T. Soh, "Russian Policy Toward Two Koreas," Peter Shearman, ed., *Russian Foreign Policy Since 1990* (Boulder: Westview Press, 1995), pp. 181~200.

내, 특히 한반도에서의 돌발사태의 방지에 미국과 공동보조를 함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자국의 군사력을 적정수준에서 계속 유지할 것이며,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역내기구의 적극적 참여 및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러시아의 영향력의 확대를 미·러의 동반자 관계 속에서 추구할 것이며 나아가,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등 주변국가와의 한시적 공조 또한 예상된다.

Ⅲ.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1. 4자회담 제의 배경과 의미

앞서 Ⅱ장에서 우리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이해당사국의 탈냉전시대에 있어서의 신국제질서관과 동북아 정세에 대한 그들의 개괄적인 인식을 간단히 살펴 보았다. 미국을 위시한 동북아의 주변국은 탈냉전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국제질서 또는 동북아 질서 구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이같은 인식은 그들의 이해나 국가이익의 극대화라는 범주 안에서의 동북아 국제질서구축을 염두에 두고 있음은 부연할 필요가 없다.

그 같은 관점에서 한국은 탈냉전 시대를 맞아 남북한간의 문제도 지역질서의 재구성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며 또 한반도문제는 비단 남북한 당사국에 국한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문제로 비화되기 쉽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지난 4월

에 북한에 제의한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회의체에 남북한 당사국 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회담의 참여자로 끌어들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앞서의 본 세미나의 전반부에서 한국정부가 4자회담을 북한에 제의한 의도와 배경을 상세히 연구·분석하였기에 재론할 필요가 없지만, 본 연구의 진행상 필요한 부분만을 간단히 서술하여 논의 형태를 이끌어 가려한다.

첫째, 4자회담은 한국정부가 북한의 한반도문제 해결방식, 즉 한국배제와 북·미 대화구도를 어떠한 형태로든지 차단할 필요를 인지한데서 비롯되었다. 한반도의 정전체제로부터 평화체제의 구축에 있어 북한은 남한배제전략을 강력히 추진하여 왔고 이 과정에서 북한이 전술적으로 선택한 이른바 공세적 ‘벼랑끝 전술’은 정부의 우려대로 북·미간의 직접적인 교섭과 협의를 통한 한반도 문제해결 양상으로 진행되어 갔다. 따라서 정부는 이같은 북·미간의 연결고리를 끊어야겠다는 전략에서 4자회담을 제의한 것이다.

정부의 4자회담 제의는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선 후 틀어잡힌 대북한정책, 즉 개입과 확대정책(engagement and enlargement policy)과²⁴⁾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개입 및 확대정책의 특성은 탈냉전시대 북한을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북한을 ‘연착륙(soft landing)’시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마련

24) The White House, *A National Securit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July 1994).

하자는 북한 싸안기 정책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정책기조위에 미국은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서'를 성사시킨 이후 계속되는 미사 일회담, 유해송환회담, 연락사무소 설치 협상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 결과 한·미사이에 심각한 대립과 마찰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정부는 그간 끈질기게 고수해왔던 '조화와 병행의 원칙,' 즉 미국(일본)의 대북한 접근은 남북대화의 진전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한다는 대북정책기조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대북정책을 새롭게 추진할 필요성을 느꼈고, 또한 미국의 대북한 접근정책에 발목을 잡아왔던 족쇄를 풀어줌으로써 4자회담의 성패여부의 일단의 책임을 미국에게 부담 지우는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자 함이었다.

둘째, 동북아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4자회담을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의 구성에 대한 정부의 남북한문제의 당사자해결 기존의 원칙에서 벗어나 한반도문제의 국제화, 즉 항구적 평화구축 과정에 외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이미 앞서 밝혔듯이 한반도문제가 지닌 성격이 남북한간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냉전이라는 국제정치의 확대재생산의 과정에서 파생된 결과라는 사실을 정부가 직시한 결과이다.

물론, 한반도문제의 국제화는 우리의 자주적 입지를 축소하고 통일과정에서 외세개입을 제도화함으로써 통일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²⁵⁾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그 성격

25) 제성호, "한국의 주도적 역할 가능한가?" 『북한』 Vol. 294 (1996. 6). pp.

상 외세 개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이를 국제문제화하여 주변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계산이다. 특히, 신국제질서와 동북아정세아래 통일 한반도의 위상과 체제가 이들 주변국의 국가안보와 동북아시아의 정세에 파급될 영향을 고려할 때 주변국 - 중국, 일본, 러시아 - 을 도외시킨 북·미간의 평화협정체결 만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즉 북한의 허구성을 주지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아울러, 미국은 탈냉전 시대 이후 동북아에서 새로운 패권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의 하나가 대북한 접근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과정상 전술적으로 한국 배제는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그 결과 한국정부의 4자회담 제의는 북·미간의 직접적 접촉을 인정해주는 반면 '주변국 끌어들이기'라는 새로운 중국카드로 미국의 북한관계개선의 속도와 폭을 조절하겠다는 미국 견제의 遠慮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4자회담의 제의는 정부의 대북한통일정책을 다자적 협의 형식을 빌어 수세적 대북 정책으로부터 공세적 대북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제네바회담 이후 북한의 대미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정전협정 와해공세와 비무장지대와 판문점 공동수비 구역에서의 군사훈련, 북·미간 일련의 예정된 회담일정에서 보듯 북한의 정치적·군사적 공세로 남북문제에서 정부는 북한에게 주도권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 아래서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 기도를 저지하고 북·미간의 평화협정체결을 기도하

는 북한의 전략을 무력화 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대응방안이 4자 회담이다. 또한 북한과 관계개선을 통한 「신태평양공동체(New Pacific Community)」란²⁶⁾ 커다란 틀을 구상하고 있는 미국의 신동북아전략에 남북관계 개선을 전제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접촉을 계속 가로막을 수 있는 대안도 없는 한국정부로서는 미국에게 명분도 주고 북한의 평화협정체결 논의는 4자회담 안에서 만이라는 「미국읽어매기」라는 실리를 얻고자 함이었다.

이미 정부는 미국의 대북한 개입정책과 북한의 공세적 평화공세에 밀려 40여억 달러를 상회하는 경수로 원조를 집행하기 시작하였고 연간 50만t의 증유지원, 15만t의 쌀 지원 등 실속없는 투자만을 해오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생색만 내는 미국과 간단없는 북한의 공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중국을 끌어들이 미국의 북한외존 전략을 상쇄함과 동시에 4자회담이란 다자간 국제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해서 북한이 구상하고 있는 한국배제 전략이란 공세적 연결고리를 끊고 북한과 미국을 한국이 주도하는 회담장안으로 끌어들이는 정부가 주도권을 쥐 공세적 전략을 마련한 것이다.

다자적 협의체 형식에 관련하여, 정부는 한반도의 변화가 초래할 지역안보환경의 변화와 주변국의 영향을 가정할 때 4자회담을 통해 차제에 정부가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역내국가간의 갈등과

26) Harry Harding, "The Clinton Administration Vision of New Pacific Community" (Europe-East Asia Economic Forum in Hong Kong, Oct. 1993), p. 13.

분쟁을 조정·해결할 수 있는 다자적 안보협약체 구성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궁극적 문제해결은 물론 남북한간의 당사자에 의해 해결해야함이 원칙이지만 한반도 문제가 지닌 속성상 주변국의 참여와 논의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원천적 해결에 이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주변국을 끌어들여 다자적협의를 병행,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도 내재되어 있다 하겠다.

정부의 이같은 의도와 배경 하에 마련된 4자회담의 성패여부는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주변국의 이해와 협조에 달려 있지만, 성패의 많은 부분은 회담의 주 당사자인 북한의 성의와 태도 여하에 달려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북한의 예상되는 입장과 자세는 본 논문 주제 밖의 사항이고 또 앞서의 논문에서 이미 상세한 분석과 토의가 이루어진 상태여서 주변국의 입장과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에 국한하겠다.

2.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1) 미국

미국이 인식하고 있는 국제정세에 관한 서로 상반된 관점과 함께 대응방식도 다르게 나타남은 이미 II章에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상이한 관점, 즉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적 관점의 공통된 목표는 미국이 동북아의 안정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체제의 확산, 그리고 미국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적 발판을 확보에 있다”고²⁷⁾ 하딩(Harry Harding)은 말하고 있다.

냉전시대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은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이었다. 그러나, 봉쇄정책의 주적이었던 소련의 붕괴는 새로운 전략적 개념의 수립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현실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지닌 만큼 세계지역, 또한 동북아 지역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의 세계 주요지역에서 강력한 정치 군사적 패권이라는 냉전적 개념은 미국의 경제적 위상의 상대적 약화와 더불어 소멸되고 탈냉전시대 안보개념은 지역적 불안정 요소들의 제거와 여러 가지 무형적 형태의 불확실성으로 전환된 이른바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개념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였다.²⁸⁾ 즉 직접적 군사안보 개념으로 부터 보다 포괄적인 미국인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국제경쟁력 제고와 민주주의체제 확산이라는 간접적인 문제로 안보관의 변화를 갖게 되었다.

탈냉전시대 미국이 설정한 목표달성을 위해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구체화된 전략이 클린턴행정부의 개입과 확대정책이고, 그 같은 동아시아 정책의 하위정책이 바로 대한반도 정책이다. 미국은

27) Harry Harding, “The Clinton Administration Vision of New Pacific Community,” pp. 13~15.

28) Richard H. Solomon, “From Cold War to Hot War,” A Presentation at the Pacific Rim Forum, Sandiego, California, May 1992; 이삼성, 「한반도 핵문제와 미국의교」 (서울: 한길사 1994), p. 317.

탈냉전시대에 동아시아 새국제질서 구축과정에서 우방국에겐 쌍무
적 안보관계로 지역안보를 도모하는 개입정책과 북한 등 비우방국
에 대해 미국과 함께 안보 유지를 위해 협력해 나가는 확대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탈냉전시대 미국의 동북아시아에서 구체적 전략형태로 드러난
것이 부시(Bush)정권의 동아시아전략(EASR: East Asia Strategic
Report)이다.²⁹⁾ 그 주요 내용은 냉전시대의 전세계차원의 대소련봉
쇄전략에서 탈피하여 분쟁발생 가능지역에 대한 선별적으로 개입
하는 전략으로 향후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전진 배치된 미군
사력의 수준을 10만 명까지 유지하고 한국, 일본, 필리핀에 배치된
미군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클린턴 행정부는
미국방장관 애스핀(Les Aspin)에 의해 마련된 'Bottom-up Review'³⁰⁾
에 따라 'Win-Win' 전략을 구상하기에 이르렀고, 탈냉전시대 미국
의 국가이익의 극대화 전략으로 구상된 것이 개입과 확대정책이다.
즉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안보상의 적극적 협력과 자
유시장과 민주주의 확대전략을 통해 동북아에서 지속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클린턴정부의 이같은 커다란 구상 실현의 전제조건이 우
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달려있고 이를 위해 북한을 미국이 주
도하는 새로운 동북아질서에 끌어들이는 필요가 절박하였다. 미국의
전략이 북한과 관계개선이란 정책으로 가시화된 것은 이런 맥락이

29)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or the Asian-Pacific Rim: Looking
Toward the 21st Century*, (April 1990).

30) Les Aspin, *Report on the Bottom-Up Review*, (October 1993).

다. 따라서 미국(일본)의 북한접촉의 속도와 폭은 남북대화과 조화·병행하여야 한다는 한국정부의 주장과 종종 마찰을 빚을 수 밖에 없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에 관련하여 미국은 처음부터 입안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였고 또 적극적인 찬성과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³¹⁾ 미국이 4자회담에 적극적인 지지를 하게된 배경은 무엇보다도 한국과의 외교적 마찰없이 미·북한 자유로운 접촉과 관계개선을 위한 길을 마련해 두고자 함이었다. 미국으로서는 전통적 동맹국인 한국과의 관계훼손을 야기하면서 까지 북한과 관계개선을 추구하기에는 외교적 손실이 너무나 크며 다른 한편 미국은 신동북아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접촉을 마냥 지체할 수도 없는 외교적 딜레마에 놓여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체제로 부터 얻을 수 있는 득실(costs and benefits)을 열거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국이 추구하는 동북아 질서 형성에 보다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행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사실 미국의 입장으로서 지역적 차원의 미국 역할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북한 관계개선이란 전제조건이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신동북아 국제질서 형성에 커다란 걸림돌(북·미간의 관계개선)이 되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었던 바 이같은 장애물 제거는 미국의 외교적 행보를 자유롭게 할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문제와 북·미관계개선을 분리시킴으로써 한·미간의 갈등요인을 제거

31) 「동아일보」, 1996년 4월 16일.

시킬 수 있다. 그 결과 한국정부의 우려를 불식시켜 대북한정책에 관련하여 표면적으로 한·미 공조체제의 복원과 동시에 효과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둘째, 그 동안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 등이 동북아에서의 다자적 안보협약체 구성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거론된 데 반하여 미국정부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4자회담의 진행방식과 관련하여 이 같은 외교적 환경에 미국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 해서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그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대외적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예상했을 것이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이 4자회담을 거부하고 북·미간의 평화협정체결 만을 고집할 경우 미국이 4자회담의 성패에 관련하여 책임을 모면할 수가 없게 되었다. 특히 4자회담을 성공시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려면 북한과 중국까지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의 협조 없이는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낼 만큼 영향력이 있는 국가는 현실적으로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4자회담이 답보상태에 머무를 경우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선언적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모면하기 어렵다.

넷째, 한반도 평화체제에 있어 큰 비중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러시아와 일본의 배제는 회담자체의 성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들의 협조 없이 과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이 미국의 구상대로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그들의 협력을 어떻게 유도하는냐는 회담의 성공 뿐만 아니라 평화체제의 구축 및 유지에도 하나의 변수이며 이점이 미국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미국의 북한과의 대화과정에 있어 한국정부는 완전히 배제되었다. 따라서 4자회담제의 상당부분이 미국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감안해 볼 때 한국정부를 4자회담이라는 틀 속에 묶어 두려는 의구심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으며, 4자회담을 지지하는 미국의 의도가 궁극적으로 「분단의 제도화」로써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한반도의 통일보다는 동북아의 지역안정과 현상유지에 보다 관심을 두는 미국의 정책으로 판단되어 반미감정을 야기시킬 소지가 크다는 점이 앞으로 미국의 한반도정책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판단된다.³²⁾

한반도를 포함한 미국의 동북아 정책은 현상유지에 있으며 4자회담과 관련하여 득실을 가늠하여 볼 때 미국은 외교적 위험부담보다는 실리가 크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즉 미국은 4자회담을 통해 북한에게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인 미국과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북한에게는 명분을 주고 한국정부에게는 평화협정 논의구조에서 한국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 줌으로써 한국정부의 우려를 불식시켜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어 낸 것이다.

32) 「동아일보」, 1996년 4월 18일.

(2) 중 국

중국의 4자회담에 관련한 공식적 입장은 신중을 기하면서 일단 긍정적 참여라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4월 한국정부의 4자회담제 의에 대해 중국은 정전협정의 실질적 당사국으로서 한반도 평화 유지에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고 아울러 한반도 문제는 당사국간의 협상에 의해 해결하여야 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표명 하고 있다.³³⁾ 따라서 실질적 정전협정 조인국에 의한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이라는 북한의 입장과 한국이 정전협정의 조인국이 아니지만 당사국이라는 점에서 한국참여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이중 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왜 중국은 4자회담에 있어 한국과 북한의 양쪽 입장을 모두 두 든하는 등거리 외교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대 답은 중국이 인식하고 있는 동북아 정세와 외교적 목표, 그리고 국내적 상황에서 찾아봐야 한다.

첫째, 동북아 정세와 관련하여 중국은 신동북아질서 구축에 있 어 중국이 일정한 역할 분담을 맡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이 판단 하고 있는 동북아 정세는 구소련의 붕괴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에 의한 四角體制의 형태를 띠게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 지역의 국제질서 형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국의 이익과 위 상을 최대한 보장 받으려 하고 있다. 특히 신동북아체제속에 영 향력이 감소된 러시아와는 달리 중국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증가

33) 위의 글.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중국의 안보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반응과 함께 그 같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려 들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와 같은 동북아안보환경과 한반도에서의 현상유지가 중국에 유익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급격한 변화를 원치 않고 한반도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바라고 있는 중국으로서 중국이 회담 참여국가로 포함된 4자회담의 성격과 그들의 입장이 일치하는 상황하에서 4자회담에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둘째, 신동북아질서와 관련하여 “미·일 신안보체제”라는 새로운 안보환경은 중국의 한반도문제에 더욱 적극적 개입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즉 미국과 일본의 신안보체제는 대중국봉쇄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아래서 북한체제의 몰락이나 외부에 의한 붕괴는 중국의 전통적 우방의 손실을 의미하기에 그에 대한 방지책이나 억제책의 하나로 북한과의 과거와 같은 혈맹관계를 복원할 필요성을 절감케 되었다. 또 한국과의 긴밀한 정치, 경제적 교류는 미·일의 대중국 포위망을 약화시키는 견제 역할을 하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리라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중국이 4자회담에 대한 관심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중국의 입장은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셋째, 중국을 둘러싼 주변국의 급격한 환경의 변화는 중국이 추구해왔던 경제발전이라는 목표달성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가져다 준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같은 돌발사태는 필연적으로 중국의 개입을 유도케 되며 이는 강대국간의 지역패권

을 위한 갈등국면으로 치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쌍방간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은 중국이 추구하는 경제발전과 현대화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4자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점진적 변화를 가져오는 기쁨으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다 하겠다.

넷째,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 지나친 미국 편향의 정책추구에 불만을 지니고 있었던 북경당국은 한반도 문제와 결부하여 이 같은 북한의 대미의존을 견제함으로써 대북 억지력을 회복하는 동시에 미국(일본) 세력의 팽창을 저지하고 중국이 의도하는 동북아 질서 구축에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사회주의체제의 동맹국으로서 대미관계를 통한 경제소생과 체제유지라는 북한의 입장을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한반도문제 해결에 관련하여 북·미관계의 밀착 등 한국의 배제나 중국의 소외를 반대하고 있다.

다섯째, 북한의 핵문제에서 불거진 한반도의 긴장상태에서 보듯 한국과 미국은 4자회담에서도 중국의 막후 영향력 행사를 원하고 있으며 또 중국으로서는 대만 문제로 말미암아 골고러워진 미국과의 관계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정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의 평화체제는 궁극적으로 중국의 협조와 절대적 지지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미국이나 북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환영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4자회담과 평화체제에 관련하여 중국의 입장은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이 취할 입장을 몇 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예상해 볼 수 있다.

첫째, 중국은 북한이 우선하여 4자회담에 임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중국이 4자회담에 대해 지지하는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는 대외적인 선언에 불과할 뿐이며 북한에게 외교적 압력을 가하거나 북한의 저항을 불러 일으켜 가면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으리라 예상된다. 이는 북한을 강요할 경우 북한과의 관계회복으로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압박국면으로 부터 벗어 나고자 하는 중국의 안보전략에도 상치될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중국의 입장이다. 4자회담에 원칙적인 찬성을 공식화하는 외교적 입장과 북한이 적극적인 참여의사가 확인되어 회담개최의 분위기가 성숙될 때 까지 중국의 자세는 관망의 자세를 계속 견지하리라 예상된다.

둘째, 중국이 4자회담에 임하는 자세가 수동적이라 하나 중국은 회담이 진행될 경우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가 갖는 성격과 내용이 중국의 안보와 동북아 질서 증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국가이익의 최대화라는 중국의 입장으로 보아 적극적 자세로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국이 북한과의 혈맹이라는 안보적 특수관계나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통한 이익증진이라는 점, 또한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입지 강화라는 점, 동북아 신질서구축에 중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중국의 동북아정세관에서도 예

상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4자회담이 북한의 거부로 회의성사 자체가 결렬되었을 경우 중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정전협정 당사국으로서 북·미의 양자회담이나 또는 북한, 미국, 중국만이 참여하는 회의는 한국의 참여 속에 한반도문제 해결이란 종래의 중국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며 평화체제효력의 문제도 발생되기 때문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본과 러시아를 참여시킨 6자회담의 회의체 구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남북한 양쪽 모두 반대하는 현상황 아래서 중국이 회담주체의 성격을 주도하는 입장에 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한반도문제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형성 과정 중에서 중국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사태가 발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 기회에 독자적인 위상을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과거와 같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떨어졌다고는 하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한국이나 미국이 중국의 협조와 조정 없이 북한문제 해결에 효과를 얻어낼 수 없음을 이미 핵문제 타결이나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제재논의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내어 보였다. 따라서 중국은 동북아에서 탈냉전 후 유일 강대국으로 남아있는 미국과 한반도에서 영향력 확대를 놓고 치열한 외교전을 벌일 전망이다. 남북한과 동거리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치적 영향력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4자회담 뿐만 아니라 평화체제구축에 대해서도 막후 조정자의 역할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국익의 최대화를 위한 실리 외교를 지켜나가리라 판단된다.

(3) 일 본

한국정부가 제의한 자회담에 대해 적극적 지지한다는 것이 일본의 공식 입장이다. 이같이 일본이 4자회담에 적극적 지지로 나서는 배경에는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의 구상을 사전 설명과 함께 일본정부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한국정부가 추진하고자하는 4자회담의 참여국으로도 배제된 채 일용 적극적자세로 이를 환영하는 외교적 수사는 한반도 정치적·안보적 상황 변화에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일본의 입장으로 볼 때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일본이 4자회담과 한반도평화 체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득실을 가늠해 보면 그들이 4자회담을 지지하는 배경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탈냉전의 신동북아질서 구축의 일익을 담당하여 동아시아에서 경제력에 걸맞은 정치대국으로서의 등장은 탈냉전시대 일본의 최대 관심사이다. 구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패권적 야망의 발흥, 특히 역내 세력균형에 관건을 쥐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정세 변화의 움직임 등에 바탕을 둔 일본의 동북아정세관은 급격한 역내의 세력변화 보다는 점진적인 세력조정이 일본의 국익에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들출적인 북한의 행동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끄는 4자회담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34) 정노관, “4자회담과 러·일의 속셈,” 『북한』, 통권 294호 (1996년 6월), pp. 65~71.

구축을 내심 일본은 반겼을 것이다.

첫째,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는 일본의 대북한정책중 주요 현안이다. 따라서 최근의 북한의 정전협정파기 선언과 동시에 일련의 군사행동은 일본이 예정했던 북·일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4자회담 제의는 긴장국면의 남북한 관계를 벗어나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세변화로 판단했을 것이다. 한국의 총선이 끝난 후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재교섭을 하기로 일정을 잡아 놓았던 일본으로서는 긴장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속에 북한과의 접촉은 향후 한·일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을 예상했던 터에 4자회담이 한반도 평화문제와 미국의 북한접촉과 분리시키겠다는 한국정부의 정책전환은 일본으로서는 한국을 의식치 않고 자유로운 여건아래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 외교적 부담이 크게 줄게 되었다.

둘째, 일본은 한반도문제의 직접적인 당사국도 아니며 또한 정전체제 조인국도 아니여서 한국정부나 북한이 주장하는 협의참여국 그 어느 조건 하나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외자적 입장이다. 따라서 미국이나 중국이 4자회담 참여국으로서의 한반도문제 관여와는 입장이 사뭇 다르다. 4자회담의 성격상 일본이 회의참여국이 될 수도 없고 일본이 참여하는 6자회담 등 직접 한반도 문제에 관여하는 형식의 다자간협의체 구성을 원하고 있지만 달리 이를 거부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본으로서는 차선이나마 4자회담을 내키지 않지만 찬성과 지지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정부가 제안한 4자회담을 지지함으로써 대북한 공조체제가 존재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함으로써 북·일간의 접촉과정에 묵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예상하는 한국정부의 우려를 잠재우는 동시에 국교협상 과정에 지나친 북한의 요구(식민지처리문제, 전후 보상 및 청구권, 재일 조선인 및 일본인 배우자 방문 문제 등)를 사전에 봉쇄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결정이다.

넷째, 평화체제와 관련지어 판단할 때,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이루어 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하고 냉전종식후 일본의 제1의 가상적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고자하는 일본의 전략에 매우 유리한 국면을 가져다 주리라 판단한 듯하다. 북한의 불투명한 현정세에 비추어 한반도 긴급사태의 발생은 북한인의 대량난민의 유입, 최악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 공격까지 상정하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도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는 일본의 가장 바라는 일이다. 따라서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지지하는 일본의 기대는 국제적인 논의의 틀 속에 북한을 끌어들이는 것이 일본의 안정을 담보해 주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미·일간의 '신안보공동선언'³⁵⁾의 주요 목적이 이 지역 내에서 군사적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나 결과적으로 아·태평양지역에서 일본

35) 「동아일보」, 1996년 4월 17일.

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미국이 인정해준 것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일본의 관점에서, 이는 향후 동북아시아내 중국과 러시아연합과 미국과 일본연합을 축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신 냉전적 군사·안보질서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하여 일본의 적극적 지지 입장은 일본의 군사전략에 대한 남북한의 경계심을 불식시키고 하는 의도라고 판단된다.

(4) 러 시 아

탈냉전시대 러시아 동아시아정책의 주안점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 행사에 대한 적극적 견제이다.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에 의한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적 영향력 행사에 대한 러시아의 견제정책의 대강은 중국 그리고 북한 등 구소련의 동맹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정치적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의 연장선에서 러시아의 목적은 동아시아지역에서 강대국간의 세력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은 동아시아 정책의 일환으로써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 재편과정에서 구소련이 누렸던 관련당사국으로서 지위회복과 발언권 확보에 있다. 그같은 맥락에서 북한체제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발생될 지도 모르는 북한체제의 붕괴나 남한으로의 흡수통일, 또는 한국이나 미국이 주도하는 또다른 방식의 한반도 통일은 러시아의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회복에 차질을 가

져오기 때문에 러시아는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남북한의 화해를 위해 중재자 역할을 모색하고자 하며 또 남북한 및 미국·중국·일본·러시아를 포함한 다자간 회담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문제에 관련하여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의도와 탈냉전시대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발언권 회복을 염두에 둔 포석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지난 90년 한·러간의 외교관계가 수립된 이래 상대적으로 한국편향의 외교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를 계기로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영향력 확보의 교두보를 마련함은 물론이거니와 한국과의 긴밀한 경제교류로 러시아의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함이었다. 이러한 러시아의 정책은 역설적으로 북한과의 관계악화라는 부수적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한국 傾倒의 외교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 북한과의 관계회복을 위한 러시아의 노력을 여러 곳에서 감지할 수 있다.

러시아의 대 한반도정책의 최우선의 초점은 통일한반도의 체제와 위상이다. 통일한반도에서 반러시아적인 체제의 수립은 러시아에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할 과제이다. 이는 앞서 밝혔듯이 러시아가 구상한 동북아에서 러시아 입지 구축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러시아의 4자회담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었으나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우호적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가 4자회담에 관련하여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 아래 한반도 문제 해결을 모색하여야 한다며 4자회담에 러시아 배제에 유감의 표명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국제적인 다자회담을 열어 한반도 문제 해결이라는 종래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³⁶⁾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4자회담이라는 형식에 반대할 뿐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이라는 내용에 찬성한다는 러시아의 입장은 한·러 외무장관 회담(1996. 5. 7)에서도 거듭 드러났다.³⁷⁾

러시아가 4자회담에 거부반응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첫째, 한반도의 정전체제로 부터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4자회담은 러시아가 참여한 국제적 다자회의의 구성이란 입장과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분단과 분쟁의 직·간접적인 당사자인 러시아 배제 그 자체는 한반도문제의 성격상 받아들일 수 없고 또 한반도 뿐 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부터 영향력 상실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반도문제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 동아시아 정책의 종속개념에 불과하나 한반도문제가 지닌 특성상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러시아 안보뿐만 아니라 동북아 질서 및 주변강대국의 세력 재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소홀히할 수 없다. 동아시아 신질서구축에 러시아의 위상과 영향력 제고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문제는 러시아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호재였고 또 구소련의 영향권 내에 있던 중국과 북한을 끌어들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4자회담에 러시아의 배제 그 자체는 한반도에서의 정세 변화가 가져다 줄

36) 「국방일보」, 1996년 4월 19일.

37) 「동아일보」, 1996년 5월 7일.

러시아 안보환경과 러시아가 구상하고 있는 탈냉전 시대의 동북아 국제정세관에 비추어 볼 때 러시아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4자회담 반대의 배경은 새로운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의 연장선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러시아의 정책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있어 남북한 당사자해결원칙을 고수해왔고 북핵문제에서 보듯 러시아는 한국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편에서 왔다. 이런 친한국정책은 멀리 소연방이 해체된 후 러시아의 친서방외교정책으로 외교노선이 傾倒되면서 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외교노선이 점차적으로 탈서구 독자외교노선을 지향하면서 부터³⁸⁾ 강대국 위상을 찾기 위한 공세적 신외교노선을 수립한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한국 일변도의 외교노선에서 북한과 남한사이 대등한 동반관계 수립이라는 모습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 한·소수교이래 소원한 관계를 유지했던 북한과의 관계복원이란 양상으로 발전케 된다.³⁹⁾ 이런 맥락에서, 4자회담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입장은 한반도 정책의 재조정을 의미하며 앞으로 남북 균형정책이 계속되리라는 점을 豫斷케 한다.

넷째, 러시아의 4자회담에 대한 반대의사는 표면적으로 4자회담에서 소외에 따른 즉흥적인 반발이라기 보다는 차제에 러시아도 주변 강대국처럼 한반도문제에 대한 일정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

38) 강원식, “패권이후체제의 동북아질서,” pp. 33~35.

39) 정노관, “4자회담과 러·일의 속셈,” pp. 64~71.

을 대외적으로 부각시키고자 함이며 또 러시아의 참여 없이는 한반도의 문제처리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한국정부에 인식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 아울러 4자회담에 대한 러시아의 부정적 반응은 한국정부의 미온적 경제협력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이며, 동시에 북한을 끌어들임으로써 러시아의 한반도 영향력 복원을 위한 앞으로의 활발한 움직임을 예상케 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입장은 4자회담이라는 형식에 반대하고 있을 뿐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은 러시아의 안보와 국익에도 도움을 가져다 준다고 판단하고 이를 환영하고 있다. 러시아로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일익을 담당하여 향후 한반도 정세변화에 일정지분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동북아 국가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과의 대등한 입장을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4자회담이 아닌 러시아가 포함된 어떤 형식의 협의체(6자회담 또는 8자회담)에 적극적 찬성을 하리라 예상해 볼 수 있다.

IV. 결 론

체제붕괴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된 대미협상과정에서 두 가지 원칙, 즉 한국정부를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려는 것, 또 하나는 북·미수교와 북·미 평화협정체결을 일괄 타결한다는 대외정책을 일관되게 수행하고

있다. 이런 북한의 정책목표 중 전자는 이미 북한이 의도한 대로 성취되었고 후자 또한 반타작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북·미간의 수교를 향한 빈번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時點에서 최근의 정전체제의 와해를 위한 일련의 군사적 행동에도 불구하고 북·미평화체제를 위한 북한의 企圖는 한·미간의 확고한 입장, 즉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한 당사자에 의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원칙에 의해 좌절된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평화체제 구축에 한국배제라는 입장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반대와 또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전반적인 동북아 정세,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많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와 이를 통한 대미평화협정 체결주장은 미국과 상설안보협의체를 가동시켜 미국과의 적대관계 해소라는 일차적인 목표를 갖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불안한 북한체제를 유지하려는데 있으며 나아가 평화체제를 맺어 정전협정을 관장하고 있는 유엔사의 해체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한반도 적화통일을 이루겠다는 企圖에서 나온 것임은 이미 많은 論者들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⁴⁰⁾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에 관련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비단 4자회담에서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해 7월 미국에서 있었던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문제는 남북

40) 남만권,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의 접근방안,” *The Weekly Defense Review*, No. 164(1995. 12), pp. 1~13; 김상범, “한반도 정전체제: 의미와 전망,” *The Defense Weekly*, No. 594(1995. 8. 7), pp. 1~17.

당사자간에 해결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⁴¹⁾ 또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지난해 광복 50주년 경축사에서 당사국원칙과 관련 국가들의 협조와 지지라는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는데⁴²⁾ 이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 4자회담이라 할 수 있다.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이란 정부의 목표는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우선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유지라는 일차적 목표에 있지만 북한의 정전체제 와해기도에서 나타난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서의 한국배제, 그리고 북미평화협정체결을 통한 궁극적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북한의 전략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관심사항은 4자회담이라는 회의체 형식이라기 보다는 회담이 가져올 결과, 즉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체적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평화체제의 내용에 따라 그들 국가들이 상정하고 있는 동북아 국제질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 국가의 이해와 국가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평화체제 구축은 주변국이 바라고 있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라는 관점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 大前提는 모든 국가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지만 실질적 내용과 과정에 관련한 그들의 입장은 나라마다 다르며 또 그들의

41) 「동아일보」, 1995년 7월 29일.

42) 「동아일보」, 1995년 8월 15일; 8. 15 경축사에서 제시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관련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 당사자간 협의와 대화로만 유지될 수 있고, ② 남북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에는 관련된 국가들의 협조와 뒷받침도 필요하며, ③ 남북기 본합의서 등 모든 남북간 합의사항이 존중되어야 한다.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는 없으리라고 판단된다.

한국정부는 베트남(Vietnam)식 평화체제구축 과정을 거부하고 한국정부가 참여하는 회의형식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을 배제한채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한 평화체제구축을 고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일본, 중국 등은 한국정부의 참여를 지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자국이 참여한 다른 형태의 회의체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의 입장은 한반도문제가 가져올 파장을 고려해 어떤 형식이든 자국이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와 신동북아질서 구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근원적 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4자회담이라는 형식에만 집착하지 말고 남북한 평화체제의 성격과 내용을 구체화시켜 주변국의 이해와 전폭적 지원을 얻어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남북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평화협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미간에 남북 평화체제구축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이나 전략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평화체제문제는 정부의 4자회담제의가 북한의 외교적 공세에 맞대응하는 선언적 차원을 벗어나 진정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현장으로 승화되고 그 대책이 완벽하게 이루어 졌을 때만 달성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인내와 노력, 그리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Ⅱ. 종합 토론

빈 면

綜 合 討 論

제1분과 : 한반도의 군사문제와 북한

司會 : 최명상(공군대학 총장)

發表 : 전성훈(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반도의 핵문제와 군비통제”

양병기(청주대 교수)

“북한의 전쟁과 평화관”

討論 : 최수경(충남대 교수)

손기웅(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최명상: 감사합니다. 학자들 중에도 북한문제를 연구하는 분들은 제일 곤란한 것이 자료의 빈곤입니다. 양병기 교수께서는 좋은 자료를 가지고 좋은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수경: 저에게 토론의 기회를 주신 민족통일연구원장님과 통일문제연구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선생님이 전문적으로 북한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한 말

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조금 저에게는 분명치 않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핵문제입니다. 일단 남한의 경우에 있어서는 1991년 주한미군 핵이 철수되었고, 94년에 와서는 기본 합의문에 의해서 북한이 현재나 미래에 핵활동을 동결하기로 약속을 하면서, 전박사님께서서는 앞으로 과거의 핵문제를 북한이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것을 지키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도 북한은 과거의 핵에 대한 모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 남한만 수세에 몰리는 것이 아니냐. 즉 유사시에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핵우산을 지원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의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둘 후보가 클린턴 정부에 대해 북한에 대해 너무 유화정책을 하지 않았느냐? 북한이 원하는 대로 많은 것을 양보했고, 경수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비민주적 국가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고 협조를 했다 해서 비난을 했더니 북한에서 공화당이 승리를 하면 미·북 기본합의서를 파괴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전박사님이 보시기에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북한의 핵문제가 재론이 되면서 불투명한 길을 걷지 않을까 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4자회담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4자회담이라는 것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다. 그런데 결국 미국의 참여, 특히 최근에 와서는 미·북의 접근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의, 물론 긴장을 완화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미국의

접근을 통해 압암리에 남한에 대한 견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통상압력 등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들간에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북한의 만형적인 중국을 참여시킴으로써 균형이 되자는 뜻도 있지만 과연 중국이 참여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을까. 특히 남한에 이것이 이로운 점은 어떤 것인지. 실체는 중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한중 수교를 통해서 화해를 했지만 북한에 더 가까운 동료이기 때문에 중국의 참여가 과연 남한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양교수님께 질문하겠는데, 북한이 미국은 제국주의적 침략자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아는 것은 분단 이후의 남한에 대한 식민지, 남한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 일대일의 관계로 분단되기 전에 북한에 대한 미점령정책은 어떠한가 그 실태를 알고 싶어요. 미군으로부터 실제 당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침략자로 몰아대는지, 그렇지 않고 다만 남한에 대한 식민세력이다 해서 남한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써의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작전이 아닌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리고 문제는 왜 북한이 미국을 침략자로 몰아대면서도 접근을 시도하는가. 이것은 뭔가 유리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 적과 결과적으로 협력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이중성이다. 그리고 미국은 여기에 마치 끌려가듯 하는데 미국이 간단하게 끌려다니는 존재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름대로 북한 위에서 큰 전략을 가지고 북한과 협상을 하고 있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군사 사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선생님께서는 북한의 군사 사상은 기술적인 우위보다는 정신무기론이다. 결국 모택동이 라든지 호지명이 과거에 주창하던 바에 의한 “사상으로만 무장이 된다면 핵전쟁도 무서울게 없다. 게릴라 전을 통해서 핵을 이길 수 있다”는 전술로 미국에 승리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사상으로 무장한 나라에서 핵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을 북한은 어떻게 해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북한의 과거의 핵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도 숙제다. 그렇다면 이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런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상: 고맙습니다. 그러면 두 분들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손기웅 박사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손기웅: 감사합니다. 민족통일연구원의 손기웅입니다. 그럼 오늘 두 박사님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할까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두 분의 논문을 읽으면서 압축적으로 간결한 문장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의 전개가 짧은 문장 속에서도 논리적으로 잘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께서는, 보통 이런 자리에서 발표를 하다 보면 각주가 별로 없는데 정성을 들였다 하는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두분 박사님, 양박사님의 경우에는 북한의 전쟁과 평화관이 변화가 없다. 전박사님은 선 신뢰 후 군축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본문상의 내용의 흐름에 대한 질문이라기 보다는 제가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예를 들면 이런겁니다. 양병기 교수님께서 북한이 전쟁관을 도입할 때, 클라우제비츠가 말한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1942에 독일의 에르히 루벤도르프가 말한 “정치가 전쟁의 연장이다” 클라우제비츠의 경구를 뒤집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치는 전쟁을 위해서 항상 존재하며, 건전한 정치란 또 다른 수단으로서의 전쟁의 연장이다. 그래서 항상 국가는 준비 상태에 있고……” 그런 측면에서 루벤도르프가 클라우제비츠의 말을 뒤집어서 오히려 “정치가 전쟁의 연장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특징적인 측면은 전쟁 중이 아닌 평화시에도 모든 군의 가치관이 국민 전반에게 확산되어 있고, 모든 국민 집단이 군사화·조직화 되고, 따라서 거기에 민족주의와 결부되는 경향, 특히 루벤도르프가 이런 말을 쓸 때는 양차대전 간의 독일에서의 풍토, 일본 내에서의 군국주의화의 경향을 목도하면서 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프로이센, 독일로 연결되어 지는 프로이센 전통의 군국주의와 일본의 군국주의가 결합된, 특히 북한의 사상의 경우에는 양병기 교수님께서도 잘 지

적해 주고 계십니다만, 정신적인 무장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 왜냐하면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본이 미국에 대항할 때 경제적으로, 군사적·물자적으로 군수품에서 절대적인 열세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조치로서 기술적·물자적으로 열악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신적인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뿜을 강요하고, 죽창을 들고서 죽을 때까지 할복을 강요하는 것이 단지 일본의 무사도 정신이 아니라, 자기보다 군사적으로, 물자적으로, 기술적으로 강력한 군대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상적 측면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한 측면을 현재 북한은 미국과 대결하고 우리와 대결하는 과정 가운데 프로이센 독일의 조직화·군사화 경향과, 정신적 측면의 일본의 군국주의를 도입한,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양병기 교수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지금 북한의 전쟁관은 소위 말하는 전체주의적 군국주의에 기반을 둔 “정치는 전쟁의 연장 선상에 있다” 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의 전쟁관과 평화관 역시 전쟁의 연장선상의 논리에서 나오고 있다고 볼 때, 80년대 후반의 북한이 90년대 초까지, 양병기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북한의 몇 가지 형상적인 태도, 현실적인 평가는 전술적인 측면의 어떤 약간의 변화가 아닌가, 그것을 현실적인 태도의 변화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는가. 물론 그것을 포괄해서 다시 말해서, 북한이 이미 그 당시에 협상의 테이블에 나오는 과정 속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의 전쟁과 평화관에서 북한의 평화적·정치적인 측면은 이중성을 보여 왔었고, 그것을 총체

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전쟁관의 이해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1991년 북한의 핵문제가 터지기 이전에는 북한이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핵·평화운동 또는 그런 반핵·평화운동을 평양에서 유치해서 적극적으로 반핵시위를 벌이다가 핵문제가 이슈가 된 91년 이후에는 그런 운동에 참여나 국제회의의 조치도 일체 사라졌다는 점을 볼 때 그런 것일 북한의 전쟁관에 대한 이 중성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양병기 교수님께 하나 질문을 드린다면, 북한이 일시적으로는, 양병기 교수님은 물론 전성훈 박사님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입니다만, 전쟁관의 변화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북한이 남북대화가 막힌 상태에서 우리가 어떠한, 예를 들면 신뢰구축과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가. 군비를 증강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보충설명으로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전성훈 박사님께서서는, 역시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선신뢰구축 후에 군축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평화문제를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검토해 볼 때 저는 인류의 비극을 두 가지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류가 이 때까지 발전시키고 축적시켜 온 모든 기술이 가장 먼저 군사적 효용성을 위해 검토되어 졌다. 인류가 개발시켜 온 모든 기술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사용되어 왔고 강조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가 개발을 통해서 만든 기술이 나쁜 측면으로 쓰여진 하나의 비극이 아닌가. 두 번째 하나의 비극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군사적 무기는 인류 역사상 최소한 한 번은 실전에 사용되어져 왔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군사력을 단순히 억제를 위해서 창고에 쌓아 놓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든 화학무기든 모든 것을 실전에 적어도 한 번은 썼었다는 것이 인류의 또 하나의 비극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는 아이러니 하게도 또 다른 반면에 그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군비경쟁을 제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국제적 협상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협상을 통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왜 협상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뢰가 구축되어야 하나 하면 거기에는 인류의 또 하나의 비극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까지는 국제간의, 특히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모든 주요 군축 협정에는 다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감이 없을 경우에는 그것이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화학무기 협정이 체결되고, 미·소를 중심으로 해서 화학무기가 폐기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화학무기가 폐기가 되니까 그만큼 미국의 위협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고 반면 뒤집어 생각을 한다면 예전에 만들어 졌던 화학무기가 더 이상 낡아서 위협성에 처해 있습니다. 부식이 되어서 20~30년 된 화학무기는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사무기가

개발이 되어서 이제는 폭탄을 개발해 가지고 있지 않고 두 가지 화학물질을 가지고 있다가 전시 두 가지 물질을 혼합만 시키면 폭탄을 만들 수 있는, 그만큼 기술이 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학무기 폐기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본다면 소위 말해서 신무기를 개발해 놓고 필요 없는 무기는 폐기해 가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재래식 무기 감축 협정을 체결했다. 1990년에 냉전의 종식을 선언하면서 레이건과 고르바초프가 모여서 거창한 선언식을 하고 재래식 무기 감축 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신뢰감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소련 같은 경우는 재래식 무기 협정은 우랄산맥 서쪽의 유럽 쪽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우랄산맥 동쪽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유럽에 존재했던 많은 소련의 재래식 무기는 우랄산맥 동쪽으로 이동 배치시켜 놓고 예를 들면 군사력이 적다는 것, 유럽 부분에만 군사력을 감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군축 협정에 이르는 많은 노력을 경주했고, 근 만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단순한 군축 협정 이전에 신뢰감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많은 약화되는 의미를 가진다는 이야기죠. 특히 북한의 경우 양병기 교수님과 전성훈 박사님의 논문이 콤포스를 이룹니다. 첫째, 양병기 교수님은 북한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해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박사님은 군축 회담, 군축통제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오늘 저는 두 분 박사님의 발표의 논지를 철저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은 대화가 막힌 상태에서 군비를 통제를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런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우는 아이에게 가장 빨리 울음을 그치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 뺨을 한대 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군사적 조치가 인류 역사상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순간적 해결이 될지는 모르지만, 보다 깊은 차원의 전쟁을 초래하는 잉태의 싹이 되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로 소련의 경우 그 수많은 핵무기와 산더미 같던 재래식 무기에도 불구하고 그 무기의 중량만큼 국가적 안보가 증가되지 않고 결국은 망했다는 사실을 북한은 직시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에게 군비 통제 협상에 동참해 줄 것을 바라고, 마지막으로 전성훈 박사님께 질문을 하나 드린다면 역시 보완적인 질문입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대화가 막힌 상태에서 우리가 신뢰 구축 방안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될 것인가. 두 번째로는 전성훈 박사님이 핵문제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KEDO협상, 북한 핵문제 등이 어떻게 진전이 되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KEDO 등등을 통해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완적인 질문에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상: 감사합니다. 다음은 많이 참석해 주신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중앙에 있는 마이크나 무선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도덕성회복운동 대전지회장): 한국전쟁에 있어서는 지금 정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째서 미·일전쟁 처럼 강경하게 김정일에게 강경하게 보상을 요구하고 당당하게 경쟁을 하도록 왜 못하는지 저는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선생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만은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정일이 끝내 전쟁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상 안되죠. 또 한국도 300만이라는 희생은 했는데, 만약에 평화적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김정일이 자멸하도록 하는 수 밖에는 없다고 보는데 지금 김정일에게 유화적인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못마땅합니다. 차라리 북한에 대해서 강경정책을 취해서 북한이 자멸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최명상: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일상 교수님.

김일상(해군대학): 해군대학의 김일상입니다. 간단하게 군비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보듯이 1922년도 해군군축에서 보듯이 군축이라는 것이 물론 신뢰도 중요합니다. 만은 결국에는 군축은 강대국이, 말하자면 장기관에 비유한다면, 강자가 약자에게 차·포 떼라 하는 것이 군축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신뢰구축을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가능한 것이냐.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세력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세력균형이라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좋지만 실제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럼 이것도 여러 가지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상: 전성훈 박사에 대한 질문이죠? 예, 알겠습니다. 먼저 누구인지 밝혀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민족통일협의회): 실향민의 한 사람입니다. 김성수입니다. 두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과연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참 궁금합니다. 항상 보면 보도에서, 우리 나라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든 있다, 없다 말하는데, 정말로 궁금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 자리에 발표를 하면 비밀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정말 있을 것이냐, 없다 하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분단의 역사가, 우리가 분단을 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죠. 강대국들이 주변국들에 의해서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것의 결과는 오늘 이렇게 모여서 전쟁 없이 어떻게 통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만은, 저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쟁 없이는 통일을 하는 것이 참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정일은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정권을 맡아 쥐고 있습니다. 만은 김정일이 죽으면 어쩌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5년동안 살다 나왔지만 그 사람들 실체로 봐서 도저히 다른 사람이 또 계승해서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리는

상대방이 바라보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 우이독경 식으로 우리가 통일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자꾸 주장을 합니다. 만은 중요한 것은 주변 국가에서 우리를 통일시켜 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최명상: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질문을 하실 때는 발표자가 두 분이니까 핵문제와 군비통제에 대해서는 전성훈 박사님께 북한의 전쟁과 평화문제는 양병기 교수한테 지정을 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완섭(민족통일협의회): 조금 전에 독일 통일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서독이 통일될 때 구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동독을 놓아줌으로써 통일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우리 한반도 남북 통일도 역시 중국이 북한을 놓아줄 때 통일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강인구(공군대학): 저는 전성훈 박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전성훈 박사님께서서는 논문의 끝에 군비통제 추진의 기본 방향과 관련해서 그 순서를 선 신뢰구축 후 군축 순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92년도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군비통제 면에서 저희 측에서는 선 신뢰구축 후 군비통제, 북한 측에서는 선 군비통제 후 신뢰군축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북측의 주장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북측의 주장대로 선 신뢰구축 후 군

축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국방비가 매년 증가되고 방위력 개선 산업도 현대무기, 첨단무기 등의 질적인 면에서 증가되었기 때문에 북쪽의 주장을 받아들이다라든 우리가 군비통제 면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명상: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기속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2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다 못 받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제까지 나온 질문도 10분 내로는 답변하기 힘들 것 같아서 지금부터 발표자들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각각 10분씩입니다.

전성훈: 질문하신 것의 순서를 거꾸로 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중령님께서 말씀하신 선 군축 후 신뢰구축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군 일각에서 이미 나왔던 문제이고 여러 분들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선 신뢰구축 후 군축이 하나의 경직된 기본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것이 남북한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합리적이고, 유럽의 경우에 비춰 볼 때에도 그것을 기저에 깔고 군비통제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것이고, 강중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고, 또 북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막상 군축의 협상 테이블에서는 사안별로 군축이 먼저 이루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선 신

퇴구축 후 군축 문제는 좀 더 융통성 있게 받아들여져야 할 원칙입니다. 만은 일단 협상 전략 차원에서는 북한과 마주할 때 정면으로 내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해군 대학의 김교수님의 답변도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통일문제에 관련된 연구를 해 온 결과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확정적인 평가를 내린 어떠한 보고서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CIA의 여러 가지 보고서들도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을 가능성이 50% 정도 된다 하는 이러한 확률적인 가능성만 밝혔을 뿐이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단정적인 대답을 하는 사람을 없구요.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러시아 정보부 사람이나, 러시아 외무부 장관인 코지레프 같은 사람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제가 북한의 핵무기 시설에 가 본 것도 아니고, 북한의 핵무기를 개발하는 사람을 만나 본 것도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북한이 완성된 핵무기를 가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이 현재의 평가 같습니다.

그리고 손박사님께서 말씀하신 현재의 KEDO 핵문제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가. 지금 기본합의서가 체결된 후의 북한 핵문제의 관심적인 사항은 사실 현재와 미래의 핵이 동결되면서 과거의 문제가 남아 있고, 정수로 지원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의 문제는 최교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기로 하구요.

KEDO 문제는 공급협정이 지난 12월 15일 체결되고 현재 뉴욕에서 후속 의정서 협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북한의 인력들을 사용하는 문제하고 경수로 부지 인수하는 문제가 협상이 되고 있는데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 늦가을까지는 착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수로 건설하는 기술적인 문제로 이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는 가급적이면 경수로 건설 문제가 빨리 진척시키고자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KEDO의 진행은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오히려 어려움이 생긴다면 미국에서 중유를 제공하는데 비용을 마련하지 의회에서 말썽이 생기는데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한.미.일 간의 경수로 비용의 분담 문제, 또 경수로 사업을 누가 많이 참여하느냐 하는 문제에 의한 협상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약간의 문제가 있을 지는 몰라도 북한이 경수로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경수로 사업 자체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뉴욕에서 KEDO 담당자를 만나 본 결과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최교수님께서 상당히 좋은 질문을 여러 가지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아직까지도 북한의 과거의 문제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고, 북한일 핵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94년 12월 21일 제네바 기본합의문이 미국과 북한간에 체결된 이후 미국의 학자나 관료들로부터 북한의 과거 핵에 대한 발언을 하는 사람을 저는 한 명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미국의 경우에는 적어도 북한의 과거의 핵문제가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나 의혹 자체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에 비해 우리는 자신할 만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정보수단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인공위성이나 정찰기 등을 동원해서 80년대 초반부터 영변지역을 계속 관찰해서 상당량의 정보를 수집했을 뿐만 아니고 미국 내에 있는 원자력 연구소에서 영변에 있는 원자력 연구소와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축적해 있는 상황 하에서 IAEA의 사찰단이 영변에 들어가 직접 현장을 파악하여 각종 기술적인 수단에 의해서 확보하지 못했던 미진한 부분들을 직접 가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상당히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고, 또 미국이 아무리 한·미 공조가 잘 된다고 하지만 그러한 완벽에 가까운 정보는 우리 정부에 제공해 줬을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는 점에서 볼 때 우리가 과거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 정부는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을 침략자로 규정하면서 협상하는 이유. 그것은 현실적인 협상의 대상이니까 그렇게 한 거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핵문제를 포함해서 많은 것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내고 있는데 결국 도매금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아니냐 라고 하는 점에서 주된 협상 대상을 미국으로 삼는 것 같구요. 미국이 끌려다니는 듯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아까 전박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혹시나 오판에 의해 주요한 서방세계의 발전된 정치·경제 등 발전된 것들이 북한에 의해 파괴된다든지 그것 자체가 확전으로 가게 된다든지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달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정신무기론 차원에서 핵전쟁까지 나온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과, 다음 번의 질문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을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앞서도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물질적·기술적으로 강하면 그렇게 사상적인 측면에 강조를 두지 않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도덕적 정당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죠. 미국도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월남전에 투입했는데 왜 그러면서도 마약을 하고, 월남전에서 상대도 안되는 월맹군에게 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전의 변수란 중요하다. 그것이 어떤 환경에서 보다 더 정신적·사상적인 우월감을 갖느냐는 것은 상황에 따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경우에는 과연 사상적 우월성을 공산권 변혁 이전만큼 견지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폐쇄체제라 하더라도 바로 중국의 연변 등의 상황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속에서 과연 북한 주민들이 체제의 자부심을 갖겠는지 저는 사실 내부적으로 균열이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70년대 초반까지 북한의 GNP가 우리보다 높았어요. 물론 70년대부터 한국의

GNP가 높아졌는데 그 전까지는 “북한이 지상낙원이다” 라고 비교우위론적으로 말했을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정반대로 됐다는 것을 북한의 주민들도 알기 때문에 사상무기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핵블투명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소련의 핵무기가 수 천개가 되는데 총한방 안 쓰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으로도 북한문제를 얘기할 수 있다고 보구요. 저는 핵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 자체가 모택동이 비판했던 유무기론, 무기나 물질적인 힘만 믿어서는 싸움에 이길 수 없다. 오히려 사상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되고 있다고 봅니다. 핵무기 몇 개 가지고 무기론적인 차원에서 서방세계나 변화하는 세계질서에 대항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정세변화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보구요.

주변국의 지원이 있어야 통일을 할 수 있지않느냐는 점에서는 한국측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 통일방식이 전쟁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전쟁은 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전쟁할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군사력을 동원해서 북한을 통합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지금 현재 군사국가적인 잔재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그 득실면에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하나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체적으로 북한체제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기웅 박사님의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클라우제비츠의 명제를 반대로 오히려 정치가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는 변증법적으로 모택동이 한 말을 통해서 답변을 하면, 모택동은 “정치는 피 안 흘리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전쟁과 정치가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북한의 전쟁관이 불변이라면 우리의 실질적인 조치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군사적인 대책을 가능하면 피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오히려 북한이 자기들 체제가 조금이라도 우월하다고 하는 측면에서 군사적 조치까지도 도덕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다면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 우리의 체제가 자주성과 민주성의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자세가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있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상: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토론을 마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역사적인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분단된 조국을 자유민주 체제로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가 이런 중요 문제를 논의한 것은 우리가 통일을 앞당기는 하나의 노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두 시간 동안 진지하게 참여 해주신 여러 방청객 여러분, 좋은 발표를 해주신 전성훈 박사, 양병기 교수, 좋은 토론을 해주신 최수경 교수, 손기웅 박사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분과 “한반도의 군사문제와 북한의 문제” 모든 토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분과 : 4자회담과 한반도의 평화체제

司會 : 이계희(충남대 교수)

發表 : 제성호(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남북한의 입장과
문제점”

김광렬(배재대 교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討論 : 김도태(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문홍호(서원대 교수)

이계희: 제성호 박사, 김광렬 교수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초청장에 있는 순서대로 먼저 김도태 박사께서 토론을 해 주시고 다음에 문홍호 교수께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태: 두 논문은 모두 시의 적절한 주제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세인의 관심을 모으는데 공헌하고 있으며 또한 명철한 논리전개와 성실한 서술 노력으로 뛰어난 논문을 작성,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론을 위해 여기서는 몇 가지의 대안적 논의와 의문점을 제기하려 합니다.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과 문제점”

이라는 제성호 박사님의 논문은 평화체제 형성의 기본원칙, 전제 조건 등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실체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4자회담을 평화체제 형성의 모델로 설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시도가 옳은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하며,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당사자 원칙과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주변국의 활용 모색, 그리고 4자회담에서 미·중의 주체적 역할 인정 등의 부조화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련된 남북한의 입장의 차이를 절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실적으로는 남북한의 입장이 상충되고 있음을 지적하여 제기한 고려 사항이 무의미함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지?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이라는 김광렬 교수님의 논문은 평화체제에 관한 구체적인 모형을 설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한반도 주변국들이 제각기 선호하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주변국들 사이에 발생하는 이해 대립을 정확히 평가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교수님은 미국의 동북아 정책을 패권적 지위유지에 초점을 두는 현실주의적 입장과 국가들간의 공조체제를 전제로 하는 자유주의적 입장의 혼합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탈냉전시대에 중국의 입장은 매우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계희: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토론자이신 문홍호 교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호: 감사합니다. 서원대학교의 문홍호입니다. 두 분의 논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과 문제점」이라는 제성호 박사님의 논문은 평화체제 구축, 통일문제와 관련된 남북한의 엄청난 입장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남북한간의 이러한 입장 차이와 주변 환경의 열악한 조건으로 인해 남북한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평화통일 논의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미국과 중국을 참여시키는 4자회담이 최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등 이를 성사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2+2의 회담을 일단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미·중의 실질적인 역할을 자연스럽게 축소시킴으로서(즉 4-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남북한 당사자간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이라는 김광렬 교수님의 논문의 주변 국가들의 기본 인식, 정책 방향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 클린턴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이

국가간의 상호관계, 상호 의존, 동반자 관계 등에 중점을 둔 자유주의적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현재 미국이 강조하는 국가간의 상호 의존, 동반자 관계는 그 표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패권적 지위의 불변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처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정착을 위해 주변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한반도 문제는 당사자간의 대화·협상에 의해 이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계희: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발표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성호 박사님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제성호: 우선 좋은 논평을 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김도태 박사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자회담을 모형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시도가 옳은지의 판단 여부는 논문의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아야 할 복잡하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의 입장을 전혀 외면한 채 정책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전략적 측면과 남북한 관계의 현실을 염두에 두고 정책대안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문제를 고찰하지 않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의 입장과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4자회담의 적실성과 향후 추진 방향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로 태어난 제주 선언의 4자회담 제외는 북한의 정전협정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대응하여 한·미간의 공조 체제 가동으로 이끌어 낸 「평화 이니셔티브」로서 우리가 제외한 방안 중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국들은 일반적으로 한반도 평화의 상태에서 자국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4자회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남북한의 문제는 정부가 취하는 태도처럼 당사자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4-2의 회담 진행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정부의 노력이 없이는 4-1이라는 남한 제외의 합의 사항에 한국이 끌려 들어가 이를 추진하는 입장으로 전락될 위험마저 없지 않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련된 남북한의 입장의 차이가 있음을 살펴 보았고 또한 북한 측의 주장이 허구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남북한의 입장 차이에서 위에서 말한 내용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문홍호 교수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4자회담 추진 과정에서 우리가 미국·중국을 능가하는 주도적 역할을 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선언에서 언급된 문구의 해석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범위한 긴장완화조치’부분에 대하여 이것을 넓게 해석한다면 남북대화의 재개,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쌀의 제공, 남북한 경

제협력, 핵문제에 따른 경수로 지원, 통신·통행·통상 등의 인적·물적 협력,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한국전쟁의 청산,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 북한의 미사일 수출통제 등도 포함된다고 보았을 경우 4자회담에서의 주도적 역할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로 한정하여 볼 경우에는 주도적 역할이 가능할 것입니다. 즉 넓게 해석하면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초래하여 우리의 입지를 축소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통일과정에서의 외세 개입의 제도화를 자초함으로써 자주적인 통일 노력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희: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광렬 교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렬: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북아 국제질서의 구축 과정에서 주변 국가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높은 상태입니다. 특히 탈냉정의 시대에서 미국의 역할이 동북아 지역에서 축소되고 극동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러시아가 동북아 지역에 대한 기존의 위치를 되찾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며 러시아의 지위 약화를 노려 중국이 득세하게 될 것이고 일본이 정치·군사적 면에서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패권적 지위의 유

지에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일본의 지위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력의 약화 현상에서 오는 문제점에서 미국의 지위는 약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 당사국들과의 공조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반도를 포함한 미국의 동북아 정책은 현상유지에 있으며 4자 회담과 관련하여 득실을 가늠하여 볼 때 미국은 외교적 위험부담 보다는 실리가 크다는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즉 미국은 4자 회담을 통해 북한에게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인 미국과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북한에게는 명분을 주고 한국 정부에게는 평화협정 논의구조에서 한국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줌으로써 한국 정부의 우려를 불식시켜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관심사항은 4자 회담이라는 회의체 형식이기보다는 회담이 가져올 결과, 즉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체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평화체제의 내용에 따라 그들 국가들이 상정하고 있는 동북아 국제 질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 국가의 이해와 국가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화체제의 구축은 주변국이 바라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라는 관점에 부합되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계희: 두 분의 답변 감사합니다. 6시 30분에 2층 백제홀에서 만찬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러나 만찬의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사회자의 권한으로 플로어에서 두 분이나 세 분 정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민족통일협의회): 북한은 과연 흡수통일을 수용하겠는가? 아니면 무력 도발을 행할 것인가?

박내현(공군대학): 평화체제의 구축을 말씀하시는데 평화체제란 무엇입니까? 남한과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의 개념을 나누어 설명해 주십시오.

류홍태 북한체제가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하여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계희: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만 질문을 받고 답변을 아주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성호 박사께서 해주시고, 두번째와 세번째 질문은 김광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성호: 앞으로 북한에서 일어날 사건을 흡수통일과 무력도발로 양분하여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북한은 김정일의 승계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가장 많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김정일이 아무리 궁지에 몰리더라도 흡수통일은 지양할 것이며 경제난으로 인하여 무력도발도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김광렬: 평화체제의 개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평화란 사회 구성원간에 상호 공존하기로 자발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남한 측에서 주장하는 평화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의 개념은 미군 철수와 반민주적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체제의 앞으로의 발전 전망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무력도발이라는 무모함을 도외시할 수도 없습니다.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4자회담을 하나의 정책대안으로 삼고 이에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계희: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2분과 4자회담과 한반도의 평화체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회의일정

- 13 : 30~14 : 00 등 록
- 14 : 00~14 : 20 개 회 사: 조찬래(충남대통일문제연구소장)
축 사: 장덕기(충남대학교 총장)
- 14 : 20~14 : 35 기조연설: 이병용(민족통일연구원장)
- 14 : 35~16 : 25 제1분과: 한반도의 군사문제와 북한
 - 사 회: 최명상(공군대학 총장)
 - 발 표: 전성훈(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한반도의 핵문제와 군비통제
 - 양병기(청주대 교수)
 - 북한의 전쟁과 평화관
 - 토 론: 손기웅(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수경(충남대 교수)
- 16 : 25~16 : 40 Coffee Break
- 16 : 40~18 : 20 제2분과: 4자회담과 한반도의 평화체제
 - 사 회: 이계희(충남대 교수)
 - 발 표: 제성호(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남북한의 입장과 문제점
 - 김광열(배재대 교수)
 -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 토 론: 김도태(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문홍호(서원대 교수)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國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 95-03 金正日 政權의 向方
- 95-04 南北韓關係 現況 및 '96年 政勢 展望
-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 96-02 탈냉전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문제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
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
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北韓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の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
關聯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值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
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化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 95-07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
-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모색 -
-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 研究
-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10 金正日 體制下의 軍部役割: 持續과 變化
- 95-11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 95-12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
- 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
- 95-13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남북대화 사례를 중심으로
- 95-14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
- 95-15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 95-17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 95-18 北·美關係와 韓·美關係 變化展望
- 95-19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Ⅲ): 「근로자」 해제
- 95-21 탈냉전기 중북한관계 변화 연구

- 95-22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 95-23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 방안
- 95-24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방안
- 95-25 金正日 政權의 對外政策 變化 展望
- 95-26 1995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 96-06 북한의 대 주변4국 군사관계
- 96-07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 96-08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研究
-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췌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的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진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
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
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
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
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日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和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 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大會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 95-07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廢棄의 意味와 評價

- 95-08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 96-01 北韓의 承繼政治 動向: 2·16 生日行事를 中心으로
- 96-02 中國의 對內政策과 對臺灣政策 展望: 제8기 全人大 4차회의 結果分析을 中心으로
- 96-03 北韓의 對美·中政策 懸案과 展望
- 96-04 周邊4國 頂上會談과 韓半島 安保環境
- 96-05 러시아 大選結果 分析
- 96-06 金日成 死後2年: 北韓政勢의 動向 및 展望
- 96-07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과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95-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0. 1 ~ 1995. 12. 31)
96-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1. 1 ~ 1996. 3. 31)
96-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4. 1 ~ 1996. 6.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94-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95-0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5~1996

<論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統一研究論叢 第4卷 1號(1995. 8)

統一研究論叢 第4卷 2號(1995. 12)

統一研究論叢 第5卷 1號(1996. 7)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1995)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3)

한미 WORKSHOP : US-Korean Relations at Time of Change

(1994)

<資 料>

-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 95-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追錄I)
- 95-02 藏書目錄: 特殊資料(追錄I)

<통일문화시리즈>

- 94-01 統一文化研究(上)
- 94-02 統一文化研究(下)
- 95-01 統一과北韓社會文化(上)
- 95-02 統一과北韓社會文化(下)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問題

세미나시리즈 96-02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4726, FAX : 231-4304

印刷處 웃고문화사 전화 : 267-3956

印刷日 1996년 9월 일

發行日 1996년 9월 일
